

Contents

04	권두언
	대전발전연구원의 발전 방향 강대안
07	기획특집 / 도시균형발전방향
09	도시내 지역격차 접근방법 박서호
19	대전시 도시균형발전 방향 박천보
31	대전교육에서의 교육격차 해소방안 김정겸
43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이형복
55	대전시 지역격차 실태와 과제 김홍태
77	정책이슈
79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과 가족지원정책의 방향 주혜진
95	한·미 FTA와 대전경제 임성복
120	오피니언
	중구의 문화도시 육성 방안 이은권
125	대전정책동향
127	도시교통동향 김홍태
128	행정자치동향 정환도
130	대전경제동향 김기희
133	지상토론회
135	충청권 공동발전전략
141	대전소식
142	시정소식
146	시의회소식
153	구청소식
173	연구원소식



Daejeon
Development
Forum

발행처 | 대전발전연구원 발행인 | 육동일 등록번호 | 대전 바01040 등록일자 | 2001년 6월 29일 발행일 | 2007년 5월 31일

주소 | 302-798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대전광역시청 16층) 전화 | 042·471·5620~1 팩스 | 042·471·3615

디자인·인쇄 | 스텝출판인쇄공사 042·624·0924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발전 방향



강대안 / 대전발전연구원 이사·대전개발위원회장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발전 등 시정전반에 대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적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연구원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에 대한 지역의 적절한 대응전략은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밑거름이기에 지역의 싱크탱크인 대전발전연구원의 역할은 대전의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광역시의 행정과 연관된 종합연구원의 성격을 갖다 보니 소수의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전발전연구원은 2006년도에 기본과제 18건, 용역과제 24건, 보조금 수행 과제 4건, 정책과제 7건 등 연구과제 53건과 세미나 25건을 수행했는데, 10명 남짓의 연구원으로 많은 양의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실용적이고 질적인 연구보다는 규정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기에 바빴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원이 설립된 지 만 6년이 지난 지금 양과 질 어느 쪽이 진정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실적물의 양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소수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실천적 연구, 지방행정을 리드하는 선진 연구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구원이 소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천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전광역시의 지역개발정책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판암동을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개발 모델인 '베인보우프로젝트'가 그러하다. 이는 하나의 지역에 모든 집행부서를 연관시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집중적 개발전략이다. 연구과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3천만그루 나무 심기도 마찬가지이다. 역대 전임시장님들도 도심 속에서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나무 심는 일을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현 박성호시장님과 같이 열정과 집중으로 올인하지는 않았다. 같은 나무심기였지만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최대한 달성하는 데에는 연구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전광역시, 시의회,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의 당면과제들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방향을 맞추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위상이 우뚝 솟기를 간절히 바란다.

D a e j e o n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 • • •
기획특집

도시균형발전방향

- 도시내 지역격차 접근방법
박서호 /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 대전시 도시균형발전 방향
박천보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대전교육에서의 교육격차 해소방안
김정겸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이형복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전문위원
- 대전시 지역격차 실태와 과제
김흥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Forum

... 도시내 지역격차 접근방법

박서호 /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도시는 중심지이다. 그 주변은 농촌이라 일컫는다. 중심인 도시와 주변은 농촌은 기능적으로 유기체를 이룬 것을 지역(region)이라고 따로 불러준다. 이 지역에서 보면 도시는 지역의 중심으로 그 둘레인 농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며 도시와 농촌, 중심과 주변은 지역격차의 대명사이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불균형의 구조 속에서 중심은 도시는 주변을 먹고 커왔으며 성장을 노래한다.

그런 도시가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가 문제로 떠오르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격차를 만들면서, 지역격차를 누리면서 커온 도시가 그 안에 지역격차를 키워왔다는 모순이다. 이는 마치 누리에서 후진국을 지배하며 착취하며 먹고 커온 선진국이 나라 안에 지역격차의 몸살을 알아온 것과 같은 대목이다.

1.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

백리쯤 가면 바람이 달라진다. 으레 그러려니 한다.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것처럼 지역은 한결같지 않다,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그 다름이 이념다움(identity)이라는 멋으로 생각하기보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어떤 차별, 파동림으로 여기게 되면서 지역격차, 지역불균형, 지역불균등 등의 지역문제로 여기게 된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여긴 도시에서는 그 부분들은 서로 다름을 통해 연결되어 하나를 이

룬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다름'이라는 지역격차가 '고르지 않다'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문제로 되었다는 점에서 '고르지 않음'이라는 지역격차가 문제로 불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중심과 주변 사이의 지역격차가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은 그것이 구조화 되고 있다는 것처럼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가 문제시 되는 것도 갈수록 심해지고 구조로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도시 밖에서 분화, 곧 중심과 주변의 구조적 지역격차로 커온 도시가 한편 그 안에서 또한 여러 사회공간 단위로 분화됨으로써 커온 도시가 도시 안에서 분화된 사회공간

단위 간에 고르지 않다는 것이 심해지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사회공간적 불균형을 문제가 그것을 문제로 삼을 주체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안의 지역격차를 접근하는 하나의 전체로서 도시는 하나의 지역이니 만치 그간 밝혀온 지역격차의 접근방법에서 얻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도시는 유기체로서 여겨지는 부분 지역 사이에 이제 '고르지 않음'이라는 문제를 갖는 데에는 도시라는 특수성에 그 나름의 까닭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생각에서 이 글은 그 동안 지역격차에 관한 접근방법을 간추려 보고,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를 가져올 까닭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지역격차의 말뜻, 갈래 및 접근 방법

지역격차에서 '격차'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다름'(차이, differences, variation)이다. 이 지역격차는 지역마다 자연적, 사회적 특성 등이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지역분화(areal differentiation)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고르지 않음'으로서 격차(disparity), '불균등'(unevenness), '불균형'(imbalance), '불평등'(inequality, unequal) 등을 뜻한다. 이 지역격차는 사람들의 삶터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사이가 고르지 않는 것으로 그리되는 과정이자 결과요 그리하는 구조를 뜻한다. 이

지역격차는 상대적 빈곤, 결핍, 사회적 배제, 따돌림, 그로부터 오는 비교되는 괴로움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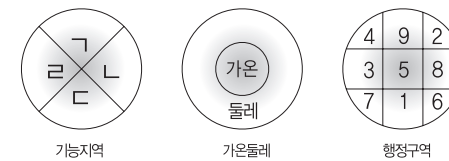
지역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볼 때 지역은 보다 큰 지역의 하위체계이고 그 자체에 또 하위체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든 지역의 안과 밖으로 지역격차는 있는 셈이다. 하여 지역격차를 지역 사이(밖) 격차와 지역 안 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 지역 불균등(지역 격차)의 정도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주민에게도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허석렬, 2002:194).

타날 터이다. 코테스 외(Coates, et. all., 1977)는 모둠살이를 세계(나라), 나라(고장=가온과 둘레), 고을(기초자치제)로 나누고 거기에서 지역격차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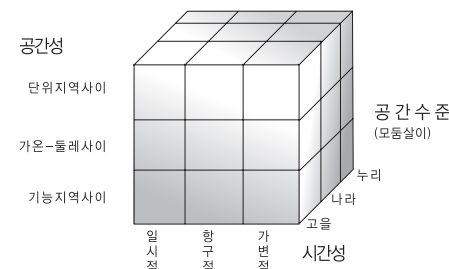
지역을 어떻게 나누든 지역격차는 나타나는 데 지역격차의 공간형태를 크게 갈래하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역격차의 공간적 갈래가 달라진다. 그리하여 지역격차는 기능지역 사이 격차, 가온-둘레(중심-주변) 사이 격차, 그리고 하위 행정구역처럼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갖는 단위지역 사이 격차가 그것이다. 이 세 갈래의 지역격차는 중첩되는데 특히 행정구역의 구획은 기능지역, 가온-둘레의 공간구조 위에 금 그어진 것인 만큼 그들에 나타난 격차들을 덧씌우는 꼴이다.

사회공간단위의 갈래에 각각의 지역경계가 딱 일치하지 않고 부분들이 겹친다. 그때 문제들이 겹쳐지는 것이 많은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으로 다름이 생길 것이니 지역격차는 그로 고르게 되기보다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될 수가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지역격차의 공간형태

지역격차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갈래하자면 일시적인 격차 또는 발전 단계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구조, 산업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것으로 보느냐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구조적인 것에도 다시 굳어진 것으로의 항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가변적인 구조로 보느냐로 나눌 수 있다. 곧 지역격차의 시간성에서는 일시적(균형), 항구적(불균형), 가변성(변증법적 상승) 등으로 갈래함직 하다(그림 2 참조).



〈그림 2〉 지역격차의 시공간적 갈래

이렇게 보면 공간수준에 마다 발견되는 지역격차는 시간적 3 갈래, 공간적 3 갈래를 담고 있다. 그들의 짝짓기에서 기능지역 사이의 격차는 일시적일 수 있다면, 가온-둘레 사이의 격차는 구조화된 것으로 항구적인 것이고, 단위지역 사이는 단위지역의 하기 나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짝에 맞게 그간 지역격차 접근을 대비할 수 있다.

첫째, 일시적 지역격차이다. 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리함 또는 불리한 조건이나 상태(initial status)로 말미암은 지역격차이다. 이런 지역격차는 시간적으로 일시적이며 공간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보는 지역격차의 균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심-주변의 구조의 지역격차이다. 이 지역격차는 어느 지역이 중심 또는 주변으로 되면 중심-주변의 구조(structure)에 따라 지역격차가 지속되고, 이때 주변이 구조적 힘(mechanism)에 의해 강요된 지역격차에 시달린다. 이를 밝힌 접근에서 지역격차의 불균형론, 종속이론, 그리고 자본축적으로서 지역격차(정치경제학적 접근) 등으로 나누어진다.

셋째, 가변적 지역격차이다. 이는 단위지역이 지역성을 만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지역격차라고 할 수 있다. 곧 지역이 단위지역으로서는 것을 뜻하는데 주어진 상태로서 나타난 지역격차 위에서,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씌워지는 구조-강요되는 지역격차에 대응하여 맞섬으로서 변증법적으로 단위지역이 지역격차의 구조화를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

한다. 이를 다루는 것은 국지성 연구 또는 신지리학적 접근이다.

앞서 갈래한 지역격차에 대한 접근방법들의 검토를 통해 지역격차에는 작용하는 세 가지 요인을 뽑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음양적 또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만들어간다.

첫째, 지역이 가지고 유리함 또는 불리한 조건이나 상태(initial status)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지역은 더욱 지역격차를 맞보고, 어느 지역은 지역격차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지역격차가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어떤 시점에서 지역은 지역격차라는 경주에 서로 다른 출발점(initial advantages or disadvantages)의 갖고 있다. 이는 지역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둘째, 지역은 중심-주변의 구조화에 의해 지역격차의 틀 속에 갇히게 된다. 지역 보다 큰 것들이던 그들로부터 지역이 만들어지는 구조(structure), 또는 구조적 힘(mechanism)에 의해 중심 아니면 주변으로 갈래된다. 중심-주변의 구조에는 악순환 또는 호순환이라 일컫는 누적적 인과과정(cumulative causation process)의 힘에 의해 중심-주변이라는 지역격차의 정도가 더욱 강화된다. 이 불균형으로 몰고 가는 틀에 이끄는 요인으로는 자본축적을 위한 가치의 지리적 이전, 지역 간에 부동산교환, 생산양식의 접합, 노동의 공간적 분업 등이 라고 들고 있다.

셋째,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씌워지는 지역격차를 요구하는 구조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지역이 스스로 맞섬으로서 구조를 벗겨가는 변증법적으로 이념됨됨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지역이 단위지역으로 서는 것이요, 그래서 힘(empowerment)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지역은 강요하는 지역격차에 대해 지역이 나름의 대응을 통하여 강요되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거나 새로운 지역격차를 만들어내는 지역정체성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III. 도시내 지역격차

하나의 전체로서 도시는 하나의 지역이니 마치 그간 밝혀온 지역 사이의 지역격차의 접근방법에서 얻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도시는 그 안은 유기체로서 여겨지는 부분 지역 사이에 이제 ‘고르지 않음’이라는 문제를 갖는 데에는 도시라는 특수성에 그 나름의 까닭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첫째, 도시의 토지 및 공간의 생산, 분배, 및 소비과정, 둘째, 도시 안에서 사회공간을 나누는 사회적 배제, 셋째,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를 요구하는 사회공간적 변화에 대한 사회공간적 적응의 게임이론적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1. 도시의 토지 및 공간의 생산, 분배, 및 소비과정

도시는 하나의 전체로서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도시 안은 사회공간 단위로서 쪼개지고

얽혀있다. 도시가 커 갈수록 지역분화를 짊어 간다. 이는 먼저 토지 및 공간의 생산·분배·소비에서 비롯된다. 토지 및 공간의 생산·분배·소비는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를 만드는 터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은 지대소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얻을 수 있는 밑천이 되기 때문이다(김용창, 2006: 71).

토지와 부동산, 그리고 공간은 교환가치의 관점에서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 이면서, 사용가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생산공간으로 기능을 한다. 토지는 구체적인 입지가 되므로 공적으로 공급하는 생활환경자원(교육, 치안 등), 시장공급재, 자연생태환경자원, 편익시설 및 지역 공공재, 기타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고, 지역공공재 및 편익시설의 가치를 자본화(가격설정)시키는 곳이 토지시장을 만든다. 토지시장은 공급자 시장이고, 토지 소유자는 독점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토지공급 스케줄은 다른 상품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시장은 그 성격상 국지적이며, 토지 필지만큼이나 많은 토지시장이 존재한다(김용창, 2006:68). 이런 까닭에 토지시장에 공적 개입이 일어나서 부동산관련조세 및 토지 시장규제를 한다. 그러니 토지 및 부동산의 생산·공급·소비에는 사회경제적 실수요(공간 시장), 수익청구권에 기초한 자산적 수요(자산 시장 및 자본시장), 사회복지적 이해관계, 시장과 계획의 영향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하여 토지는 도시민의 실질소득의 분포, 주거지

분화패턴 및 범위, 경제적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김용창, 2006:65).

도시안의 분화 또는 도시토지이용의 밝힌 연구들은 생태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사회지역분석(Social Area Analysis), 신고전경제적 접근모형(Neo-Classical Economic Approach), 갈등·관리론적 접근방법(Conflict·Management Approach), 및 마르크스적 접근방법(Marxist Analysis of the City)으로 분류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 2004:42-71; 김용창, 2006:68-70). 이들 이론들에서 드러난 도시분화의 주요인자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추릴 수 있다.

생태적 접근방법에서 공간을 둘러싼 경쟁과 그 결과 생기는 공간질서는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는 생태적 질서의 산물로 본다. 토지이용활동 사이에 생태학적 역학에 따라 공간분화가 일어난다. 그에 따른 공간분포 형태는 동심원, 선형, 다핵모형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집단에 따라 분포를 밝힌 사회지역분석(social area analysis)에서는 집단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분포가 다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선형분포를 보이고, 가족의 주기(life cycle)에 따라서는 동심원 분포를 보이고, 인종(ethnicity)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군집 분포함으로써 다핵적 형태를 띤다.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에 따라 도시 계층화(urban stratification)가 이루어지며 이

는 사회적 거리가 도시분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집단들간의 사회적 거리가 커짐에 따라 공간 상의 거리 또한 벌어진다. 일상적 생활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구분짓는 모든 분할적인 측면들이 주거지 분화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김한준, 1989: 131-1320).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은 시장을 통한 경쟁이 토지시장의 균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가정하며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공간구조를 규정한다고 본다. 주거지역의 분포에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교통비와 지대간의 관계가 주거지역의 분포를 결정한다고 했다.

갈등·관리론적 접근방법에서는 도시의 공간구조 또는 기능분화란 사회적 합의(consensus)라기보다는 갈등(conflict)의 산물이며, 강력한 분배 메커니즘이 작용하는데 행위주체로는 가구(개인), 기업(firms), 기관(institute) 또는 시 행정당국이 있다. 이들이 주택과 공공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 데 작용하는 기관수준의 다양한 분배 메커니즘 역시 개발의 과정에서 입지갈등이라는 사회적 긴장을 초래한다. 분배과정에서 집단 간에 사회적 분극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시장에서는 주거공간의 차등적 발전을 유도한다. 한편 도시 안의 분배 메커니즘이 도시의 주요 핵심적 의사결정 관여자들(urban gatekeepers)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 도시의 관리자들은 예컨대 공공주택 경영관리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방 정부 공무원,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협회와 보험회사대표, 시의원, 시장(magistrates) 등으

로 이 다양한 집단들이 의사결정에 대입함으로써 도시 내에서 지역격차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먼저 토지소유자들은 그들의 토지투자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최대한 인상하려고 한다.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을 지배하는 것은 소수 토지 독점집단들의 임대료 고착과 조종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토지 및 공간 생산, 분배, 소비를 통한 이윤추구로 도시 안에는 토지, 부동산 또는 주택시장이 만들어진다. 자본주의 생산체계에 의한 계급관계가 도시주거공간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은 이들 토지 등의 주택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투지근거는 지대소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용창, 2006: 71). 도시에서 토지는 생산부에서 만들어진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차지하는 지주의 몫인 지대를 얻는 것이 되며, 건설자본, 부동산자본 등의 투자대상으로서 토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는 잉여가치를 낳은 상품으로 생산된 것이니 개발의 대상이 되고 그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자본축적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얻고 만들기 위해 토지개발은 사회공간적 차등화된다. 도시 안에서 공간적 격차를 전제하고 만들게 됨으로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를 구조화한다. 그에 따라 생산 및 재생산활동의 자리를 결정하게 되어 토지이용 및 사람들의 도시 안에서 공간 분포가 다르다.

2. 사회적 배제

도시를 하나의 전체로서 지역으로 볼 때, 도시는 개방체계이니 제한적이지면 그 나름의 독자적 사회구성체로 여길 때 도시가 사회적 잉여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에 의해 집단적(계급, 계층 등) 따돌림으로 말미암아 도시 안에 사회공간적 격차가 일어난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서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신명호 외, 2004:). 사회적 배제는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과 개인간, 집단과 집단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의 문제(relational issues)로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사회적 배제의 주체와 대상의 설정 및 그 전개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규정되지만 실제로는 행위자들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행위자)과 사회(구조, 제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해체를 뜻한다. 개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에 의한 개인의 편입(사회화)이라는 쌍방향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방향적 관계로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현상이 사회적 배제인 것이다. 이것이 구조로 굳어져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사회적 배제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단절 또는 왜

곡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사회적 잉여들에서 다중적 결핍(multiple deprivation)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이다. 사회적 연대가 와해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채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와 공간간의 게임이론적 구조

도시 안에서도 지역격차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또는 그리된 지역격차를 느껴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가 지역격차를 더욱 키우기도 하고 한편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은 죄수의 번민(prisoner's dilemma)에서 유출할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사회와 공간으로 나눌 때 도시안팎으로 일어나는 변화 및 도시 안의 지역격차를 강요하는 사회 및 공간적 힘에 대해 사회와 공간 사이에 서로에 대응의 일치 불일치가 도시 안에서 지역격차를 크게도 또는 작게도 할 수 있다. 사회와 공간 사이에는 변증법적 관계, 또는 상호구성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공간은 토지라는 부동산성에 연유한 고착성을 가지고, 입지관성으로 표현되며, 감기상각으로 나타나는 만든 자본의 규모도 크기도 하고, 그만큼 회수기간이 길다. 그러니 사회변화에 곧 바로 적응하려고 공간을 허물수가 없어 사회공간 사이는 시간차(time lag)가 있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서로 간에 적응이

나 변용 곧바로 뒤따르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지역격차를 느낀 도시내에서 문제의 지역에서 발 빠른 사회-공간적 변용을 하는 경우라면 지역격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떤 대응이 없으면 뒤쳐진 상태를 더욱 굳게 하여 지역격차의 구조화를 스스로 불러오는 꼴이 된다. 이와 달리 사회적 변용을 하지만 그에 뒤따라 공간변용이 일지 아니하면 공간은 발전에 올무가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토지와 공간을 새로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 그와 반대의 경우로서 토지와 공간 개발을 이루어 새로운 활동의 터를 마련했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적 변용이 없으면 공간은 버려지므로 회수되지 못할 자본이 되어 오히려 짐이 된다. 이처럼 도시 안에서 사회와 공간 사이에서 게임이론의 올무가 지역격차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더욱 옥죄는 것이 되는 방향기가 구실을 한다(그림 3 참조).

〈표 1〉 사회와 공간 사이의 적응과 변용 갈래

공간 사회	변 용	불변용
적응	I. 발전지역으로 발돋움	II. 발전에 공간이 올무
부적응	III. 공간이 버려진 꼴	IV. 뒤쳐진 상태로 굳어짐

IV. 맺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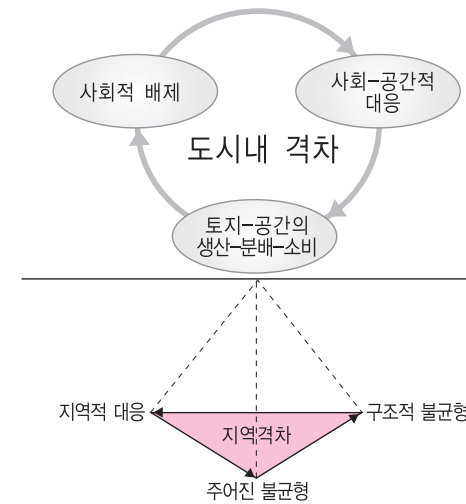
도시내 지역격차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지역격차를 만드는 틀을 내장하고 있다. 도시도 지역의 하나라는 점에서 구조적 동일성

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느 도시의 특수성, 구체적 조건과 힘들(힘들이 작용하면서 도시 안에서 그 나름의 지역격차가 만들어간다.

지역격차는 주어진 지역이 처한 상황은 다른 지역과 비교되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 위에 누적적 인과과정의 구조화의 과정에서 지역격차의 구조가 굳어진다. 그리되게 하는 힘들은 지역 간에 파급효과(또는 여적효과)보다 역류효과가 클 때는 지역격차는 커진다. 또는 중심과 주변사이에서 우위효과, 정보효과, 심리효과, 현대화효과, 연계효과 및 생산효과로 중심은 지배력을 키워간다. 중심과 주변 사이에 부등가교환에 의해 구조화된다. 자본축적을 위해 생산관계의 공간조직화로서 지역격차가 전제 또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런 지역격차의 구조화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그 나름의 정체성, 독자성을 통하여 지역격차의 굴레를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역격차의 굴레 속에서 도시내에서는 지역분화는 그 자체가 이미 주어진 지역격차가 있다. 이 위에 지대소득과 자본이득을 얻고자 벌어지는 토지 및 공간의 생산·분배·소비과정에서 차별된 토지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응하여 지역격차는 만들어진다. 도시 안에서 사회적 잉여를 만들고 나누는 과정과 결과에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면서 지역격차는 현재화되고 공간화 되고 구조화된다. 이에 대응하여 단위지역은 지역격차의 굴레를 벗기 위한 힘을 쓰는 경우(empowerment) 지역은 단위지역으로서 그 나름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구조화된

지역격차를 깨뜨릴 수도 있고, 탑승자가 되어 혜택을 부릴 수도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지역격차와 도시내 지역격차

이런 분으로 대전을 들여다보면 요사이 지역격차는 원도심과 대덕구를 들 수 있다.

그간 원도심은 대전의 초창기부터 중심이라는 선발이익(initial advantages)을 바탕으로 중심-주변의 구조화의 힘입어 주변지역으로부터 지역격차의 원망 없이 중심으로서 자리를 그간 구기하면서 왔었다. 그러나 둔산 신도심의 건설에 따라 대전시정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덩달아 상권의 상실로 위기를 맞자, 지금도 여전이 주변지역에 보면 중심이면서도 둔산 신도심과 견주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격차를 부르짖게 되었다. 그에 대해 시 당국은 2003년 3월 18일자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원도심

의 지역격차를 극복하고 중심으로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원도심은 도시계획에 따라 원래 도심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신도심은 토지 및 공간의 생산이 활발한데 비하여 원도심은 기능의 축소로 공동화가 일어나는 판에 토지 및 공간의 생간을 꿈꿀 수 없고, 있는 토지나 공간의 지대 수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원래 도심에 조성된 공간은 도심기능의 위축으로 텅 비어 가는 처지가 되었다.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라 예견될 수 있는 사회변화임에도 발 빠르게 사회적 적응과 공간적 변용을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속에서 새로이 일고 있는 세계화, 포스트포디즘이라는 생산양식의 출현, 공간적으로 대전시의 외연적 확장, 신도심의 건설 등에 원도심은 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도심은 이런 변화에 올무가 된 셈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원도심은 하나의 단위지역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시정부에 대해 지역격차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는 운동을 폈고 그에 짝하여 조례를 만들으로써 지역격차를 뚫을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대덕구 소외론”을 들고 나오면서 지역격차의 원망을 이야기 하게 된 대덕구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한밭에서 조선시대의 중심인 회덕이 있던 곳이며, 다른 하나는 신탄진이라는 작은 중심지였다. 그런 한 중심지들이 대전시에 편입되면서 공간적으로 주변에 자리하게 되었다. 대덕구의 공간구조가

길쭉한 선형 또는 축형이라 지자체로서의 공간적 통합성, 정체성이 약하게 만들었다. 이것들은 대덕구가 갖는 불리한 선발점이 된다. 한편 이 지역은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업단지가 자리한 곳인데,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변함에 따라 대덕구가 사회공간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공단은 오히려 대덕구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런 것이 쌓여 이제나마 지자체가 되어서 '대덕구 소외론'을 부르짖으며 대전 시정을 향해 지역격차를 따지게 된 것이다.

원도심이나 대덕구는 이제 지역격차를 느끼고 고치고자 하는 지역적 주체가 됨에 따라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갖는 지역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이다. 지역의 주체성은 시 당국에 지역격차를 투정해서 관심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 더욱 지속적인 과제는 지역의 현재 처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조건을 선발점으로 삼고, 현 지역 안의 토지 및 공간에서 얻는 지대(rent)가 사회잉여를 만들어내는 자본축적에 어떤 구실을 하는 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지역의 지대가 자본축적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시 안에서 사회공간적으로 주변적 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이에 따라 안팎으로 부는 변화바람을 사회적 적응 및 공간적 변용을 모색하되, 토지와 공간 생산, 분배 및 소비를 통해 자본이득이 가능성을 찾고 만들어 가야 한다.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강요되는 지역격차의 압력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제약을 뚫고 나갈 지역적 꾀를

찾는 일이다. 이는 음양적 과정 또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걸림돌을 딛고 서는 것이다. 원도심과 대덕구는 시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은 지역의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힘 앞에서 나름의 지역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는 찾아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2003), 지역발전론, 한울.
 김용창(2006), "도시의 토지개발", 김인, 박수진 편(2006), 도시해석, 푸른길: 65-82.
 김한준 외(1989),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한길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2004), 토지이용계획론 개정증보, 보성각.
 박서호(1998), "지역격차의 사회공간관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3호.
 박서호 외(1988), 지역발전론, 녹원출판사.
 허석렬(2000), "지역불균등발전이론의 등장 배경과 응용"; 한국공간환경학회 편(2002),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카넷.
 한국공간환경학회 편(2002),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카넷.
 신명호 외(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Coates, B. E, Johnston, R. J., and Knox, P. L., 1977, Geography and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대전시 도시균형발전 방향 - 도시계획 측면을 중심으로 -

박천보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들어가며

대전시는 일제하인 1905년 경부선 대전역이 개통되면서 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발달되었고, 1912년 목척교 가설로 대전천 서측으로 도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32년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인구나 산업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1949년 대전부에서 대전시로 승격되었고 인구 126,000인의 중도시로 발전하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도심이 폐허가 되면서 1950~1960년대에는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가 재건되었고 현재와 같은 도시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대전시는 1995년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 경부고속철도 개통, 대덕밸리육성, 대덕 R&D특구 선정 등 도시발전의 초석이 되는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대 하천 조성, 3천만 그

루 나무심기, 갑천변 활성화 등을 통해 대전을 첨단과학 뿐만 아니라 녹색의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첨단과학기술, 교통 등의 다기능복합도시로써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의 입지, 1990년대 정부대전청사 이전과 둔산 신시가지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도시의 발전 축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둔산과 유성을 잇는 서북방향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남부 지역과의 개발편차를 나타내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계속된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은 개발가능지 위주로 편중된 도시개발의 산물이며 이에 대한 해결이 시당국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대전역 하부로의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지하철이 완전개통 되어 현재는 동서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의 불균형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는

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남 부권의 대규모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역후면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타 도시 및 주거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도시개발이 대전시의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전시의 도시개발 및 공간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분석하여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측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II. 대전시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1. 토지이용

노령산맥의 서북부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낮은 구릉과 평야, 하천이 넓게 펼쳐진 포근하고 아늑한 지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주변부를 식장산(598m), 구봉산(264m), 보문산(458m), 계족산(429m) 등이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분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전체의 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가 10.0%를 차지하고, 전, 답 등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전체 지목의 16.2%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지목별 토지이용중 임야, 전, 답 등이 감소하고 대지와 도로, 학교용지 등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말 현재 대전광역시내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402.89km²로써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74.65%를 차지하고, 시가화 용도로서는 주거지역이 69.4km²(12.9%), 공업지역이 14.35km²(2.7%), 상업지역이 8.31km²(1.5%)를 각각 차지한다. 특히 녹지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시가화 용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가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추이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전시의 도시기본계획구역 면적 539.73km² 중 개발불능지는 58.45km², 개발억제지는 364.80km², 개발가능지는 116.48km²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미개발지는 23.13km²로 나타났다. 가용토지현황을 구별로 보면 기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26.17km²의 유성구이고 서구 19.97km², 대덕구 18.98km²의 순이었으며, 동구와 중구는 14km²정도로 가장 적게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개발가능지는 유성구가 10.57km²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구, 대덕구의 순이었고 동구와 중구는 각각 1.93km², 0.79km²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형적으로 개발억제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거나 절대면적이 협소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

2. 도시공간구조

대전의 도시공간구조는 1980년대 원도심의 일극체계에서 1990년대 이후 둔산이 신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이극체제로 변모하였고 이후 유

성과 진잠, 신탄진 등 세지역이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발전하고 있다. 대전시 공간구조의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은 자생적으로 생성, 발전하는 중심지 체계에서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적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중심지간의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지역간의 연계발전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도심 3부도심 13지구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지역중심지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지역중심지로 중심지 위계를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2핵 중심의 도시공간체계를 형성하되, 개발위주의 외부지향형을 탈피하고, 내부지향형의 성장관리 도시골격체계를 형성하며 주변연계도시와 연계되는 중심지간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III. 도시개발사업 분석

1. 개발사업현황

대전의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 사업으로는 최근에 수립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서남부생활권 1단계 택지개발사업, 대덕 R&D특구 개발사업 그리고 시 외곽의 도시개발사업(가오지구, 노은4지구, 관저4지구 등) 등이 있다. 각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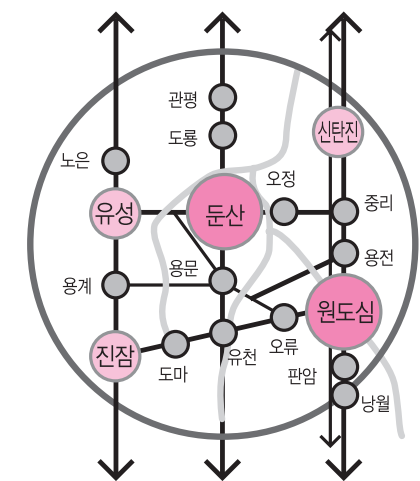


표 1) 대전시 가용토지현황 (단위 : km², %)

구분	개발가능지			총면적
	기개발지	미개발지	소 계	
동 구	14.19 (10.37)	1.93 (1.41)	16.12 (11.78)	136.81 (100.0)
중 구	14.04 (22.65)	0.79 (1.27)	14.83 (23.93)	61.98 (100.0)
서 구	19.97 (20.95)	7.54 (7.91)	27.51 (28.86)	95.34 (100.0)
유성구	26.17 (14.77)	10.57 (5.97)	36.74 (20.74)	177.14 (100.0)
대덕구	18.98 (27.72)	2.30 (3.36)	21.28 (31.08)	68.46 (100.0)
대전시	93.35 (17.30)	23.13 (4.28)	116.48 (21.58)	539.73 (100.0)

1)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대전시는 2006년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부터 도심재개발까지 각종 정비사업의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을 구현하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인 도시정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게 되며,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각 단위사업 개발시 부족한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을 개발밀도에 적합하게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엽적인 재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혼선과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구역선정을 위해서는 주거지역 전역이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면적 9.18km²의 167개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되었는데, 동구, 중구, 서구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63개소, 동구는 57개소로 가장 많으며 면적도 각각 3.17km², 3.44km²로 가장 넓었다. 이에 비하여 서구는 32개소에 1.83km², 유성구는 불과 2곳에 0.05km²의 작은 면적이 지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불량주거지역의 입지와 이를 해소하려는 시차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 서남부생활권 개발사업

서남부권은 대전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유희지로서 21C 광역중심기능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전략적 개발구상을 통한 전원형·친환경·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지향

의 모범적 신도시시스템을 구축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 1. 5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5. 12. 30일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2006년 공사가 착수되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서구 가수원동 외 2개동과 유성구 봉명동 외 6개동 일원의 6,052천m²(183만 평)에 총 사업비 24,177억원을 투자하여 약 6만5천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3단계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3)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32개 법정동을 포함하는 약 2,130만 평(70.2km²)의 광활한 지역을 일컫는다. 이 중 상주인구가 들어오는 주택건설용지는 기성시가지와 인접한 죽동지구에 계획되었으며, 총 2,66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전체 수용인구의 9.1%인 244세대(707인)를 단독주택에 수용하고, 나머지 90.9%에 해당하는 2,422세대(7,024인)를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에 수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즉, 계획세대중 단독:공동의 비율은 택지면적 기준 약 3:7로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을 높게 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역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4) 단위지구개발사업

대전시에서는 2007년 현재 각 단위지구별로 개발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개발지를 확보하여 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있다. 유성구 학하·덕명·복용·계산동 일원에 사업면적 541천 평(1,790천m²)으로 개발되고 있는 학하지구개발사업은 총 2,3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1998. 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이 결정된 이후 2006년에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되었고 향후 주민공람을 거쳐 2010. 12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덕명지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구암동, 갑동 일원의 148천 평(489천m²)을 일컬으며 2010년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998. 1. 4일에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이후 영향평가협의와 실시계획고시가 완료되었고 향후 환지에정지 공람과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관저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원을 일컬으며 사업면적은 126천 평(416천m²)으로 2010년 3월 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996. 6. 25일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사로 지정되었다. 이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거쳐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변경, 환지계획 인가,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보상이 완

료되면 2010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 가오, 판암, 대성동 일원을 개발하는 가오택지개발사업은 총 면적 648천m²/196천 평(주택 5천호, 인구 13천인)에 총 사업비 1,328억 원(용지비 889억 / 조성비 439억)이 투입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3년 2월 25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이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5)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대전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개발과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에 대전지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 사업)예정지구 112만6000평을 선정하였고 역세권지역 26만8000평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였다. 구별로 보면 중구 오룡지구(19만6000평), 동구 신흥지구(19만2000평), 서구 도마변동지구(51만1000평), 대덕구 신탄진지구(12만5000평), 유성구 유성시장지구(10만2000평)등 안배를 위해 1곳씩이 결정된 상태이다. 이중 좀 더 정비가 시급한 신흥, 오룡, 도마, 변동지구의 경우 주거지형으로, 부도심에 해당하는 유성시장과 신탄진 지구는 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들 지역의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¹⁾

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사업지구 당 3000만원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와 10억 원 규모의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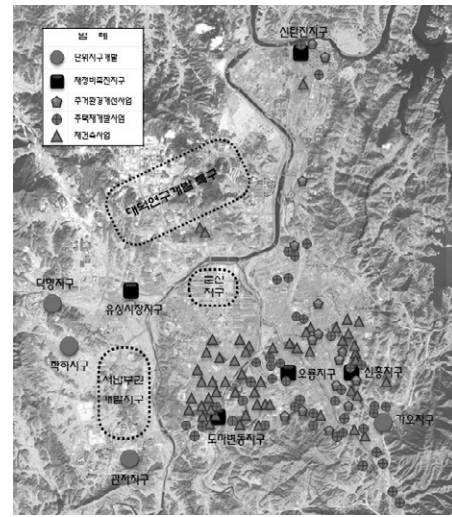
2. 개발의 편중과 변화

1) 개발사업의 편중

대전시에서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고 토지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실행된 택지개발사업은 총 21개소로써 면적은 19,372천㎡(5,859평)이며 사업비는 3,281,571백만 원에 달하였고 총 516,738인을 수용하기 위해 137,021호가 건설되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10,563천㎡로 가장 넓었으며 유성구 4,499천㎡, 대덕구 2,680천㎡를 나타냈고 유입인구도 3개구 합계가 469,060명에 달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휴지가 협소한 동구와 중구의 면적은 각각 1,240천㎡, 390천㎡에 불과하고 인구 또한 47,678명에 지나지 않아 인구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대전시의 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부터 실시되었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사업시행시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3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면적은 30,007천㎡, 사업비는 4,178억 원에 달한다. 대전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지역은 중구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로



〈그림 2〉 대전시 도시개발사업 분포

1960-1970년대를 전후하여 사업이 실시되면서 총 8,562천㎡면적에 745억이 투입되었다. 서구는 면적으로 2위에 해당하는 8,249천㎡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동구 7,054천㎡, 대덕구 3,174천㎡, 유성구 2,968천㎡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시주변의 유휴지가 많았을 30-40년 전에는 중구와 서구, 동구등 도심주변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낙후 지역의 정비를 위해 대전시에서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3,442천㎡에 달하며, 이중 동구는 2,055천㎡로 절대적인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구 873천㎡, 대덕구 354천㎡를 차지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 에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7개소로

〈표 2〉 대전시 도시개발사업의 구별현황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면적(천㎡)	사업비(백만)	면적(천㎡)	사업비(억)	면적(천㎡)	면적(천㎡)	면적(천㎡)
동 구	1,240	141,833	7,054	520	2,055	297	234.7
중 구	390	66,753	8,562	745	873	1,253.7	623.4
서 구	10,563	1,767,930	8,249	1,069	16.6	228.7	627.8
유성구	4,499	914,095	2,968	1,761	142	.	.
대덕구	2,680	390,960	3,174	83	354	94.6	32.8
합 계	19,372	3,281,571	30,007	4,178	3,442	1,874	1,518.9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내용 재정리

써 동구의 삼성동과 중구의 은행동, 유천동 그리고 유성구의 장대동이 해당된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불량주택의 철거후 신축을 목표로 하여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먼저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총 면적 1,874천㎡로서 이중 중구는 1,253.7천㎡로 가장 넓으며 동구는 297천㎡, 서구는 228.7천㎡ 그리고 대덕구는 94.6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재건축은 총 1,518.9천㎡이며 서구가 627.8천㎡로 가장 넓고 중구 623.4천㎡, 동구 234.7천㎡, 대덕구 32.8천㎡의 면적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지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

업은 도심주변의 중구와 동구 위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은 중구, 서구, 동구등 도심주변에서 이루어졌으며 외곽지와 대덕구와 유성에서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개발밀도의 변화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밀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거리(standard distance ; SD)³⁾를 산출하여 밀도중심의 이동방향을 비교하며, 표준편차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림으로써 중심점(gravity center)으로부터 분산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전시 공간확산의 변화분석은 도시의 기능별 중심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⁴⁾

3) 표준편차거리(standard distance : SD)는 비공간적 자료 분석에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지점들이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임.

4) 이 공간확산 방법은 중심점과 표준편차거리 X축에 대한 주축선의 각도, X 표준편차σ(x), 그리고 Y 표준편차σ(y)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2) 이 밖에도 현재 서남부권 1단계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완료되면 향후 대전의 서남부지역인구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와의 편차는 더욱 심화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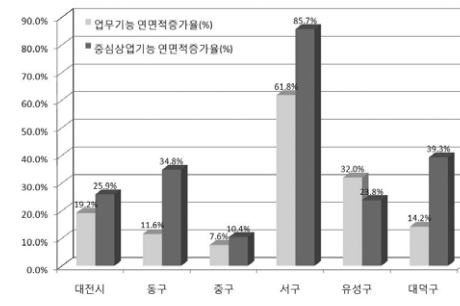
인구를 가중치로 한 인구중심점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인구의 중심점은 1975년의 기점으로 1980년까지는 대흥동이 위치한 동측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1985년을 지나면서 둔산이 위치한 급격하게 북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유성이 있는 북서측으로 중심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개발밀도는 1990년대 들면서 둔산 방향인 북측으로 이동되었고 이후 인구중심성과 유사한 북서방향으로의 이동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도시개발의 방향과 이로 인한 도시외곽으로의 인구확산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밀도를 보면 1985년을 기점으로 1990년에는 북측으로 중심점이 이동하였고 1995년부터는 둔산과 유성의 발전으로 인하여 큰 방향의 변화 없

이 중심점이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개발밀도의 경우도 도심의 쇠퇴이전인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도심의 동측지역으로 중심점이 이동하였으나, 이후 방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역시 북서측으로 개발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방향의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기능의 중요한 구성인자인 업무와 상업의 발전추세를 보면 이러한 기능중심의 이동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03년 까지 대전시 전체의 업무시설 연면적 증가율은 총 19.2% 이었는데 이중 서구는 61.8%로 가장 높았으며, 유성구 32.0%, 대덕구 14.2%, 동구 11.6%, 중구 7.6%를 나타냈다. 이중 중구는 200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를



〈그림 4〉 업무 및 중심상업기능 증가율

보여 원도심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동기간 중심상업시설의 연면적은 서구는 85.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동구 34.8%, 대덕구 39.3%, 유성구 23.8%, 중구 10.4% 로 나타나 둔산지역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IV. 도시균형발전전략

1. 도시균형발전 사업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단위사업을 실시하여 낙후지역의 개선을 통한 신개발지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 원도심 U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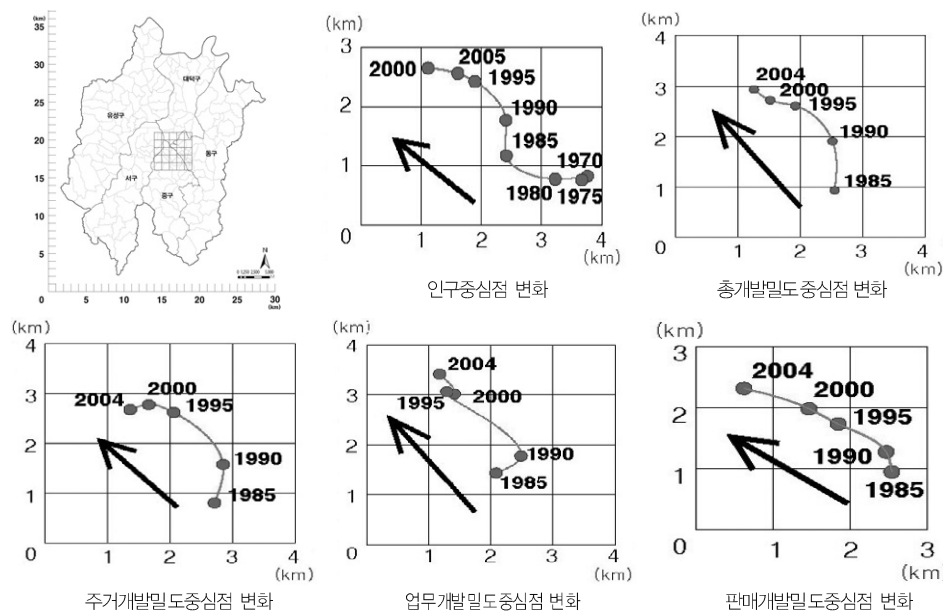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활성화는 대전시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의 과제로써 원도심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원도

심 활성화사업 추진 종합계획이 1998년에 수립된 이후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행 조례는 1907년 말로 종료되며 새로운 조례에는 원도심활성화 및 우리시 균형발전의 의지표명 및 비전제시,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465건의 사업중 289건이 완료되었고, 16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1998~2006까지 총 1조 6,697억 원 (공공투자 1조 833억 원 포함)이 투자되었고 2007에는 118건에 1,2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원도심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과 원도심시범가로조성 설계용역을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원도심으로의 U턴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지개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지역격차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단지중 가장 규모가 큰 동구 관암 3,4단지와 신흥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교육과 학습여건개선, 불우이웃 자활지원확대,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개선, 근린공원 및 생활체육시설확충,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도로 교통시설정비, 지역활력화 사업추진 등 7개 과제, 27개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계획을 일컫는다. 시는 2008년까지 약 180억원이 투입되는 관암동 무지개프로젝



〈그림 3〉 대전시 주요 지표별 중심점 이동 방향

자료 : 대전시 중심지체계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2004 김흥태

트를 사후평가 한 후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무지개 프로젝트 제2단계 사업대상지가 서구 월평2동과 대덕구 법1, 2동으로 확정되었으며, 시는 서구와 대덕구가 제시한 사업내용과 소요재원등을 분석한 후 주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3) 역세권 개발사업

대전광역시에서는 동구 삼성, 소재, 신안, 정동 일원의 268천 평(철도부지/86천 평, 역주변/182천 평)을 역세권지역으로 설정하고 침해된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역세권은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지하철 운행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대비, 난개발 방지 및 철도부지와 통합 연계하는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체 268천 평을 상업, 업무, 주거, 문화시설 등 뉴타운 형태로 개발하여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추진하고 철도기관청사 등의 입지로 철도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현재 역세권 개발방식 등 세부개발계획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서 2006년 7월 철도기관청사가 우선 착공되었으며 2006 하반기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재정비 절차가 이행되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가 2005. 12월에 개통되고 2007년 4월

의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과 더불어 대전역 주변의 개발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4)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본 계획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구의 대학가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선도하고 민·관·학이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도시환경정비 모델을 만드는 목적을 갖고 실행되고 있다. 사업위치는 동구 가양·자양·용운동 일대의 대학주변이며 2007 ~ 2010년 까지 총7,300백만 원이 투자 될 예정인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 입지 추진, 주제와 이야기거리가 있는 대학로 조성 및 공공시설 정비, 정보마당, 문화정보센터, 이벤트 공간 창출, 대학주변 공공·학교·재단부지 특성화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등 이다.

2006. 8.29 대학로 개발구상이 제안된 이후 세부추진방침이 결정되었고 2007. 1.29일 계획방향설정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이 착수된 상태로서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시범사업 확정과 선도사업추진을 통해 캠퍼스타운 조성을 가시화 할 예정이다.

2. 도시균형발전 전략

1) 도시개발의 단계별 추진

상기에서 언급한 서남부생활권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

단위지구개발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 등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적정성 및 시기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서남부생활권 개발,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시기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정

2006년 12월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수는 10여 개소가 되며, 20여개는 추진위 구성 등 계획단계에 있어 공동주택에 의한 도시내 주거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재정비와 함께 단계별 개발의 구분 변경이 필요하다.

즉,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적합성을 검토한 후 반영하고 미진행사업은 전면 재조정하며 현재 2010년까지 계획된 단계별 계획을 상기 사업지의 재선정과 연계하여 단기(2010년까지), 중기(2011년~2020년), 장기(2021년 이후)로 구분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3)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지향적 도시개발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므로 이를 탈피하여 성장관리형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개발지에 대

한 도시개발과 보전, 정비 등 중심지 및 지역별 성장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외곽에 있는 농경지 및 녹지의 절대적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관리를 위해서는 도심정비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거점지별 고밀고층화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신규개발지는 최대한 억제하여 저밀저층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생활권별 개발전략 수립

대전의 부도심의 하나인 신탄진지역은 2천년대 중부권 산업발전의 중핵지로서 현재의 공업 및 첨단산업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수산물 등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며 계족산등의 도시자연공원이 보존 될 수 있도록 생활권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부도심인 유성은 첨단연구, 위락, 국제종합관광지로 개발하며 연구·교육·주거기능이 조화된 대덕R&D특구와 서남부권개발을 통해 청정유성을 대표하는 전원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진잠지역은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 및 친환경적 전원주거지역으로 서남부권의 전원적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도심인 둔산지역은 행정업무와 금융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에 따른 복합시가지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송촌지역은 21세기 고도정보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심상업, 업무, 위락교통, 정보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끝으로 보문지역은 문화, 물류·유통 등 한밭의 상업, 문

화의 심장부로 개발하며 특히 도심재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고도화와 보문산 전면부의 저밀주거지개발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활권이 구분되어야 한다.

V. 끝맺으며

본고에서는 대전시의 도시개발 및 공간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분석하여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지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개발가능지 분포를 감안 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므로 기타지역의 균형개발과 인구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주로 낙후정도가 심한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서구와 유성구지역도 개발된 지 20-30년이 지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대전의 동남권은 지형적인 입지 여건이 불리하여 개발이 미흡하므로 고속철도역사 주변 및 도시철도 정거장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인구와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고 동남부권의 개발가능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기존 도시계획에서 정립된 서남부방향의 단일개발축은 둔산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동남권, 서남권, 북부권이 균등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사형의 개발축으로 발전시켜 균형적 도시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시의 생활권별로 주기능과 특성화전략을 설정하고 거점지역별로 이에 상응하는 토지이용 및 주요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도시의 균형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대전광역시(2005),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 김홍태(2004), 대전시 중심지체계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김홍태(2007), 대전 도시확산과 공간구조의 변화특성, 대전 Urban Renaissance Workshop.
- 대전광역시(2007), www.daejeon.go.kr 홈페이지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2005), 서구비전 2020.
- 대전광역시(2006), 대전광역시 통계연보.
- 대전광역시(2006),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 대전광역시(2000),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 정태일(2007),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대전 Urban Renaissance Workshop.

●● 대전교육에서의 교육격차 해소방안

김정겸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을 지식 기반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상황 주도적이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기능 측면에서 학교교육은 교육을 통해 선조들이 일궈낸 문화 유산을 전수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민주시민 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즉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상적으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습자 자신의 문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더 나아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

는 사회체제와도 관련이 있다(김경근, 2006; 김희수, 2003).

현재 우리사회는 소득 격차로 인하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여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6년을 '교육양극화 해소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간, 소득계층간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확대, 전문대학생 근로장학 확대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대안교육 활성화, 성인 문해교육 지원, 병원 학교 설치, 장애학생 교육지원, 새터민 자녀 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보의 격차

해소를 위해 u-러닝 시범단지 조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의 업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소득 계층간에 교육격차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지역간, 소득계층간에 존재하는 교육격차 현상은 우리 대전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90년대 초반 서구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행정, 경제와 문화 등의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임선희·김경희, 2006). 이에 대전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대전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간에 발생하는 극심한 교육격차는 교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과 다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때로는 경제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성열관·하기봉, 2006). 따라서 이러한 교육격차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학습 성과와 관련된 좁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전지역의 지역 간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대전교육에서의 교육격차 현황

교육격차는 개인의 지적 능력,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지역, 제도적 요인, 학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간, 집단간의 차이를 의미한다(서남수, 2006). 이렇듯 교육격차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 및 학교 내의 요인 뿐 아니라 사회체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의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하지만, 정보접근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료를 중심으로 편의상 행정자치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지는 단순히 개인이 살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 편의시설, 사회서비스 시설과 같은 사회적 자원에 접근을 결정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교육은 거주지 분화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김경근, 2005; 손준중, 2004). 그리하여 교육 격차를 분석함에 있어 거주지의 객관적인 교육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1.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회경제적 요인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으며, 가정의 책 보유 권수가 많거나 가족 간에 문화활동 기회가 많으면 성적이 높다.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생활 수준은 교육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경제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교육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 5개 구청별 재정자립도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임선희·김경희, 2006).

〈표 1〉 대전광역시 구별 재정자립도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일반회계 총계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전체인원	수급자	수급율
동 구	142,781	9,680	24,088	23.7%	231,923	11,622	5.01
중 구	118,058	13,547	18,353	27.0%	255,565	9,070	3.55
서 구	157,571	26,962	32,868	38.0%	508,388	8,473	1.67
유성구	107,785	20,524	27,011	44.1%	221,206	3,530	1.60
대덕구	103,000	12,910	15,656	27.7%	221,469	7,408	3.34

주: 재정자립도는 통계청(2005년 : <http://kosis.nso.go.kr/>)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단위는 백만원임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청(2004년 : <http://kosis.nso.go.kr/>)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단위는 명임.

대전시 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유성구의 경우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의 경우 38%이며, 대덕구의 경우 27.7%, 중구 27.0%이었으며, 동구가 23.7%로 가장 낮았다. 유성구는 동구에 비해 약 2배 가량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를 보면, 유성구의 경우가 1.6%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의 경우 1.67%이었으며, 대덕구의 경우 3.347%, 중

구가 3.55%이었으며, 동구가 5.01%로 가장 높았다. 유성구 및 서구는 동구 지역에 비해 약 3 배가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 교육기관 및 학생수 현황

지역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및 학생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전광역시 구별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교 수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사립	계	사립	계	사립	계	사립
동 구	35	24	20	0	12	4	5	3
중 구	35	25	26	1	14	8	10	8
서 구	77	56	37	1	29	4	15	6
유성구	41	19	27	0	17	1	13	4
대덕구	36	26	20	0	12	2	4	1
전 체	224	150	130	2	84	19	47	2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유치원은 서구가 77개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41개원), 대덕구(36개원), 동구(35개원), 중구(35개원) 순이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서구가 3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27개교), 중구(26개교), 동구(20개교), 대덕구(20개교) 순이었다. 중등의 경우를 보면, 중학교는 서구 29개교, 유성구 17개교, 중구 14

개교, 동구 12개교, 대덕구 12개교 순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구 15개교, 유성구 13개교, 중구 10개교, 동구 5개교, 대덕구 4개교로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학교가 많았다.

학생수를 나타내는 <표 3>에 의하면, 서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유성구, 중구, 대덕구, 동구 순이었다.

<표 3> 대전광역시 구별 유치원, 초·중등학교 재학생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동 구	2,683	1,275	15,934	7,544	7,920	3,066	5,671	2,346
중 구	3,692	1,734	21,180	9,973	10,454	5,675	10,756	4,778
서 구	7,909	3,801	45,593	21,508	27,268	12,879	16,191	8,505
유성구	3,717	1,869	23,848	11,366	11,157	5,313	8,968	4,043
대덕구	3,345	1,556	21,046	10,001	10,743	4,888	3,840	2,007
전 체	21,346	10,235	127,601	60,392	67,542	31,821	45,426	21,67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3. 학습 환경

학급당 학생수는 해당 학교급의 총 재적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누어 준 값으로서,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적정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의 구별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모두에 있어서 서구 소재 학교가 가장 많았다. 교원

<표 4> 대전광역시 구별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구	30.8	33.7	33.4	23.0	18.9	16.2
중 구	31.8	35.9	33.7	24.0	20.3	16.3
서 구	34.0	36.9	35.2	26.8	21.5	17.0
유성구	32.6	34.3	33.0	25.0	18.8	15.3
대덕구	32.2	35.3	34.9	24.3	20.5	13.6
평 균	32.3	35.2	33.8	24.7	19.9	16.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 또한 서구 지역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경력 년수와 연령을 살펴본 다음의 <표 5>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사의 평균 경력 년수는 서구와 유성구가 높으며, 중학교의 경우 중구와 대덕구 소재 효율적인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사무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학교의 사무직원의 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사무직원 1인당 교사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대덕구와 서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우는 서구와 대덕구가 높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구와 동구가 가장 높았다. 의 학교 교사들이 높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구와 서구에 소재한 학교 교사들의 경력 년수가 많았다. 교사의 연령은 교사의 경력 년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 대전광역시 구별 교원의 평균 경력년수 및 연령 (단위: 세)

구분	교사의 평균 경력년수			교사의 평균 연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구	14.0	13.9	15.4	37.1	38.5	40.6
중 구	14.5	17.6	18.0	37.4	42.0	43.1
서 구	15.7	14.2	17.0	38.6	38.6	41.6
유성구	15.1	12.7	16.7	38.0	37.2	41.0
대덕구	13.8	15.3	13.3	36.6	39.6	38.2
평 균	14.8	14.6	16.8	37.8	39.1	4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효율적인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사무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학교의 사무직원의 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사무직원 1인당 교사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대덕구와 서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우는 서구와 대덕구가 높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구와 동구가 가장 높았다.

컴퓨터는 학교교육을 실천하는데 매우 유용한 교수매체의 하나이다.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 7차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의 컴퓨터 보유는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대전시의 구별 컴퓨터 1대상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유성구와 서구가 높았으며, 중학교의 경우 대덕구와 서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구가 가장 높았다.

〈표 6〉 대전광역시 구별 사무직원 1인당 교원수 및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사무직원 1인당 교원수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구	7.2	9.5	11.7	166.0	180.0	189.0
중 구	7.2	9.6	10.7	172.2	193.6	173.5
서 구	8.1	10.4	12.2	216.1	223.5	207.6
유성구	6.9	9.3	6.6	172.8	174.3	100.8
대덕구	8.4	10.7	12.8	204.3	219.2	174.6
평 균	7.4	9.7	10.3	181.8	192.6	167.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표 7〉 대전광역시 구별 컴퓨터 1대당 학생수 (단위 : 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구	6.2	6.4	6.1
중 구	6.2	6.3	6.4
서 구	7.5	6.9	6.1
유성구	7.6	5.6	5.9
대덕구	6.9	7.3	5.0
평 균	6.9	6.5	5.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건물 면적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유성구가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 서구 순이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유성구가 가장 넓었

다. 또한 체육장 면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성구가 가장 넓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유성구가 가장 넓었다.

〈표 8〉 대전광역시 구별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및 체육장 면적 (단위 : m²)

구분	학생 1인당 건물면적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구	9.4	9.8	10.8	12.4	15.0	11.0
중 구	9.5	9.0	8.8	9.5	12.2	11.7
서 구	7.2	8.5	9.6	5.3	7.7	8.9
유성구	9.6	12.3	15.8	8.0	11.8	18.5
대덕구	7.5	7.9	11.5	8.2	7.8	10.9
평 균	8.9	9.9	11.3	8.8	11.7	12.5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DB시스템

4. 사교육 현황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사교육은 대부분 입시와 학교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택하는 학교외의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숙달과 보충학습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의 경우는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시 구·청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서구와 유성구가 동구, 대덕구, 중구에 비해 높았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9〉 대전광역시 구별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비 지출현황

구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지출현황
동 구	72.7%	181,000원
중 구	82.8%	275,000원
서 구	91.3%	356,000원
유성구	90.3%	276,000원
대덕구	80.7%	239,000원
전 체	82.8%	277,000원

자료 : 김영노(2007), 대전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III. 대전교육에서의 교육격차 원인

유치원, 초·중등 교육과정의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개인의 능력이나 처해진 현실에 따라 교육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여건에 해당하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의 경력 연수,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사무직원 1인 교사 및 학생수, 건물 및 체육장 면적 등에 있어서 5개 구·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구·청별 재정자립도는 유성구와 서구가 동구에 비해 높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유성구와 서구가 동구에 비해 적었으며, 사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지출도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대전지역에서 존재하는 교육 격차의 원인은 학교 외적 환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열, 부모의 학력 및 소득 수준, 지역 사회의 환경 등은 학교 내의 교육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격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즉, 교육격차 발생 이유를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하여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IV. 교육격차 해소 방안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내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계 내외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계 내에서의 노력

첫째, 지역별로 교육여건을 균등화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교육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요구되는 교육여건은 교육 결과에 직접적이고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때문에 더 나은 교육적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교육 여건을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더 많은 교육시설 설비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결과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맞춤형 교육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 전개과정에서 보면, 학습 내용이 심화되어 집에 따라 학생들 간에 차이가 심화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학생들이 점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선수 학습의 결핍에 대한 보완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되는 후행

학습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능력의 차이 고려한 학습활동, 즉, 학습자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위 학습 목표의 도달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처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교과서 수준의 학습을 끝내고도 시간과 노력의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심화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로 단위 학습 목표 달성에 곤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해서는 보충학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한 대책을 요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도달목표 수준의 학습 내용을 숙달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은 현재보다 좀 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과서 외의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수-학습기자재 보급, 학내망 설치 등 교실수업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수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구애없이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수 매체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와 함께 교과 교사들 간의 교육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 뿐 아니라 학교 교육 외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있어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교육 여건으로 볼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몇 개 학교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방과 후 학교의 우수 강사확보를 위해서는 교과교육연구회 및 강사풀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학부모나 기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클리닉 및 진로지도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학습 방법은 매우 다르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학습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학습자들이 학습 전략을 익혀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다면 학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단순히 교과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전략 전문가에 의한 학습전략에 대한 지도 조언이 요구된다. 아울러 학교생활, 진로 및 진학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 및 진학 상담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상담활동은 학업 및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관계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로 교육기관의 균등한 배치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질 관리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대전 교육에 있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특수 목적의 중등학교 설립시 지역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전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 질 관리 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전교육 현황 및 교육결과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분석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면한 교육문제 분석 뿐 아니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미래 교육여건을 반영한 과학적인 대전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

첫째, 지역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은 교육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들의 가정교육 여건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규 수업 외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학습센터를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설치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약화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의 문제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갈 수 있는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학습도시 건설이 요구된다. 학습 활동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지식 습득과정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있어 공유 면적의 확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은 교실 내외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학습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주민자치 단체와 연계하여 독서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

어 친구는 물론 선후배 간에 의사교류의 장을 갖게 되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연구소-공공기관 등 지역 물적,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체험학습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요일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학습 활동으로 1)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과학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 대전지방기상청, 지질박물관, 화폐박물관, 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체험하는 과학체험활동, 2)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을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양현서당, 뿌리공원 등을 체험하는 전통문화 체험학습활동,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풍부한 경험획득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애착심을 고착시키기 위해 대전시청, 법원, 경찰청, 공주도예촌 등을 체험하는 지역문화체험 학습활동, 4) 자신의 건강상태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밭수목원, 산림박물관, 운동 및 건강체조 등을 체험하는 건강체험 학습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전광역시 차원의 학교 교육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서 더 나아가 지역이나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습자를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김경근(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6(1), 27-49.

김영노(2007), 대전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교육연구소.

김희수(2003), 가정의 과정환경과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관계.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손순중(2004), 교육공간으로서의 강남읽기. 교육사회학, 14(3).

임선희·김경희(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6(3), 185-206.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DB 시스템.

Daejeon Development Forum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하여 -

이형복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전문위원

1. 서론

197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전국토적으로는 불균형 발전을 불러왔다. 급격한 도시화로 탄생한 많은 도시들은 경제적 혜택을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규모가 급진적으로 팽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시의 성장·확대시대에 등장한 신도시개발은 구도심 또는 원도심으로 불리는 전통적 기성시가지와의 생활격차를 불러왔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교육·문화, 산업·경제, 소비활동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격차를 불러와 각종 사회문제들까지 야기시켰다.

즉, 기능위주의 외형적인 도시성장은 도시로 몰려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외면한채, 도시구조적으로 기형적인 모습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지방의 대도시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맞추어 도시규모가 팽창되다보니 미래의 도시수

요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비단 우리모습만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시화가 진전되었으며 도시정책은 도시에 집중하는 산업과 인구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외곽에서의 장시간 통근, 만성적인 교통정체, 도심 내 녹지 부족 등의 각종 도시문제들이 산적해 갈 뿐만 아니라 1992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는 국가적으로도 정보화, 저출산과 고령화, 국제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정세 변화에 대응이 뒤쳐지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역시 대두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인식하에 당면한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21세기 사회경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외부로의 도시 확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기성시가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

취,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을 추진 중에 있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경우도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도시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심각한 구도심의 도시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쇠퇴해가고 있는 구도심을 전략적으로 재창조하여 인천을 품격 높은 세계일류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 것이다.

본 글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현황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살펴보고,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시책의 개선방향을 고찰해본다.

II. 인천시 도시균형발전 전략 - “도시재생” 개요

1. 도시재생의 정의 및 필요성

2000년 이후 인천시도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서의 성공적 비전 달성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전략이 요구되었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써 도시개발의 새로운 개념인 도시재생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도시개발의 개념인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에 보다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투자와 사람을 끌어들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업무·상업·관광기능의 강화 등을 공공부문의

계획에 의해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을 정리하면 첫째, 최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이 강하게 요구되어 졌다. 연수와 계양일대의 신시가지와 항만일대, 경인전철 주변, 경인고속도로 주변과 같이 1980년 이전에 시가화된 지역간에는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문화·재정·중심기능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인한 신개발지와 구도심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재창조하여 신·구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도시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한계점에 봉착되었다. 구도심에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개별적·국지적 개발은 사업성 위주의 고밀개발, 기반시설 부족, 주변과의 단절, 도시경관 왜곡 등의 난개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밀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보다 광역적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셋째,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송

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구도심과 산업공단으로 인해 회색, 공해도시의 이미지를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품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일류의 고품격 도시로 부상시킬 수 있는 구도심의 전략적 재창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2.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중심지 형성, 관광자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도시경관 삶의 질을 동시 충족하는 세계일류의 고품격 도시 창조 등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던 국지적 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시 전체의 균형과 도시경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창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국지적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기반시설과 인구수용능력, 주변지역과의 조화, 도시전체의 기능적 보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둘째, 구도심 안에서 기반시설, 주거, 상업기능, 시민활동센터, 녹지 등의 조화로운 배치와 지역상징물 설치, 거점별 테마설정 등 지역특색을 창출하여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공간구조를 재편



〈그림 1〉 인천시 도시이미지 전환

하고,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업그레이드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공급과 도시의 쾌적성, 경관개선, 집객을 위한 도시개발을 주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주도의 계획수립이다. 넷째, 지구지

정과 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길을 보다 폭 넓게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1〉 기존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비교

기존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국지적 재개발 • 민간 수익성 위주 사업 • 주택재개발 위주 ⇒ 난개발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을 광역적·체계적·종합적으로 재창조 • 주변과의 연계 및 조화 고려 •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적 재개발 • 공공부문 역할 증대 •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 • 구도심지역의 전면적 재창조

3. 도시재생 추진전략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역세권, 주요 간선도로 교차지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여 개발 후 전 지역을 확산 유도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거점선정은 과거에는 활발한 활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침체되었거나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과 고유자원의 특성과 잠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향후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개발의 확산은 크게 3단계로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단기적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우선 실시와 파급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핵심지역(거점) 우선 실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1차핵심지역의 기능회복과 함께 각 핵심지

역의 기능 연계와 도로 또는 전철축을 통한 주요거점간의 기능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장기적 거점에서 인천시 전역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추진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공공부문 주도의 계획과 민간부문 창의성 및 자본의 적극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특징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지구지정, 계획수립 시 주민공람·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민·관합작에 의한 공동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다양한 민자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4.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1거점(인천항) 2축(경인고속도로축, 경인전철 축)을 중심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24개 거점을 선정, 이중 12개 앵커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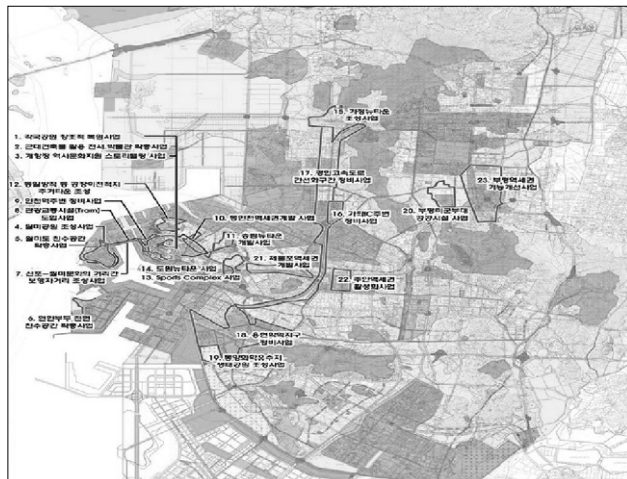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부문 전략적 유치 가능대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질서한 도심 정비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과 복합기능의 입체도시를 건설하여 24-7도시(하루 24시간, 1주일 내

내 살아 움직이는 공간)로 재탄생시키는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도시마케팅 부분도 고려하여 세련된 건물, 매력적인 장소, 구미당기는 쇼핑기회, 화려한 이벤트 활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주거기능을 재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건설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을 가능한 배제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존 개발사례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인천시 도시재생 앵커사업 현황

사업명	규모 (천㎡)	총사업비 (민자포함/억원)	사업기간	개발방향
계	12개사업	128,590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972	15,805	2004~2013	입체복합도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7.4km	7,657	2004~2010	친환경 도로건설
경인고속도로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	3,936	48,401	2008~2013	지역별테마·거점
가좌C 주변 도시재생사업	676	8,035	2005~2010	입체복합도시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90	4,685	2005~2013	스포츠·주·상복합
도화(인천대부지) 도시개발사업	881	8,114	2006~2012	교육,문화,주거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944	21,783	2005~2013	입체복합도시
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440	4,898	2004~2013	입체복합도시
동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296	7,660	2005~2013	입체복합도시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68	277	2005~2011	역사유적 복원
관광전차 도입사업	9.6km	860	2006~2011	관광네트워크
신포-월미문화의거리 상징보행축 조성	2.9km	415	2005~2011	문화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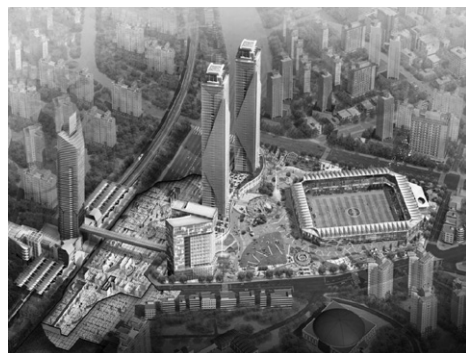


〈그림 2〉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총괄도



- 인천대 이전부지개발 등과 연계한 개발로 구도심 활성화 도모
- 민간 창의력 및 투자유치를 통한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역세권 조성
- 주거·상업·업무·전문학원 등 복합기능 도입
- 규모 : 996,770m²
- 사업기간 : 2005년~2013년
- 사업방식 : 재정비촉진사업 등
- 재원계획 : 21,783억원

〈그림 3〉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 체육·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기능이 도입된 웰빙 타운 조성
- 도원 뉴타운, 제물포역세권 등의 개발사업 연계
-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설로 구도심의 랜드마크도시 실현
- 규모 : 90,127m²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 사업주체 :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림 4〉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III.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시책

1. 관련법령 및 조례

대규모 개발을 수반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제정의 배경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인천시 및 대전시를 포함하는 광역시급 대도시에서의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의 빠른 격차 특히 기성시가지의 인구 및 경제력의 공동화 현상과 불량주거지의 기성시가지에 집중되는 현상 등의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불균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소규모 단위의 국지적 사업마다 독자적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개별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광역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주거환경개선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도촉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

비가 필요한 주거지형 지구와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필요한 중심지형 지구로 구분되는 재정비촉진지구, ②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들,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사업, ④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등을 담고 있다.

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05-07-25 조례 제 3831호)

2007년 3월 현재 균형발전을 내용으로 담고 제정되어 있는 행정조례는 2005년 7월에 제정된 인천시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4개광역시·도가 제정하고 있다(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5-10 조례 제4087호,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007-01-01 조례 제3469호,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007-03-30 조례 제3252호).

각 시·도가 제정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은 4개 광역시·도가 모두 담고 있으나, 균형발전사업의 지정대상지

역, 지정심의, 사업지정의 우선순위, 사업시행 방식 규정하는 사업지정은 인천과 부산만이 담고 있으며,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광주만 용적을 완화 받을 담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적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점으로는 부산과 광주는 공공기관 및 시설분산·배치 등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표 3〉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광역시·도의 조례 주요내용

조례 내용	도 시	인 천	부 산	광 주	충 남
1. 목적 및 정의		○	○	○	○
2. 균형발전 기본계획		○	○	○	○
3. 균형발전위원회		○	○	○	○
4. 사업지정		○	○	-	-
5. 사업지원		○	○	△	○
6. 공공기관 및 시설분산·배치 등		-	○	○	-

〈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

구 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목 적	· 기성시가지에 대한 광역정비 사업지원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지방세 감면 - 총괄계획가, 재정비위원회 등	· 균형발전 도시재생사업 지원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지방세 감세 등
지 구 유 형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20만㎡이상 - 주거지형50만㎡이상	·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 - 도시재생사업 - 군·구균형발전사업 -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사 업 시 행 방 식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 시장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
절 차	· 지구지정 ▶ 계획수립	· 지구지정 ▶ 계획수립 ▶ 구역지정
위 원 회	· 도시재정비위원회(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기구)	· 도시균형발전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권 없음)
해 사 업	·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 가좌C 주변 도시재생사업 · 인천·동인천·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 ·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 도화(인천대 이전부지)도시개발사업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5년 7월 25일 인천시 조례 제3831호로 제정된 전국 최초의 균형발전지원 조례이다. 제정을 위한 초기행정단계부터 법적 근거의 뜨거운 논란은 있었으나, 인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침체된 구도심 재생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행정조례로서 과감히 제정되었다.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5장 26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수립과 사업지구지정 : 기본계획의 수립, 시책방향, 사업지구지정, 지정대상지역 및 지역기준,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지구지정 심의, 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등, 지정의 실효, 사업시행방식, 사업시행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은 1. 기성시가지의 미래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주거, 상업, 업무, 관광과 숙박 등 복합적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는 사업지역과 역세권 개발 지역 2. 수변 및 녹지 공간의 활용 또는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보존·복원 등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3. 기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업지원 등 :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재원의 확보, 행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회의, 소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제반사항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다.

2. 사업지원과 자원조달

대규모 개발을 수반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공공부문 계획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게 되므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축법 제11조제3항과, 시행령 제14조의 내용인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다른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 완화가 가장 큰 내용이다.

또한 동법 제19조, 시행령 제20조의 내용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부여 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 역세권, 상업지역 등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인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 완화로서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비율 축소를 들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90%→80%이상, 주택재개발사업 : 80%→60%이상)

또한 지방세 등의 감면(감면대상 : 취득세, 등록세, 감면건축물 : 문화시설, 종합병원, 학원시설, 대규모점포, 회사본점 등)을 통해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정해진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7조 제4호의 기금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할 수 있다는 금융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이외 특별회계, 기금(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재원확보의 폭을 넓혀 놓았다.

IV.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구도심재생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인센티브의 제공은 개발사업을 일으키고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첫째,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도입을 적

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섹터 방식은 신뢰도가 높은 사업추진 주체 형성이 가능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이 결합되어 민간자본의 금융참여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SPC에 우량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부문이 단독 추진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시키므로 사업추진의 원활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 수익성이다. 복합개발의 경우 일본과 같이 도시계획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용적률 등 수익성 제고요인에 대한 탄력적인 배려를 고려해 볼만 하다. 그리고 외부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하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선택과 집종의 원칙설정이다.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기피하게 되므로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단계별로 사업성과를 감안하면서 선택과 집종의 원칙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금융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고 우량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7조에서는 기금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할 수 있다는 금융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의 주 운영부서가 아니고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은 실효성 부문에서 크게 논의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조례제정 이후 단 1건의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도시균형에 관한 특별회계나 기금 마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인정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사업인 경우, 무이자용자도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V. 결론

최근 국내외 대도시에서 도시관리의 초점은 신개발이 아닌 기성시가지의 관리에 두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 및 대전광역시도 과거 도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성시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계획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균형발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시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한 행정조례(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2003.3.1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2005.7.25)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서울의 뉴타운사업과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지방중소도시는 재정비

주축법의 제정에 의해 각종 규제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축법이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균형발전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민·관 합작에 의한 공동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새로운 사업방식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에 민간투자를 촉진 시키고 있는데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된 43개지역 6,424ha에 민간투자 12조엔을 약정하였고, 이것에 의한 경제효과는 약 23조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사업착수가 완료된 민간투자 금액만 3조엔으로 경제효과는 6조엔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에게 민간투자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에서 나타났듯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의 작성단계에 있어서부터 시민참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얻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법마련과 더불어 행정이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정보공개·정보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시민제안, 도시균형발전정보센터를 설치하거나, NPO 등이 시민에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정보제공과 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시균형발전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과 성공적 민자유치가 절대적이며, 사업의 진행 속에서 행정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진행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기간단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균형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 시키고,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 기반시설의 공급과 주거 및 업무여건 개선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인천광역시(2005),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

인천과학아카데미(2006),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이형복(200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전략, 「도시문제」 제40권 43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인천광역시(2007), 동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6), 「도시정보-도시재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No. 28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특별시(200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井熊均など(2001) 都市再生プロジェクトを読む!、オ-エス出版社.

●●● 대전시 지역격차 실태와 과제

김흥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

I. 서론

최근 지역간의 격차심화로 국가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도시내 지역격차 문제는 도시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내 지역격차는 도시발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기존 시가지와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도시내 지역격차의 문제는 인접지역과의 주거·문화·교육·환경의 격차는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시키게 되고, 부동산 등 주민의 자산 가치 또한 지역격차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내 지역격차 문제해소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전뿐만 아

니라 서울¹⁾, 부산²⁾, 인천³⁾, 대구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는 2000년대 들어 시청이 둔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둔산 지역이 대전의 새로운 신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둔산은 행정·업무, 금융 등 고차서비스기능이 집중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는 일명 ‘둔산 블랙홀’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기존 시가지에서는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신탄진 등 부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민선 자치시대가 성숙되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는 자치구들은 나름대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득 수준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도시발전 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생력을 확보

1)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조례제정을 통해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시구를 지정하여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부산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하였고, 현재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3)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대구시는 현재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시내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은 도시관리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한 도시내 지역격차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전시 도시성장을 개관한 후, 구별 격차실태 분석과 지역격차 및 균형발전 주민의식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지역격차의 요인과 유형

1. 지역격차의 의의 및 요인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격차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와 이를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들로 분류된다.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격차를 지역간 소득격차의 의미로 받아들여 1인당 주민소득의 차이를 비롯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성장과 소득격차를 설명하고 있다⁵⁾. 반면 지역격차를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은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시킨 지역격차의 개념들이 정치·사회·행정적 요인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⁶⁾, 지역격

차의 개념을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인간의 복지, 삶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란 지역간에 경제적인 측면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교육 등의 비화폐적인 요인까지를 포함한 생활의 질적 차이까지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역격차의 유형

대도시내 지역격차의 경우 도시발전과정에서 유발되는 신도시개발의 영향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존시가지의 상대적인 낙후가 보다 더 보편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상대적인 낙후가 자연적인 도시팽창과정에서 계획적인 도시정책 부재가 지역격차를 가속화시켰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도시내 지역격차는 도시의 성장과정과 발전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범주 측면에서도 지역격차의 유형은 다양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지역격차의 유형⁷⁾은 장기균형 상태에 이르러서도 존재하는 '정상적 격차', 장기균형에 이르는 과정에 존재하는 '조정적 격차', 정책수단 변수의 조작이 최적하지 못해서 생기는 '정책적 격차', 격차,

5) 허재원, "지역격차의 동태적 패턴과 그 가설 검증", 「국토계획」, 24(2) 1989 : 황명찬,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간 소득격차의 Simulation 분석", 「국토계획」, 8(20), 1973 : 홍기용, 「지역경제론」, 서울 : 박영사, 1994.
6) 김상호, "지역성장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경향의 고찰 및 평가", 「전북행정학보」, 1988 : 박희봉 · 이희창, "지역격차 현황과 정책", 「정책과학연구」, 2002, 12 : 196-197.
7) 이종규, "지역격차와 균형발전", 도시행정 특강 자료(<http://www.sdirekr/~jg/ee/disparity.ppt>), 2004.

생산수단 등의 이동성 편향에 의해 생기는 '구조적 격차'로 지역격차의 유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므로, 도시내 지역격차의 분석은 시간과 공간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III. 대전시 도시성장과 지역격차 실태

1. 대전시 도시성장 개요

대전시는 1963년 제1차 시역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1962년 268,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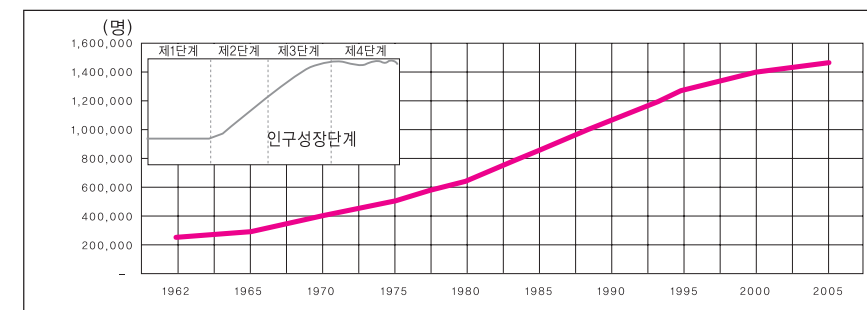
명이던 도시인구가 43년이 지난 2005년 현재 1,454,638명으로 무려 5.4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0.3%로 가히 급속한 인구성장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의 인구성장을 시기별로 보면, 1980년대까지는 연평균 4~6%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초 3%대를 보이다가 1995년 이후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인구성장 단계로 볼 때, 대전은 제3단계를 지나 제4단계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대전광역시 인구성장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62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인구	268,806	307,412	406,488	506,703	651,642	866,695	1,062,084	1,268,432	1,390,510	1,454,638
시기	'62-'65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95-'00	'00-'05	'62-'05
연평균증가율	4.8	6.4	4.9	5.7	6.6	4.5	3.9	1.9	0.9	10.3



〈그림 1〉 대전광역시 인구성장 단계도

대전시의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도시개발 사업 변화는 〈표 2〉와 같다. 1970년대 38.5%, 1980년대 28.2%로 1980년 이전이 전체의

70.6%가 25년 이상이 지나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 도시개발사업 변화추이 (단위 : 개, 천명, %)

구 분	196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계
건 수	3	16	16	16	12	64
면 적	710	6,957	5,086	4,135	1,163	18,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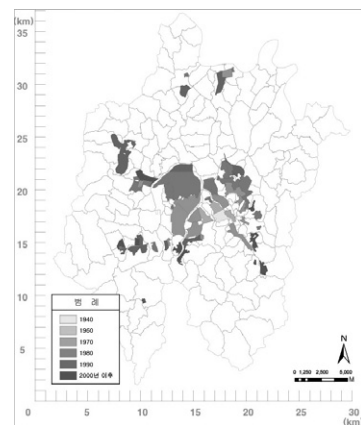
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를 포함하였음

도시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발전해온 공동주택 건설 추이는 〈표 3〉과 같다. 1970년대 이전 1.4%, 1980년대 13.6%, 1990년대 63.3%, 2000년 이후 21.7%로 나타나, 비교적 노후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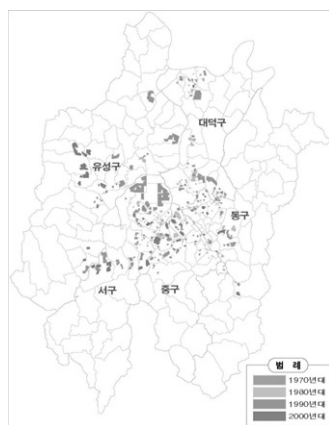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1980년대 이전의 공동주택은 약 15%로 현재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표 3〉 공동주택 건설 추이 변화 (단위 : 개, 호, %)

구 분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계
공동주택수	26	165	225	91	507
동 수	94	763	1,563	673	3,093
세 대 수	3,333	32,751	152,366	52,188	240,638
세대수 비중	1.4	13.6	63.3	21.7	100.0



〈그림 3〉 도시개발사업 변화 추이도



〈그림 4〉 공동주택 건설 추이도

2. 대전시의 지역격차 실태

1) 분석개요

도시내 지역격차 실태 분석은 인구특성, 교육환경, 의료환경, 문화환경, 재정, 시가화 및 상업, 그리고 주거부문 등 7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2005년을 기준으로 변화추이와 분석은 구별 실태분석과 종합적으로 대전시의 지역격차 실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지표에 대하여 변이계수⁸⁾와 지니계수⁹⁾를 산정하였다.

2) 인구특성부문

도시의 성장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인구증가율을 보면, 2000년 이후 유성구 9.04%, 서구 1.00%, 동구-1.07%, 대덕구-1.01%, 중구-0.21%로 유성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령화 지수는 사회의 노령화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30을 넘으면 고령인구 사회로 분류된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사회복지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구별로는 동구가 2000년 36.3%, 2006년 59.1%, 중구 2000년 34.9%, 2006년 52.0%로 기존 도심지역은 2000년 이후 이미 고령인구 사회로 진입하였고, 대덕구 2006년 31.3%로 고령인구 사회로 진입하여 서구, 유성구와의 연령별 인구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세대당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 순인구밀도 변화 (단위 : 명, 세대, 명/세대, 명/㎢, %)

구 분	인 구	세 대	세대당 인구수	순인구 밀 도	노령화 지수 ¹⁰⁾	연평균 인구증가율		
						1989-2006	2000-2006	
동 구	2000	252,684	84,380	3.0	23,613	36.3	-1.31	-1.07
	2006	236,504	89,385	2.6	21,261	59.1		
중 구	2000	267,014	86,291	3.1	24,588	34.9	-0.91	-0.21
	2006	263,592	95,790	2.8	24,010	52.0		
서 구	2000	476,893	146,097	3.3	32,989	19.6	3.52	1.00
	2006	505,600	172,661	2.9	31,930	29.8		
유성구	2000	157,638	50,576	3.1	9,029	18.7	11.96	9.04
	2006	243,130	86,092	2.8	11,810	24.0		
대덕구	2000	231,377	71,968	3.2	17,519	18.4	0.23	-1.01
	2006	217,332	74,111	2.9	15,269	31.3		

주: 외국인 인구수 및 세대수 제외
자료: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8)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어떤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그 변수의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분포가 완전 평등일 때 변이계수는 0이 되고, 이 변이계수가 크면 클수록 지역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이계수는 장기에 걸친 지역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적 방법을 사용하여 변화배턴을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9) 지니계수는 완전균등선에 의해 이루어진 정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의 응답자의 집중치의 비율로 표현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기수적 성격을 갖지만 상대적인 평균격차로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서수적 성질도 함께 지닌다.

10) 노령화 지수는 14세 이하 인구대비 65세 이상인구 비율임(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3) 교육환경부문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 약 37명 수준에서 2005 약 31명 수준으로 6명이 낮아졌고,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00년 29명 수준에서 2005년 24명 수준으로 5명

이 낮아져, 공교육 부문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는 신시가지 일수록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당 학생수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단위 : 명, 개)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교원인당 학생수	
동 구	2000	20	529	18,974	35.9	667	28.4
	2005	20	517	15,394	29.8	692	22.2
중 구	2000	24	592	21,594	36.5	746	28.9
	2005	26	666	21,180	31.8	884	24.0
서 구	2000	32	1,219	47,863	39.3	1,481	32.3
	2005	36	1,343	45,593	33.9	1,701	26.8
유성구	2000	18	493	18,447	37.4	623	29.6
	2005	27	731	23,848	32.6	953	25.0
대덕구	2000	19	582	22,049	37.9	736	30.0
	2005	20	653	21,046	32.2	866	24.3

자료 : 대전광역시 각 구, 통계연보, 2001, 2006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2000년 약 41명 수준에서 2005 약 34명 수준으로 7명이 낮아졌고,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00년 18명 수준에서 2005년 16명 수준으로 2명이 낮아져, 공교육 부문은 전반적으로 개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시가지 일수록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당 학생수

구 분	학교수	학급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교원인당 학생수	
동 구	2000	4	138	5,634	40.8	291	19.4
	2005	5	170	5,671	33.4	351	16.2
중 구	2000	10	309	12,829	41.5	657	19.5
	2005	14	458	15,249	33.3	969	15.7
서 구	2000	11	333	13,905	41.8	702	19.8
	2005	15	460	16,191	35.2	953	17.0
유성구	2000	9	195	7,378	37.8	419	17.6
	2005	13	272	8,968	33.0	587	15.3
대덕구	2000	3	95	3,821	40.2	211	18.1
	2005	3	98	3,477	35.5	208	16.7

자료 : 대전광역시 각 구, 통계연보, 2001, 2006

4) 의료환경부문

만인당 병상수는 2000년에는 중구가 149병상으로 가장 높았고, 서구는 31.6병상으로 가장 낮았다. 2005년에는 중구 150병상으로 높은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최근 대규모 신주거단지가 들어선 유성구의 경우 만인당 23.1병상으로 구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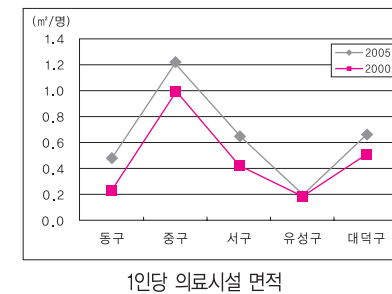
만인당 의사수로 2000년에는 중구가 42.8명으로 가장 높았고, 동구는 만인당 7.5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중구가 역시 40.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구에 신규아파트단지가 공급되면서 인구유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구는 10.6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구와 인접하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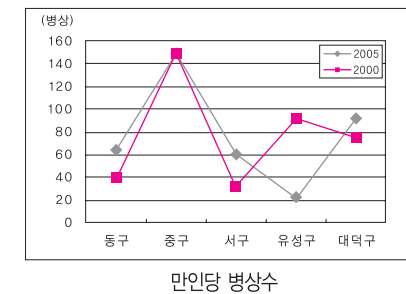
〈표 7〉 구별 의료시설 변화

구 분		의료시설		병상수	만인당 병상수	의사수	만인당 의사수	치과 의사수	만 인 당 치과의사수
		면적	1인당						
동 구	2000	55,566	0.220	989	39.1	191	7.5	53	2.1
	2005	112,269	0.478	1,513	64.5	248	10.6	54	2.3
중 구	2000	265,378	0.994	3,978	149.0	1,136	42.8	74	2.8
	2005	325,713	1.222	4,000	150.0	1,074	40.3	92	3.5
서 구	2000	198,213	0.416	1,509	31.6	679	14.2	138	2.9
	2005	328,840	0.646	3,079	60.5	1,196	23.5	197	3.9
유성구	2000	28,259	0.179	1,453	91.2	142	8.9	32	2.0
	2005	43,285	0.196	509	23.1	264	12.0	58	2.6
대덕구	2000	117,996	0.510	1,726	74.3	217	9.3	43	1.9
	2005	148,166	0.664	2,064	92.4	284	12.7	5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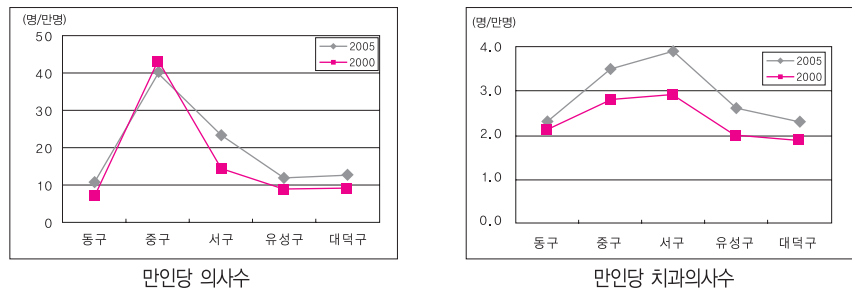
주 : 의사는 한의사 포함 의사수임
자료 : 대전광역시 각 구, 통계연보, 2001, 2006



1인당 의료시설 면적



만인당 병상수



〈그림 4〉 의료시설 현황

5) 문화환경부문

최근 문화에 대한 욕구는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문화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수는 동구가 2000년 1개소에서 2005년 2개소로, 대덕구는 2000년 3개소에서 2005년 4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유성구의 경우 2000년 6개소에서 2005년 6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인당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의 경우, 유성구가 2000년 1.30㎡, 2005년 1.3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서구는 2000년 0.46㎡, 2005년 0.73㎡로 유성구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 영화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향유의 다양성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표 8〉 문화 및 전시시설

(단위 : 개소, ㎡, m²/명)

구 분	연도	공연장수			영화관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소계	공공 공연장 ¹⁾	민간 공연장		소계	미술관	화랑	소계	복지 회관	청소년 시설 ²⁾	면적	1인당
동 구	2000	1	1	-	3	-	-	-	1	-	1	150,627	0.60
	2005	2	-	2	-	2	-	2	1	-	1	197,047	0.84
중 구	2000	7	-	7	6	13	1	12	-	-	-	196,110	0.73
	2005	9	5	4	4	14	-	14	-	-	-	254,501	0.95
서 구	2000	6	1	5	4	6	1	5	1	-	1	220,899	0.46
	2005	6	3	3	5	7	2	5	1	-	1	372,198	0.73
유성구	2000	6	3	3	1	4	-	4	-	-	-	205,297	1.30
	2005	6	4	2	3	7	2	5	-	-	-	307,018	1.39
대덕구	2000	3	-	3	-	1	-	1	1	-	1	109,603	0.47
	2005	4	3	1	-	1	-	1	1	-	1	149,251	0.67

주 : 1) 2004년 종합공연장은 공공공연장으로, 일반공연장과 소공연장은 통합하여 민간공연장으로 명칭 변경

2)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합한 수치임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01, 2006

6) 재정부문

대전시의 구별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가 가장 높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47.3%에서 2005년 44.1%로 다소 감소하였다. 동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도 대체적으로 2000년보다 낮아져 각 구의 재정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0년의 경우 유성구가 511,139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동구는 197,476원으로 가장 적었다. 2005년에도 역시 유성구 882,433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는 280,399원으로 가장 적어, 가장 높은 유성구와 가장 낮은 동구와의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및 세출액

(단위 : % 천원, 원, 백만원)

구 분	연도	재정자립도	지방세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세대당 지방세	세출액	1인당 세출액
동 구	2000	28.9	49,899,518	197,476	591,361	111,044	439,458
	2005	23.7	65,816,492	280,399	755,738	155,410	662,097
중 구	2000	45.1	95,891,560	359,125	1,111,257	79,002	295,872
	2005	27.0	108,747,903	407,853	1,144,619	132,550	497,122
서 구	2000	41.1	163,646,671	343,152	1,120,123	100,782	211,330
	2005	38.0	246,464,900	484,000	1,442,000	176,036	345,694
유성구	2000	47.3	73,498,231	511,139	1,621,532	70,585	447,766
	2005	44.1	194,812,105	882,433	2,490,566	132,464	600,017
대덕구	2000	38.9	79,151,136	340,879	1,099,810	67,616	292,233
	2005	27.7	1,00,952,143	452,118	1,357,504	125,354	560,399

자료 : 대전광역시 각 구, 「통계연보」, 2001, 2006,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7) 시가화 및 상업부문

2000년 구별 1인당 시가화면적은 유성구가 117.34㎡로 가장 높았고, 서구는 41.94㎡로 가장 낮았다. 2005년에는 역시 유성구가 98.07㎡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구는 42.56㎡로 가장 낮아, 이 지역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고차기능을 수용하는 1인

당 상업지역은 2000년에는 유성구가 13.97㎡로 가장 높고, 대덕구는 1.86㎡로 가장 낮았다. 2005년의 경우 유성구 12.53㎡, 대덕구 1.94㎡로 나타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성지역의 유성관광특구라는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1인당 시가화 및 용도지역별 면적

구 분	인 구	1인당					1인당 녹지지역
		시가화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동 구	2000	252,348	52.95	48.00	4.05	0.90	424.05
	2005	234,256	59.89	54.43	4.49	0.97	453.47
중 구	2000	267,700	52.88	45.96	6.92	0.00	157.78
	2005	266,537	53.66	46.71	6.95	0.00	157.29
서 구	2000	476,192	41.94	37.36	4.32	0.26	111.11
	2005	507,295	42.56	37.95	4.36	0.24	101.09
유성구	2000	159,285	117.34	74.67	13.97	28.70	993.88
	2005	220,767	98.07	65.19	12.53	20.35	704.52
대덕구	2000	232,197	85.38	40.68	1.86	42.84	209.54
	2005	223,287	91.80	47.29	1.94	42.58	214.62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1, 2006

2000년 구별 1인당 쇼핑시설은 서구 1.50㎡, 중구 0.91㎡, 대덕구가 0.71㎡로, 동구 0.56㎡, 그리고 유성구가 0.36㎡로 서구와 중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서구 1.66㎡, 중구 1.43㎡, 대덕구가 0.85㎡로, 동구 0.76㎡, 그리고 유성구가 0.61㎡로 서구

와 중구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간 편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다만, 고급 쇼핑시설인 백화점은 중구와 서구에 편중되어 있고, 대덕구 북부지역에 위치한 신탄진 부도심은 고급쇼핑 서비스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11〉 구별 쇼핑시설

구 분	연도	총 계		인당		할인점		일반시장		백화점		대형점		인정시장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동 구	2000	23	0.14	0.56	-	-	22	133,436	-	-	1	8,758	-	-	-	-
	2005	17	0.18	0.76	2	64,086	14	111,773	-	-	-	-	1	3,053	-	-
중 구	2000	23	0.24	0.91	-	-	19	107,637	3	95,266	1	40,581	-	-	-	-
	2005	21	0.38	1.43	2	79,380	13	130,360	3	137,257	-	-	3	33,524	-	-
서 구	2000	35	0.72	1.50	-	-	30	373,173	3	249,325	2	94,742	-	-	-	-
	2005	42	0.84	1.66	5	228,534	2	46,286	2	214,578	32	350,994	1	3,616	-	-
유성구	2000	5	0.06	0.36	-	-	4	56,933	-	-	-	-	-	-	-	-
	2005	4	0.13	0.61	2	91,023	-	-	-	-	2	43,119	-	-	-	-
대덕구	2000	14	0.16	0.71	-	-	13	157,904	-	-	1	6,196	-	-	-	-
	2005	16	0.19	0.85	1	6,196	-	-	-	-	11	131,712	4	23,839	-	-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2006, 대전광역시 각 구, 「통계연보, 2001

8) 주거환경부문

2000년 구별 노후 공동주택 비율은 중구 6.59%, 동구 5.26%, 대덕구 1.45%, 유성구 0.64%, 그리고 서구가 0.35% 순으로 구간의 편차가 약 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동구 16.31%, 중구 13.20%, 대덕구 4.26%, 서구 2.11%, 그리고 유성구가 0.89%로 구간 편차는 2000년 보다 더욱 커져 약 15% 수준까지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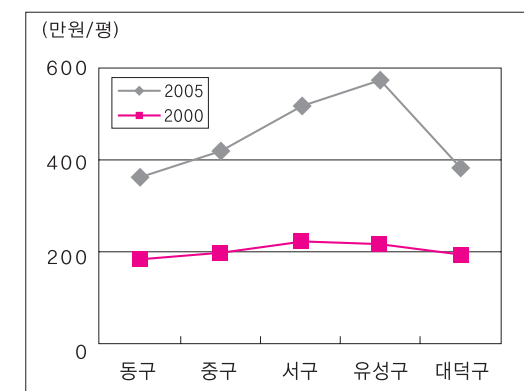
가정경제에서 중요한 부동산 자산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서구가 평당 223만원, 유성구 216원, 중구 198만원, 대덕구 195만원, 그리고 동구가 184만원으로 나타나 구간 편차는 심하지 않았으나, 2005년의 경우 유성구가 평당 574만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다음으로 서구 516만원, 중구 421만원, 대덕구 383만원, 그리고 동구 364만원으로 구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노후 공동주택

구 분	연도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	노후 공동 주택비율	
동 구	2000	23,006	1,210	5.26	184
	2005	27,386	4,467	16.31	364
중 구	2000	29,701	1,957	6.59	198
	2005	39,610	5,227	13.20	421
서 구	2000	85,069	296	0.35	223
	2005	96,124	2,029	2.11	516
유성구	2000	27,367	174	0.64	216
	2005	41,862	372	0.89	574
대덕구	2000	33,952	492	1.45	195
	2005	34,883	1,487	4.26	383

자료 : 대전광역시, 건축과 내부자료, 서정신(2001), 「도시내 지역격차 분석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B 국민은행 KB 아파트시세(<http://www.kbsstar.com/>)



〈그림 5〉 아파트 가격 변화도

9) 대전시 지역격차 분석 종합

대전시의 구별 주요지표에 대한 지니계수와 변이계수를 산정한 결과 지역격차가 가장 심한 부문은 인구증가율로 지니계수가 1989~2005년간 연평균 증가율 0.473, 2000~2005년간 연평균 증가율 0.484로 나타났고, 변이계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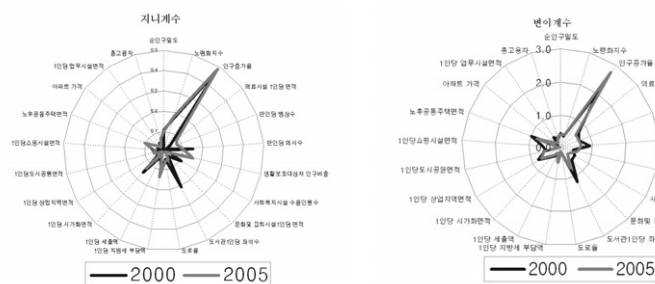
같은 기간동안 2.046과 2,755로 역시 지역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비교적 지니계수와 변이계수가 높은 지표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시가화 면적과 노후공동주택 부문에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대전시 지니계수와 변이계수 측정 결과

주요 지표	지니계수		변이계수	
	2000	2005	2000	2005
순인구밀도	0.103	0.093	0.413	0.376
노령화지수	0.162	0.171	0.358	0.391
인구증가율	0.473	0.484	2.046	2.755
의료시설 1인당 면적	0.041	0.082	0.704	0.585
만인당 병상수	0.013	0.073	0.612	0.604
만인당 의사수	0.147	0.097	0.901	0.633
생활보호대상자 인구비중	0.015	0.155	0.390	0.523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수	0.100	0.004	0.510	0.356
문화및 집회시설1인당 면적	0.035	0.009	0.490	0.312
도서관인당 좌석수	0.205	0.051	1.200	0.699
도로율	0.043	0.054	0.110	0.118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100	0.131	0.317	0.452
1인당 세출액	0.034	0.015	0.305	0.226
1인당 시가화면적	0.148	0.125	0.443	0.353
1인당 상업지역면적	0.034	0.006	0.753	0.666
1인당도시공원면적	0.035	0.053	0.459	0.510
1인당쇼핑시설면적	0.025	0.048	0.540	0.048
노후공동주택면적	0.031	0.103	0.976	0.761
아파트 가격	0.016	0.034	0.079	0.199
1인당 업무시설면적	0.044	0.023	0.385	0.182
총고용자	0.001	0.060	0.236	0.317

주: 인구증가율 (2000년은 1989~200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고, 2000년은 2000~200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함)



IV. 대전시 지역격차 및 균형발전 주민의식조사 분석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대전지역 내 지역거주민이 지역격차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하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20개 중생활권, 7개 농촌생활권을 고려하여 각 생활

권별 인구비례에 따라 임의 할당하였으며, 조사가원이 설문지를 배포한 후 스스로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면접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50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통계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총1,49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4〉 조사대상 및 표본수

구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표본수(명)	1,497	245	223	417	378	234
비율(%)	100.0	16.4	14.9	27.9	25.3	15.6

2. 지역발전 여건

1) 거주 만족도

시민들이 대전에서 거주 및 정주에 대한 만족도는 살기 좋음 58.0%, 매우 살기 좋음 7.7%

로 전체의 65.7%가 현재의 거주 및 정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69.0%로 나타났고, 다른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거주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살기 좋음	살기 좋음	보통	살기 좋지 않음	매우 살기 좋지 않음	계
대전시	116(7.7)	868(58.0)	418(27.9)	72(4.8)	23(1.6)	1,497(100.0)
동구	19(7.8)	141(57.6)	63(25.7)	13(5.3)	9(3.6)	245(100.0)
중구	23(10.3)	131(58.7)	55(24.7)	8(3.6)	6(2.7)	223(100.0)
서구	26(6.2)	246(59.0)	123(29.5)	17(4.1)	5(1.2)	417(100.0)
유성구	32(8.5)	215(56.9)	106(28.0)	22(5.8)	3(0.8)	378(100.0)
대덕구	16(6.8)	135(57.7)	71(30.3)	12(5.2)	-	234(100.0)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아짐’ 59.0%, ‘현재와 변함없음’ 31.0%, ‘나빠짐’ 4.9%, 그리고 ‘매우 좋아짐’ 4.3% 순으로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가 전체의 63.3%로 시민들은 대전이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는 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향후 발전 가능성

(단위 : 명, %)

구 분	매우 좋아짐	좋아짐	현재와 변함없음	나빠짐	매우 나빠짐	무응답	합 계
대전시	64(4.3)	883(59.0)	464(31.0)	74(4.9)	11(0.7)	1(0.1)	1,497(100.0)
동 구	8(3.3)	134(54.7)	81(33.1)	15(6.1)	7(2.8)	-	245(100.0)
중 구	10(4.5)	142(63.7)	58(26.0)	12(5.4)	1(0.4)	-	223(100.0)
서 구	13(3.1)	274(65.7)	113(27.1)	15(3.6)	2(0.5)	-	417(100.0)
유성구	24(6.3)	200(52.9)	129(34.1)	24(6.3)	-	1(0.4)	378(100.0)
대덕구	9(3.8)	133(56.8)	83(35.5)	8(3.4)	1(0.5)	-	234(100.0)

지역간의 격차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전시민의 현재 생활 만족도는 보통 54.8%, 만족 22.8%, 불만족 18.9%, 매우 불만족 2.3% 순으로 보통 이하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

활은 만족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구별로는 서구가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덕구와 동구에서는 불만족 비중이 만족보다 높아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현재 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 계
대전시	9(0.7)	342(22.8)	821(54.8)	283(18.9)	35(2.3)	7(0.5)	1,497(100.0)
동 구	1(0.4)	40(16.3)	112(45.7)	77(31.4)	10(4.1)	5(2.1)	245(100.0)
중 구	2(0.9)	42(18.8)	135(60.5)	41(18.4)	3(1.4)	-	223(100.0)
서 구	3(0.7)	130(31.2)	236(56.6)	42(10.1)	4(1.0)	2(0.4)	417(100.0)
유성구	3(0.8)	102(27.0)	221(58.5)	50(13.2)	2(0.5)	-	378(100.0)
대덕구	-	28(12.0)	117(50.0)	73(31.2)	16(6.8)	-	234(100.0)

대전시에서 가장 낙후된 구에 대해서는 동구 63.9%, 대덕구 19.5%, 중구 8.6%로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대전에서 동구지역 가장 낙

후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동구는 타구 주민들이 느끼는 비중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표 18〉 가장 낙후된 구

(단위 : 명, %)

구 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무응답	합 계
대전시	957(63.9)	128(8.6)	19(1.3)	76(5.1)	292(19.5)	25(1.6)	1,497(100.0)
동 구	203(82.9)	13(5.3)	1(0.4)	2(0.8)	12(4.9)	14(5.7)	245(100.0)
중 구	147(65.9)	56(25.1)	1(0.4)	-	19(8.6)	-	223(100.0)
서 구	300(71.9)	23(5.5)	9(2.2)	11(2.6)	73(17.5)	1(0.3)	417(100.0)
유성구	225(59.5)	27(7.1)	8(2.2)	61(16.1)	47(12.4)	10(2.7)	378(100.0)
대덕구	82(35.0)	9(3.8)	-	2(0.9)	141(60.3)	-	23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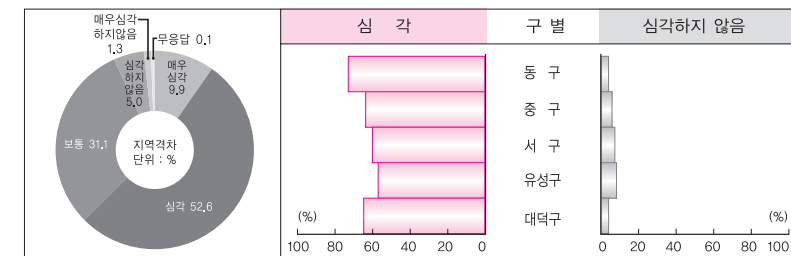
구간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심각 52.6%, 보통 31.1%, 매우 심각 9.9%, 심각하지 않음 5.0%로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가 약 62.5%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역격차에 대해서 심각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동구, 대덕구, 중구지역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동구의 경우는 73.1%가 지역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19〉 대전시구간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심각하지 않음	매우 심각하지 않음	무응답	합 계
대전시	148(9.9)	787(52.6)	465(31.1)	75(5.0)	21(1.3)	1(0.1)	1,497(100.0)
동 구	38(15.5)	141(57.6)	56(22.9)	5(2.0)	5(2.0)	-	245(100.0)
중 구	14(6.3)	127(57.0)	69(30.9)	10(4.5)	3(1.3)	-	223(100.0)
서 구	27(6.5)	220(52.8)	138(33.1)	23(5.5)	9(2.1)	-	417(100.0)
유성구	31(8.2)	185(48.9)	129(34.1)	30(7.9)	2(0.5)	1(0.4)	378(100.0)
대덕구	38(16.2)	114(48.7)	73(31.2)	7(3.0)	2(0.9)	-	234(100.0)



구간 지역격차의 발생 원인으로는 주거환경 불균형 18.2%,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15.6%, 교육환경 불균형 15.1%, 개발사업 편중 11.1%, 지역별 사회계층 분포 9.2%, 그리고 경기침체 8.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의 열악,

재정 불균형, 교육환경 등이 지역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차지구별로는 약간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역시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재정 불균형, 교육환경 등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구간 지역격차 발생 원인

(단위 : 명, %)

구 분	대전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제도미흡	53(3.5)	8(3.3)	7(3.1)	12(2.9)	17(4.5)	9(3.9)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233(15.6)	30(12.2)	36(16.1)	73(17.5)	41(10.8)	53(22.6)
민간 자구노력 부족	19(1.3)	5(2.0)	1(0.4)	5(1.2)	4(1.1)	4(1.7)
경기침체	130(8.7)	27(11.0)	10(4.5)	33(7.9)	50(13.2)	10(4.3)
주거환경 불균형	272(18.2)	57(23.3)	46(20.6)	73(17.5)	56(14.8)	40(17.1)
산업·경제 불균형	129(8.6)	14(5.7)	23(10.3)	32(7.7)	39(10.3)	21(9.0)
문화·여가 불균형	67(4.5)	10(4.1)	11(4.9)	13(3.1)	14(3.7)	19(8.1)
교육환경 불균형	226(15.1)	28(11.4)	35(15.7)	78(18.7)	48(12.7)	37(15.8)
개발사업 편중	166(11.1)	27(11.0)	34(15.2)	39(9.4)	45(11.9)	21(9.0)
지역별 사회계층 분포	137(9.2)	17(6.9)	18(8.1)	48(11.5)	36(9.5)	18(7.7)
기 타	9(0.6)	2(0.9)	2(1.1)	3(0.7)	1(0.3)	1(0.4)
무응답	56(3.6)	20(8.2)	-	8(1.9)	27(7.2)	1(0.4)
계	1,497(100.0)	245(100.0)	223(100.0)	417(100.0)	378(100.0)	23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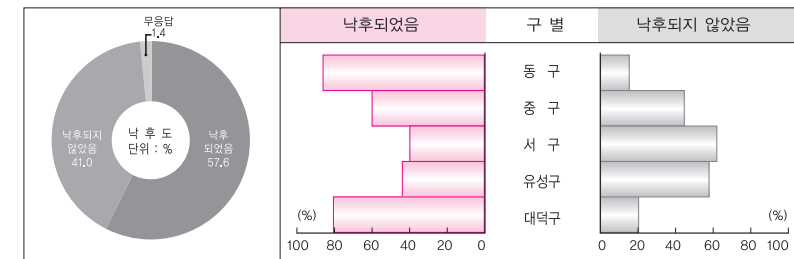
현 거주지역의 낙후도에 대해서는 낙후되었음 57.6%, 낙후되지 않았음 41%로 낙후되었다가 다소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 거주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거주지역에 대한 낙후도를 보면, 동구

가 84.1%, 대덕구 80.3%, 중구 59.2%, 유성구 43.9%, 그리고 서구는 40.8%로 나타나 역시 기존 시가지인 동구, 중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낙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1〉 현 거주지역의 낙후도

(단위 : 명, %)

구 분	대전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낙후되었음	862(57.6)	206(84.1)	132(59.2)	170(40.8)	166(43.9)	188(80.3)
낙후되지 않았음	614(41.0)	37(15.1)	91(40.8)	239(57.3)	201(53.2)	46(19.7)
무응답	21(1.4)	2(0.8)	-	8(1.9)	11(2.9)	-
합 계	1,497(100.0)	245(100.0)	223(100.0)	417(100.0)	378(100.0)	234(100.0)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42.4%, 교육환경 24.3%, 교통환경 11.2%, 문화환경 7.5% 순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거와 교육환경 등의 개선이 지역격차를 해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 (1순위)

(단위 : 명, %)

구 분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공원 녹지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여가 체육	환경 공해	쇼핑 환경	도시 미관 경관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총 계
대전시	635 (42.4)	168 (11.2)	39 (2.6)	364 (24.3)	112 (7.5)	27 (1.8)	34 (2.3)	17 (1.1)	14 (0.9)	36 (2.4)	46 (3.1)	245 (100.0)
동 구	114 (46.5)	18 (7.3)	7 (2.9)	57 (23.3)	25 (10.2)	7 (2.9)	3 (1.2)	3 (1.2)	2 (0.8)	1 (0.4)	7 (2.9)	223 (100.0)
중 구	106 (47.5)	19 (8.5)	7 (3.1)	41 (18.4)	18 (8.1)	6 (2.7)	6 (2.7)	1 (0.4)	2 (0.9)	8 (3.6)	9 (4.0)	417 (100.0)
서 구	185 (44.4)	47 (11.3)	4 (1.0)	104 (24.9)	31 (7.4)	9 (2.2)	6 (1.4)	3 (0.7)	5 (1.2)	6 (1.4)	16 (3.8)	378 (100.0)
유성구	152 (40.2)	49 (13.0)	13 (3.4)	96 (25.4)	24 (6.3)	1 (0.3)	10 (2.6)	4 (1.1)	3 (0.8)	10 (2.6)	13 (3.4)	234 (100.0)
대덕구	78 (42.4)	35 (15.0)	8 (3.4)	66 (28.2)	14 (6.0)	4 (1.7)	9 (3.8)	6 (2.6)	2 (0.9)	11 (4.7)	1 (0.4)	1,497 (100.0)

한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16.6%, 문화전시시설 16.4%, 공원녹지시설 14.0%, 의

료시설 12.3%, 공연시설 10.1%로 나타나 사회복지와 문화전시시설 등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로 나타났다.

〈표 23〉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서비스시설 (순위) (단위 : 명, %)

구 분	공원 녹지 시설	문화 전시 시설	공연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노인 시설	생활 체육 시설	청소년 시설	여성 복지 시설	의료 시설	보육 시설	주차 시설	공해 유해 방지 시설	총 계
대전시	210 (14.0)	245 (16.4)	151 (10.1)	248 (16.6)	105 (7.0)	75 (5.0)	101 (6.7)	30 (2.0)	184 (12.3)	36 (2.4)	85 (5.7)	25 (1.7)	245 (100.0)
동 구	62 (25.3)	33 (13.5)	32 (13.1)	40 (16.3)	11 (4.5)	6 (2.4)	13 (5.3)	6 (2.4)	26 (10.6)	2 (0.8)	14 (5.7)	0 (0.0)	223 (100.0)
중 구	33 (14.8)	39 (17.5)	14 (6.3)	40 (17.9)	22 (9.9)	14 (6.3)	15 (6.7)	6 (2.7)	18 (8.1)	4 (1.8)	14 (6.3)	3 (1.3)	417 (100.0)
서 구	35 (8.4)	80 (19.2)	41 (9.8)	75 (18.0)	29 (7.0)	17 (4.1)	40 (9.6)	12 (2.9)	45 (10.8)	11 (2.6)	26 (6.2)	5 (1.2)	378 (100.0)
유성구	44 (11.6)	65 (17.2)	32 (8.5)	65 (17.2)	32 (8.5)	13 (3.4)	22 (5.8)	3 (0.8)	61 (16.1)	13 (3.4)	17 (4.5)	11 (2.9)	234 (100.0)
대덕구	36 (15.4)	28 (12.0)	32 (13.7)	28 (12.0)	11 (4.7)	25 (10.7)	11 (4.7)	3 (1.3)	34 (12.3)	6 (2.6)	14 (6.0)	6 (2.6)	1,497 (100.0)

V. 대전시 도시균형발전의 정책과 과제

1. 계획적 기반인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균형발전은 대전시의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연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으로 신탄진지구를 포함하여 5개 지구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로 선정할 바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의회의에서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구(區)간 격차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

거인“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상기 조례에는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하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우선 대전광역시의 장기 비전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장기적인 균형발전 목표 및 방향, 자치구간 불균형 실태 조사·분석·평가 등을 통한 분야별 추진전략과 다양한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부도심 및 생활권 중심지 육성

대전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로 2도심, 3부도심, 13개 지구중심지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도심의 경우 대전역과 충남도청간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기능들이 집적하여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둔산도심은 2000년 지방행정의 최고기관이 시청이 둔산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반면에 유성, 신탄진 부도심과 다수의 지구중심지 들은 공간적, 기능적 위상을 형성하기 보다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시 도시기반시설 등의 공공부문에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도심 및 생활권 중심지 육성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는 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가 주도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 행? 재정적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시설의 공급에 의한 시민의 복리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기초생활서비스시설에는 공원, 도서관, 공연시설, 사회복지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서비스 부족지역을 식별하여 우선공급순위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장단기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시설 공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우선순위조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서비스시설 공급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시가지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4. 노후 주거지역의 체계적 정비

자치구간 주거환경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비사업간 연계 없이 민간위주로 물리적 주택개량에 치중해 온 주거지 정비 시책을 개선하여 생활권별로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정비우선검토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다양한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정비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5.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

대도시의 지역격차 및 불균형의 원인으로 교육환경의 차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입지 불균형에

다른 자치구간 교육기회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설학원 등 지역간 교육시설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정책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의 지역별 균형 배치, 학교시설 격차 완화, 학교 주변 환경정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 우수고등학교 유치 또는 설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상교육기회 확대, 종합교육자원센터 설치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시의 지역격차 실태를 정리하면 크게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측면으로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동구, 중구 등 기존 시가지는 건축에 필요한 최소필지 규모에 미달하는 필지가 많은데다 주택의 건축연도가 오래돼 시가지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불량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먼저 교육여건의 지역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립학교나 각종 사설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아파트 분양가 등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정책과 도심활성화 정책 등 기성시가지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인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부도심 및 생활권 중심지 육성,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노후 주거지역의 체계적 정비,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히 각 구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과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별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마련은 매우 의미가 있다.

끝으로 대전시의 균형발전 전략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지가 갖는 공간적, 기능적 특성을 감안한 중심지별 특성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인 도시의 균형발전 비전하에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신욱(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설교통부(2001, 2006), 「도시계획현황」.
김정동(2004),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대전광역시(2001, 2006), 각 구, 통계연보.
대전광역시, 건축과 내부자료.
대전광역시(2001, 2006), 「대전통계연보」.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박희봉·이희창(2002), “지역격차 현황과 쟁점”, 「정책과학연구」.
김상호(1988), “지역성장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경향의 고찰 및 평가”, 「전북행정학보」.
서정신(2001), “도시내 지역격차 분석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규(2004), “지역격차와 균형발전”, 도시행정특강 자료

(<http://www.sdi.re.kr/~jglee/disparity.ppt>).
한국공간환경연구회(2004),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허재완(1989), “지역격차의 동태적 패턴과 그 가설 검증”, 「국토계획」, 24(2).
홍기용(1994), 「지역경제론」, 서울: 박영사.
황명찬(1973),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간 소득격차의 Simulation 분석”, 「국토계획」, 8(20).
황명찬(200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KB 국민은행 KB 아파트시세 (<http://www.kbstar.com/>).

D a e j e o n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 • • •
정책이슈

●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과 가족지원정책의 방향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한·미 FTA와 대전경제
임성복 /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Daejeon Development Forum

●●●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과 가족지원정책의 방향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자연의 모든 색깔이 나른한 봄바람에 얼굴을 내미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 봄이다. 이 짧은 계절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그 화려함에 취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 소식으로 우편함은 풍성해졌으며, 주말 뉴스엔 꽃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의 행복한 표정을 담은 꼭지가 딱딱한 소식들 사이를 화사하게 메우고 있다. 때를 맞춘 것일까, 마침 개봉한 한국 영화들의 면면을 보니, 그동안 이름 만으로만 존재했을 뿐이었던 젊은 아버지가 아이를 통해 (성숙한 아버지)로 변화하는 내용을 다른 영화들이 눈에 띈다. 굳이 빈번한 결혼과 가정의 달 5월이 있는 봄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 사회 속의 가족과 그에 관련한 이슈들은 학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늘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출산율이 급감하고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가족 혹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재/탐구는 요즘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혈연, 혼인 (혹은 이에 준하는 관계),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를 가족으

로 정의할 때, 가족은 사회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전통적 형태의 가족은 빠르게 핵가족화 되었고, 고령화 경향과 함께 노령 인구의 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핵가족 내의 자녀 수는 급감, 자녀 교육은 현재 한국 가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 고용의 확대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는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이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러기아빠, 이혼율 및 가정내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집안일”로 여겨져 왔던 가족 내 문제들 - 출산과 양육, 가족구성원 간 갈등, 신체적·정신적 폭력, 이혼, 노령 인구 부양 - 은 이미 가족의 단위를 넘어 사회와 국가가 살펴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2007년을 열면서 내놓은 슬로건 “이제는 가족입니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한번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가족을 올해 가장 중요한 시정 과제들 중의 하나로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 개인적인 것이라 여겨져 왔던 가족의 문제

를 사회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가려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혼인, 출산, 이혼 등은 개인의 결정과 책임의 문제이지만, 앞서 얘기된 바와 같이 사회가 변화·변동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 및 구조, 그 기능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은 사회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부는 올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가족을 선택하여, 지난 3월 <대전 가족공동체 실천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을 매월 1회씩, 연중 7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전광역시 가족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전 가족 공동체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중인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의 개요 및 진행방향을 설명하려 한다.

1. 대전시 가족 현황

대전광역시의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는 (2005년) 146만명이며, 30-39세인 인구집단이 전체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39세 남성은 전체 남성인구의 18.4%, 여성은 18.5%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는 약 51만세대로, 2004년 한해동안 출산한 자녀수는 1만5천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혼인율과 이혼율을 해마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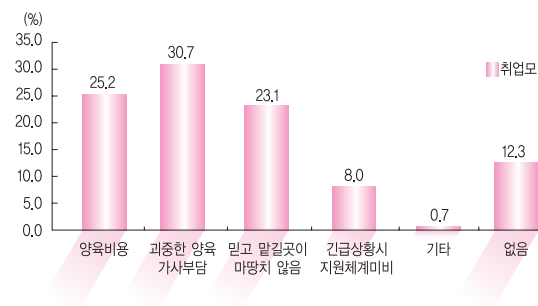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 혼인부부는 9만쌍 정도이며, 이혼부부는 3만 3천쌍에 이르러 이혼율이 36.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혼부부 중 재혼하는 부부는 약 1,500쌍 (남자, 583명, 여자, 491명)으로 재혼율은 47.6%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혼 및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정 구성원은 12만 4천명으로, 그 중 모자가정 구성원은 약 10만여명, 부자가정은 2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의 4배 정도가 된다고 볼 때, 이에 따른 모자가정의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경우는 2004년, 1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수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소는 파악하고 있다. 국제 결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2005년, 남자 176명, 여자 1,551명으로, 전체결혼이민자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의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본 대전광역시 가족공동체의 주요 현황 및 가족 관련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가족과 여성 : 저출산 및 취업 기혼 여성의 보육 문제

사회변동에 따른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짚고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여성의 고용 상태와

취업여성이 처한 어려움은 전국 통계 자료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여, 약 46.2% 여성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음의 그래프와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취업기혼 여성은 자녀양육을 가장 큰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취업 모의 아동양육의 어려움

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과중한 양육/가사부담 (30.7%)을 직업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구분, 즉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지우는 사회·문화적 인식을 여성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아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들인 양육비용 (25.2%)이나, 보육 시설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음, 23.1%)의 문제가 사회적 성역할 분담에 따른 심리적 부담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거론되었다는 것은, 보육비 증액이나 보육 시설의 확충과 함께 취업기혼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취업기혼여성에게 양육의 문제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느니만큼, 대전시는 앞

<표 1> 취업 모의 아동양육의 어려움

(단위 : %)

		계	양육비용	과중한 양육가사부담	믿고 맡길곳이 마땅치 않음	긴급상황시 지원체계미비	기타	없음
취업모	취업모	100.0	25.2	30.7	23.1	8.0	0.7	12.3
	취학 미취학 아동	100.0	19.4	30.7	33.7	7.6	0.5	8.0
취학여부	취학 아동	100.0	30.1	30.6	14.3	8.3	0.9	15.8
	99만원이하	100.0	67.0	19.8	11.0	-	-	2.2
소득	100~149만원	100.0	44.9	17.6	12.5	12.5	-	12.5
	150~199만원	100.0	34.2	27.8	19.3	5.3	-	13.4
	200~249만원	100.0	33.5	33.5	16.9	5.4	0.8	10.0
	250~299만원	100.0	22.2	30.7	25.9	6.6	0.5	14.2
	300~349만원	100.0	20.4	32.6	26.1	8.7	1.3	10.9
	350~399만원	100.0	14.3	34.8	27.7	7.1	-	16.1
	400~499만원	100.0	11.8	34.5	29.1	10.9	1.4	12.3
500만원이상	100.0	9.0	33.1	29.5	11.5	1.4	15.5	

자료 :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

〈표 2〉 보육시설 현황 (2006. 6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설립 주 체 별															
	계		국 공 립 보육시설		법 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 모 협 동		가 정 보육시설		직 장 보육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1,016 (91)	27,198 (5,781)	28 (27)	1,421 (1,385)	43 (42)	3,589 (3,525)	26 (10)	1,289 (536)	351 (12)	13,317 (335)	1	18	555	6,586	12	978
동구	119 (20)	4,349 (1,480)	5 (5)	255 (255)	9 (9)	1,003 (1,003)	5 (3)	255 (142)	66 (3)	2,496 (80)	-	-	33	350	1	20
중구	163 (17)	4,457 (928)	4 (4)	144 (144)	8 (7)	665 (601)	1 (1)	42 (42)	83 (5)	2,526 (141)	-	-	63	1,004	4	76
서구	395 (23)	8,793 (1,281)	9 (9)	473 (473)	8 (8)	475 (475)	7 (4)	415 (277)	101 (2)	4,000 (56)	-	-	267	2,930	3	500
유성구	184 (14)	4,642 (1,093)	1 (1)	40 (40)	11 (11)	1,001 (1,001)	5 (1)	209 (30)	44 (1)	1,816 (22)	1	18	115	1,213	3	345
대덕구	155 (17)	4,957 (999)	9 (8)	509 (473)	7 (7)	445 (445)	8 (1)	398 (45)	53 (1)	2,479 (36)	-	-	77	1,089	1	37

주 : 1) ()는 정부지원시설 현황
 2) 보육능력 : 수용능력 34,346명 / 정원 27,198명(이용률 79.19%)
 종 사 자 : 4,605명(시설장 1,016, 보육교사 3,214, 기타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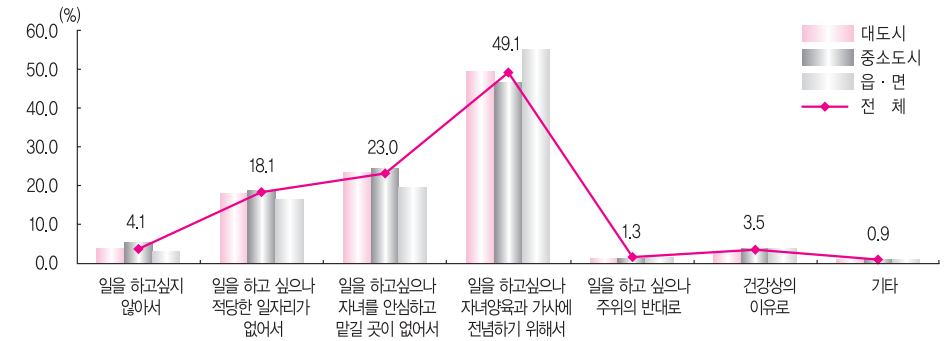
취약(특수)보육시설 현황 - 137개소 / 06. 6월 현재

- | | |
|------------------------------------|--------------------------|
| 1. 영아전담시설 - 24개소 / 1,013명 | 4. 방과후시설 - 13개소 / 255명 |
| 2. 장애아전담시설 - 5개소 / 104명 | 5. 시간연장형시설 - 81개소 / 334명 |
| 3. 장애아통합시설 - 13개소 / 522명(장애아동 66명) | 6. 휴일 - 1개소 / 0명 |

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의 문제는 가족내 문제가 아닌, 가용할 수 있는 여성노동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국가경제력 증진에도 저해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중 기혼 취업 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취약(특수)보육시설 현황이라 할 수 있다. 휴일 근무와 야근, 방과 후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취업 기혼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육 서비스 기관은 보육 시간 연장이 가능한 시설이며, 방과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보통의 가정주부들도 짧은 시간동안이나 혹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바꿀수 있는 탁아 시설을 찾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여성 취업 인구와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볼 때, 특수 보육 시설의 확대·증설은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림 2〉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하지 않는 이유

〈표 3〉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하지 않는 이유 2

(단위 : %)

지역	구 소 득	전 체	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건강상 이유로	기타
				전 체	100.0	4.1	18.1	23.0	49.1	1.3
지 역	대도시	100.0	3.7	18.0	23.6	49.1	1.4	3.2	1.0	
	중소도시	100.0	5.3	18.7	23.8	46.5	1.1	3.8	0.8	
	읍·면	100.0	2.8	16.6	19.1	55.3	1.6	3.8	0.9	
가 구 소 득	99만원 이하	100.0	2.7	31.5	17.1	32.4	-	16.2	-	
	100~199만원	100.0	3.2	20.7	27.0	43.2	0.8	3.9	1.3	
	200~299만원	100.0	3.3	18.4	24.1	49.7	2.0	1.8	0.8	
	300~399만원	100.0	4.9	10.9	19.5	58.7	1.6	2.6	1.8	
	400만원 이상	100.0	8.1	15.4	17.4	55.5	0.8	2.8	-	

자료 :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

기혼의 취업 기혼 여성과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자녀여성의 미취업사유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시 육아의 문제였다.

위 표와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기혼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뚱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나 주위의 반대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전념을 위해 (49.1%),”서이고,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23.0%)”이다. 다시 말해서, 약 72%의 기혼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 때문에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여성

중 결혼 후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4%에 달했으며, 취업중단의 사유로는, “자녀양육”이 64.9%, “출산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12.6%, 그리고 “가사일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8.4%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여성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함에 있어서, 육아는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고 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모두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면, 육아 문제 때문에 취업을 주저하고 있는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수 가정 현황

최근 급격한 경제·경기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실직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직 가정의 가출, 경제적 위기에 기인한 이혼 및 가족의 해체 문제 등의 “가족 위기적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치지향성이 개인화됨으로써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족관계 및 갈등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한 부모가정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과 재혼 관련한 가족 연구들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는 대부분 어머니가 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그 자녀들 양육과 교육이 어머니의 몫으로 남게될 때,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청구제도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빈곤층은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특히 빈곤층 여성의 이혼은 자녀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여성의 빈곤이 자녀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서도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부담 제도는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역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혼한 여성들의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편견과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길에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 가정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가족이다. 2006년 12월 현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5만 854명(남 34,580명, 여 21,2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이 보고한 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규 모 (㎡)		수 용 자		종사원
			대 지	시 설	정 원	현 원	
11개소					879	691	327
· 사랑의집(623-4297)	동구 자양동	최병란	527	494	19	15	6
· 한미음의집(585-0781)	서구 장안동513-1	유광협	5,432	1,639	70	65	35
· 한뜻마을 (585-3342)	"	유병흔	3,455	781	37	37	19
· 한몸요양원(583-4472)	"	엄정미	2,715	1,126	60	56	31
· 동심원(581-2220)	서구 오동277-3	김연환	9,220	871	80	52	29
· 한 걸 음(585-0780)	서구 장안동	이명순	2,100	1,241	53	6	9
· 행복마을(586-4661)	서구 원정동	윤경열	2,310	1,322	53	2	5
· 성세자활원(543-2121)	유성구 용계동311-1	박이영	7,261	2,860	120	98	47
· 평강의집(625-3007)	대덕구 대화동39-1	노준호	833	1,432	252	239	90
· 온달의집(625-3005)	"	송명호	3,500	5,070	77	75	39
· 정화원 (625-3004)	"	윤여진	4,561	4,020	58	46	17

〈표 4〉 모·부자 가정 현황 (2006. 11월말 현재)

(단위 : 세대, 명)

가정현황	보호현황	계	모부자복지법 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호 대상	비고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합 계	세대	5,121	1,939	1,911	28	3,180	2	
	인원	13,860	4,975	4,907	68	8,880	5	
모자가정	세대	4,185	1,592	1,564	28	2,591	2	
	인원	11,286	4,056	3,988	68	7,225	5	
부자가정	세대	936	347	347	-	589	-	
	인원	2,574	919	919	-	1,655	-	

〈표 5〉 모·부자복지 수혜대상 가구의 자녀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6세미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대이상	기타미취학
합 계	3,333	671	1,025	707	741	149	40
모자가정	2,705	536	829	562	619	129	30
부자가정	628	135	196	145	122	20	10

〈표 7〉 복지관 및 체육시설(시 지원)

(단위: 명)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주체	대표	주 요 서 비 스
6개소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543-5111)	유성 용계동 319-2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이중도	의료, 교육, 직업재활
시립산성종합복지관 (586-8033)	중구 산성동 120-18	(사)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재화	수영, 물리치료실, 점자도서관 등
밀 알 복 지 관 (627-0900)	동구 삼성동 280-3	밀알복지재단	오상근	의료, 교육, 직업재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822-3637)	유성 죽동 600	사)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	윤석연	보호직업장, 물리심리치료실 등
성 세 재 활 체 육 관 (543-2125)	,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박이영	장애인 건강증진 (다목적체육관)
체 육 재 활 원 (635-4678)	대덕 대화동 3-3	(사)대전광역시 장애인연합회	송 권	수영, 헬스,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등

〈표 8〉 노인현황 (2006. 12. 31 현재)

구 별	06.12.31 (총인구)	2005 (총인구)	전년대비		2004 (총인구)	전년대비		2003 (총인구)	전년대비		2002 (총인구)
			명	%		명	%		명	%	
계	105,716 (1,466,158)	99,811 (1,454,638)	5,905 (1,210)	5.9	95,099 (1,443,471)	3,721 (942)	3.9	89,601 (1,432,296)	5,498 (1,095)	6.1	84,813 (1,419,573)
동 구	22,592 (236,504)	21,382 (234,724)	1,294 (1,393)	5.6	20,440 (238,532)	942 (240)	4.6	19,345 (240,212)	1,095 (240)	5.6	18,453 (240,487)
중 구	24,091 (263,592)	22,797 (266,635)	1,330 (678)	5.6	21,777 (265,962)	1,020 (268)	4.7	20,747 (268,351)	1,030 (268)	5.0	19,545 (265,597)
서 구	30,790 (505,600)	29,397 (509,225)	5.9 (5.6)	4.7	28,239 (508,552)	1,158 (500)	4.1	26,530 (500,551)	1,709 (500)	6.4	25,218 (496,217)
유성구	13,947 (243,130)	12,617 (220,767)	5.6 (4.7)	10.5	11,548 (203,478)	1,069 (203)	9.3	10,590 (193,974)	958 (193)	9.0	9,905 (188,346)
대덕구	14,296 (217,332)	13,618 (223,287)	10.5 (4.9)	4.9	13,095 (226,947)	523 (226)	4.0	12,389 (229,208)	706 (229)	6.0	11,692 (229,926)
총인구 대비	1,466,158 (7.2%)	1,443,471 (6.5%)			1,432,296 (6.3%)			1,432,296 (6.3%)			1,415,464 (5.5%)

주: 60세이상 노인: 150,615명

3. 노령인구 증가 현황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대책은 크게 소득보장, 건강보장, 그리고 고령친화 산업의 육성 분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의 생계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 및 정책 제안에서 앞으로는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탐구하는 노력, 즉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즉, 노인을 경제적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경험과 지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적 관점으로 노령 인구를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구 분	현 재	2010	2020	2030	
노인인구	대전시	7.11%	8.2%	12.0%	20.0%
	전국	9.0%	10.7%	15.1%	23.1%
평균수명	75.9세	78.8세	80.7세	81.5세	

• 대전시 노인인구 7%(2006년)에서 14%(2022년)로 증가 소요기간 16년 예상
외국의 경우: 프랑스 125년, 스웨덴 80년, 미국 65년, 일본 25년

•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율 전망	2000	2010	2020	2030
	10.0%	14.2%	18.9%	35.7%

II. <이제는 가족입니다> 세미나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가족 내에서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 나는 문제들은 이제 더이상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경제 성장과 노동력의 문제, 가족 구성원간 갈등과 폭력의 문제, 출산과 이혼의 문제,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문제, 고령 인구의 부양 및 복지 문제, 그리고 성차별의 문제 등은 이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각 분야의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우리 사회는 인지하기 시작했다. 직장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이, 그리고 그에 대한 담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가족을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담론을 이끌어 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월 5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가족공동체 실천을 위한 세미나 : “이제는 가족입니다”는 대전가족공동체 사업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다.

1. 현대 사회의 가족과 가족 문제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초강연에서 가족관계 및 제반 문제들을 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각 개인들의 지극히 사적인 결정, 예를 들어 혼인, 출산, 이혼 등이 어떻게 우리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그런 개인적인 결정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정전 교수는 가정을 긍정적 사회자본의 핵심인 이타심과 신뢰를 함양시키는 기본 사회 단위 혹은 사회 기반 시설로 정의하면서, 사회 집단중 가장 작은 단위로 정의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매일매일의 다툼, 갈등, 양보, 화해, 협력 등을 경험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혹은 가정 그 자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역설하며 이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해체는 비단 개인만의 불행이 아닌,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불행이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행복한 가정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진 전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손정자 회장의 발제는 앞서 이루어진 이정전 교수의 가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가족의 사회적 의미를 주창한 것은 동일하나, 오늘날 한국의 가족이 처한 현실적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가족이 사회와 분리된 안식처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오히려 가족의 정서적 부담만을 강요할뿐, 사회 변화에 휘청거리는 가족의 짐을 가족만의 것으로 규정하는 보수적인 담론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정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한국 가족, 가정이 처한 가장 당혹스러운 현실은, 이전까지 가족이 공동체 형태로 각각 구성원에게 제공해 왔던 복지 서비스, 예를 들면, 정서적 안정, 노동력의 재생산, 가족간 소득의 보전, 육아 및 노령 인구 부양 등을 산업화와 급속한 시장의 변화와 함께 구조적으로 변동, 해체된 가족이 더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아직 국가가 담당할 처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는 개인에게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복지 서비스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가족이 자의든, 타의든 그 기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개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손정자 회장은 발제문에서 “많은 가정들이 가족원의 부양, 보호 등의 기능을 대부분 맨손으로 떠맡고 있다”면서 “가족 성원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지방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운동의 필요성, 변화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과 세대 통합 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가족 내부의 자율성 신장과 민주적인 가족 구

성원 간에 관계 회복 등이, 개별 여성 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 지원 사업의 확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가족공동체를 위한 제안들

대전 가족공동체 실천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재춘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은, 가족 해체, 가족 위기, 새로운 가족 유형의 등장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보다 보편적 정책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가족 환경을 전제로한 가족 정책은 더이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가족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07년 가족 정책 추진 과제를 정재춘 과장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가족 부양부담 및 돌봄(caring)에 관한 사업, (취업 기혼 여성을 위한)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통합적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족 부양 부담 및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 시설 수준을 높이는 방안(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증설, 주민자치센터 활용 개방형 육아보육센터 구별 1개소 운영 등) ② 노인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사업(무료급식의 확대,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돌봄비 바우처 제공, 실비 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 복지 시설 확

충 등) ③ 장애인 부양 부담 완화 사업 (대덕장애인복지관 개관, 생활시설 2개소, 주간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등) 이 발제를 통해 제안되었다. 정책 추진 과제 발표문은 취업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가정친화적인 기업·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지원 및 일자리 지원책 마련 (자활공동체 확충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지원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그리고 복지 만두레 활동을 통한 민간 자율적 복지 공급체계 (“김장은행” “연탄은행” 등 “나눔의 실천운동” 전개)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앞에서 대전광역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돕기 위한 시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면, 차성란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 생태계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가족의 중요성 및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가정생활의 문제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 사회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을 들어 역설하고, 대전광역시에 문예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기능의 유지 강화 및 잠재력 개발,’ ‘취약가정 지원 및 안정성 증진,’ ‘양성평등한 가족·기업 문화 조성,’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의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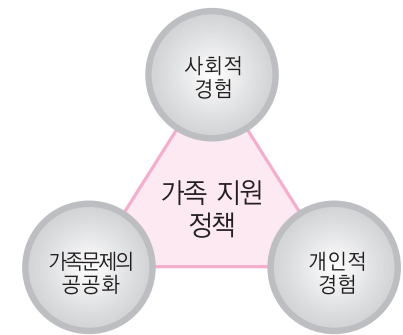
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크게 네 가지의 사업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건강가정 지원 사업.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가치와 현대 사회 변화에 알맞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및 실무자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립해 보려 하고 있다. 둘째,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된 가족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민자들에게는 정서적·문화적 지원 및 생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여성 고용 인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취업기혼여성들의 양육 및 아동 교육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넷째, 지역사회지원 체계 구축 및 홍보산업.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관련기관 업무 협약 및 지원을 통하여 건강가정 및 센터사업의 지속적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II.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의 방향

가족은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자, 사회 변화·변동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적 주체라는 가정에서 출

발하여, 가족과 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가족 공동체가 처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은 올 해 6회 걸친 <가족 공동체 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가족,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공무원에서부터 다양한 모임 및 활동을 통해 가족 관련 문제들을 고민해 온 각종 사회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그리고 이 모두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지원을 해온 의정기관의 담당자들까지 이번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에 대한 각계의 기대와 참여 열기는 상당하다.

최근 사회 변화와 가족의 관계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할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족간 갈등의 문제인 이혼 및 폭력뿐 아니라, 청소년 일탈, 노인 문제, 성역할과 여성의 지위 문제, 노인문제 등은 각기 다른 수준에서 가족의 문제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공동체적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의 문제를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가족 정책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사회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림으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가족지원정책의 방향

위 그림에서 개인적 경험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되는 가족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에게 가족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면서 휴식을 취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를 경험하고,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새로운 노동력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험이란, 사회가 경험하는 가족으로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생태 및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또한 그 변화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문제들이고 그 단체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가족문제의 공공화 부분은 이러한 가족 관련 문제들을 개인적 차원으로 푸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가려는 문제제기 부분으로서, 공론화된 관심을 의미하며, 연구원, 학계, 전문가집단이 해야 할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세 부분을 연결하고 지원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을 내놓고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시, 정부)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공론화된 관심이라는 세 분야를 아우르는, 세 분야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7 대전 가족 공동체포럼은 각 참여 단체의 특성과 각기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의 고유성, 그리고 사회와 유기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포럼의 주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1. 부부됨·부모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가족 내 구성원 간의 관계 및 갈등을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은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대화의 횟수와 방법, 내용 등이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화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관련 연구들은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부부의 대화시간이나 부모와 자녀간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내용이나 대화 방법,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오고 있다. 또한, 현재 대다수 핵가족이 처한 가장 절실한 과제인 자녀 양육과 청소년 문제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과 함께, 가족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노력과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화목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한편, 관련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험해봄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월 26일 예정된 <대화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 생각하는 아이를 만드는 부모코칭 (가제)> 강연은 가족화목을 위해 가족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거나, 원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동등하고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가족 공동체 각각의 구성원이 함께 스스로 없이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야기 하고, 갈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해가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족화목에 다가 설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족의 다양성 (Diversity of family)에 대한 새로운 접근

부부와 혼인하지 않은 자녀(도시형 핵가족)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정상가족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풍토 속에서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폭넓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93만 8863명에 이르며, 내부적으로는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2010년 2.8%, 2020년 5%, 2030년 6%, 2040년 7.4%, 2050년 9.2%로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문화·이민사회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국인 10%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 현재

대전시에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가족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 조손(祖孫) 가족, 입양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닌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분석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대전시에 있는 가족관련 단체들을 초빙, 각 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 및 문제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6월 5일로 예정된 결혼이민자 연대의 주제 발표는 외국 노동자 및 이민자 증가 추세에 따라 주목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여러 다른 사회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문제의식의 공유뿐 아니라 앞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많은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가족과 여성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창출의 문제인 동시에, 기혼 여성의 고용 상태 및 (여성, 가족 친화적) 노동 환경의 문제, 그리고 육아 및 교육에 대한 부담과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족 공동체 포럼

은 경제 분야를 비롯, 육아, 교육 및 여성 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나 세대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가족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라 볼 수 있는 가정 폭력 역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승하는 이혼율과 가족관계 갈등 및 가정 폭력의 문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노령 인구 부양의 문제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노인 (특히 여성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의 현실은, 여전히 노인 부양의 부담을 일차적으로 가족에 지우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돌봄을 위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취업 취약 계층인 노령 인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노령 인구 관련 복지 단체에서 제공하는 대전시 거주 노령 인구의 실태와 그들이 처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공유하려 한다.

가족을 혈연을 중심으로한 관계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은 개인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의 삶에 맞지 않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 주변에서는 먼 곳에 있거나 연락조차 드문 혈연 관계보다는 오히려, 내 아파트 옆집의 이웃이, 혹은

직장 동료, 혹은 각종 취미 활동 동호인들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아주 폭 넓은 의미에서 가족은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애환을 가진 집단이라고 확대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가족” 혹은 “공동체적 가족”이 가능하고, 또한 그렇기에, 혈연을 중심으로 공동 생활하는 지극히 사적인 소집단인 가족의 애환과 슬픔을 사회 전체

가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이론적 여건이 마련 될 수 있다.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면서 사적인 가족의 문제를 공적으로 고민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전문가와 관공서, 그리고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 · 미 FTA와 대전경제

임성복 /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1. 지역경제 개관

1. 지역의 산업구조

1) 생산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농림어업은 충남·북 인근지역의 도시근교농업 발달로 지역내 생산 비중은 0.4%, 취업자 비중은 1.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대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여타 5대도시와 비교해도, 모두 생산 및 취업자 비중이 모두 낮은 수준임.
-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대덕백리 중심의 첨단벤처기업 집적으로 지역내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내 생산 및 취업자 구성비 모두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6대도시와 비교하면, 지역내 생산비중은 높은 반면, 취업자 구성비는 낮음. 이는 소규모인력이 투입되는 첨단벤처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서비스업의 지역내 생산 및 취업자 비중은 높은 매우 높은 편임. 특히 지역내총생산의 68.5%에 달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GRDP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입지계수

(단위 : %)

구 분	GRDP(경상가격 2004)			취업자(2005)		
	대전	6대도시	전국	대전	6대도시	전국
농림어업	0.4(0.1)	0.6(0.2)	3.6	1.7(0.2)	1.1(0.1)	7.6
광업	0.0(0.1)	0.0(0.1)	0.2	0.0(0.0)	0.0(0.4)	0.1
제조업	19.0(0.7)	18.3(0.6)	28.4	12.5(0.7)	18.1(1.0)	18.5
건설업	10.2(1.1)	8.1(0.9)	9.4	9.1(1.1)	8.4(1.1)	7.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0(1.1)	13.6(1.4)	9.7	27.2(1.1)	28.7(1.1)	25.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42.3(1.4)	36.1(1.2)	31.0	37.4(1.2)	32.7(1.1)	30.6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	17.1(1.0)	23.3(1.3)	17.7	12.1(1.2)	11.0(1.1)	9.8

주: ()내는 입지계수이며, 6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을 말함.

- 6대 도시와 비교하여,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 서비스업 생산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건설업은 전국 및 6대 도시에 비하여 생산 및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 대전경제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대전경제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등 새로운 기회가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집중.
- 전략산업, 신성장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고용, 부가치의 증진과 이를 통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선
-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산업입지 공간 확보를 위해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국토공간의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광역교통체계의 개선과 이를 이용한 물류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 첨단제조업, 첨단비즈니스 산업 및 벤처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R&D역량을 높이고, 여러 유형의 혁신기관들과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체

계 구축 및 네트워크 증진

- 지역의 산업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대학의 인력양성 공급 기능을 제고하고, 직업 재훈련 기회의 확대 및 대학-산업체 맞춤형 인재 육성.
- 지역내 각 권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북서부 지역과 발전소외 지역이라 할 동남부 지역간의 공간적 균형을 위한 입지 조정 및 기능 재배치를 추진.
-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통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인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자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2) 당면과제

-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마련
 -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전개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출되는 각종 첨단·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현장에서 활용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응용화·생산화 활동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 축적된 연구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연구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 ②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으로 지역 내총생산 수준 제고
 - 기술혁신, 정보화, 국제화 등 21세기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 있어서 대전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신기술과 정보의 제공, 첨단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유망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내총생산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실현.

③ 도시공간 및 산업시설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산업의 효율성 제고

- 지금까지의 국가 및 지역단위로 추진된 각종 산업입지 정책이 도시공간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에 기초해서 전개되지 못한 점을 감안, 산업단지의 재배치 및 신규 단지의 조성, 유통관련 시설의 공간적 재배분을 통해 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도시와 조화를 이룬 산업정책을 추진.

④ 제조업 지원기반으로서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 지금까지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토대로 한 시설·장치산업 중심의 산업전략에서 향후 기술·정보·서비스 등 산업의 소프트화 및 문화화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제조업 지원기반의 토대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강구.

⑤ 산업 집적지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의 도시기능을 산업부문별로 전문화 영역으로 집적시키고, 도시형 선도산업 육성

등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벤처기업 창업촉진으로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산업별 전문화된 클러스터 군을 조성하여 생산업체와 지원기관 및 각종 관련 비즈니스산업이 조화·융합된 활력 있는 집적지구를 조성.

⑥ 물류유통체계 개선 및 근교농업 육성을 통한 산업간 발전 격차 해소.

- 물류유통체계의 개선, 대형유통점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 재래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재개발 혹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강구.
- 대도시 근교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고부가가치의 작목별 특화단지 조성, 웰빙형 체험농장,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고소득 농가 육성.

3. 산업구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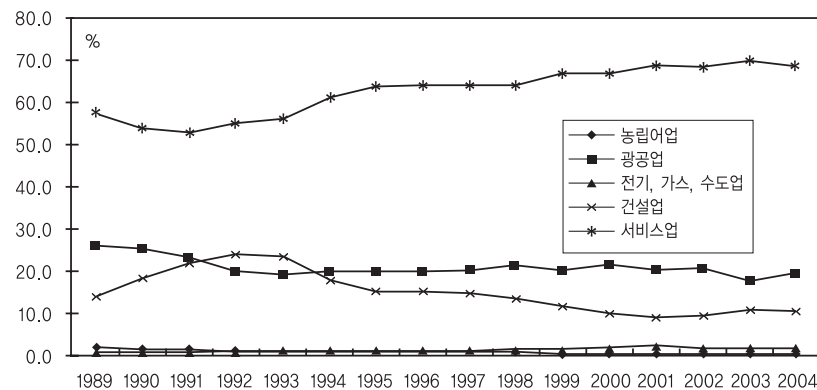
- 1990년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가 고착화 됨.
 - 지역내총생산 기준 제조업 비중이 1989년 25.8%에서 2004년에는 19.0%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57.7%에서 68.5%로 상승하여 광역시 분리 이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되었음.
 - 결과적으로 제조업은 쇠퇴 또는 공동화한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사

업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경
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음.

〈표 2〉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전국
농림어업	1.9	1.1	0.7	0.7	0.5	0.4	3.6
광업	0.1	0.1	0.1	0.0	0.0	0.0	0.2
제조업	25.8	19.3	19.6	20.9	19.8	19.0	28.4
전기·가스·수도사업	0.8	0.8	1.0	1.3	2.1	1.8	2.4
건설업	13.7	23.7	15.0	13.0	9.0	10.2	9.4
도·소매업	10.1	8.3	10.0	8.1	8.2	8.1	7.0
숙박·음식점업	2.9	3.1	2.4	2.2	3.0	2.9	2.7
운수업	4.2	3.9	4.5	4.1	4.3	4.0	4.5
통신업	2.7	1.6	1.9	2.4	2.7	2.5	2.4
금융·보험업	5.0	4.9	6.2	6.1	7.5	8.8	8.4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4.4	14.1	17.6	18.5	18.2	17.3	12.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7	6.3	6.7	7.4	7.9	8.4	6.1
교육서비스업	7.4	7.0	7.6	7.9	8.4	8.4	5.8
보건·사회복지사업	2.2	1.9	2.6	3.3	3.8	3.9	2.6
기타서비스업	3.3	3.9	4.2	4.2	4.7	4.3	3.7
총부가가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1〉 산업구조 변화 추이

4. 지역의 대미 무역구조

-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가

로서의 위치를 상당기간 유지하였으나,
최근 3번째 교역국으로 전하되었음.

2005년에는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413억 달러와 306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
미 교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4.5%, 수입의 경우
는 11.7%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중 및 대일 교역비중은 점차 상승하고 있음.

〈표 3〉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출·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37,611	27.6	29,242	17.3	8,369
2001	31,211	-17.0	22,376	-23.5	8,835
2002	32,780	5.0	23,009	2.8	9,772
2003	34,219	4.4	24,814	7.8	9,405
2004	42,849	25.2	28,783	16.0	14,067
2005	41,343	-3.5	30,586	6.3	10,7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품목별 교역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3대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로 2005년 기준 대미 수출의 43.9%의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컴퓨터

- 가 차지하는 중화학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88.2%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미 3대 수입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부품이고 중화학제품의 수입비중이 83.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2005년 한·미 주요 수출입품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	8,736	21.1	반도체	5,692	18.6
무선통신기기	5,838	14.1	반도체제조용장비	2,274	7.4
반도체	3,630	8.7	항공기 및 부품	1,646	5.3
석유제품	2,172	5.2	계측제어분석기	1,170	3.8
자동차부품	2,101	5.0	컴퓨터	781	2.5
컴퓨터	1,369	3.3	정밀화학 원료	749	2.4
의류	1,046	2.5	곡식류	726	2.3
철강판	815	1.9	원동기 및 펌프	659	2.1
고무제품	799	1.6	기초유분	600	1.9
총 계	41,343	100.0	총 계	30,586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06년 기준으로 전국의 대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3%, 10.9%인데 비해, 대전의 대미 수출·수입은 18.4%와 15.9%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편임.

〈표 5〉 2006년 대전의 대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대 전		
	대세계	대 미	
	금액(A)	금액(B)	비 중(B/A)
수 출	2,396	441	18.4
수 입	2,390	379	15.9
무역수지	6	6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대전의 대미 수출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2006년 타이어에서 금년 2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83.4% 증가한 냉방기가 차지 하였음.

〈표 6〉 대전의 대미 수출상위 10대 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년 1월~2월	
		금액	금액	증가율
총 수출		441,336	59,486	-13.0
1	타이어	120,888	8,478	-68.7
2	인쇄용지	70,370	10,337	-6.6
3	냉방기	57,674	11,289	83.4
4	축전지	35,444	9,899	97.2
5	연초류	25,166	1,198	104.2
6	모니터	20,494	2,827	-30.8
7	VCR	17,378	3,693	202.2
8	볼펜	5,936	1,470	455.3
9	유선전송장치	5,508	386	153.2
10	필름류	5,346	483	-54.0
(소계)		364,204	50,060	-

- 대미 수입의 경우 대전은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펄프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계측기, 분석시험기 등의 순임.

〈표 7〉 대전의 대미 수입상위 10대 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년 1월~2월	
		금액	금액	증가율
총 수입		379,960	98,569	99.4
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8,476	8,822	293.2
2	펄프	34,286	7,630	42.0
3	계측기	22,642	4,688	50.1
4	분석시험기	19,141	2,806	9.0
5	기타비철금속제품	17,061	1,552	-12.8
6	기타화학공업제품	12,738	2,548	28.6
7	기타정밀화학원료	11,263	1,653	-43.0
8	직접회로반도체	10,209	1,910	5.5
9	공기조절기	9,170	1,312	-3.3
10	부직포	8,813	983	-36.6
(소계)		193,799	33,904	-

II. 한미 FTA와 대전경제

1. 한미 FTA 주요협상 결과

부 문 별	협 상 결 과	비 고
상 품 (공산품·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 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실질적인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	3천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천cc이상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 2003-2005 3천cc 승용차 대미 수출액: 평균 66억불 · 2003-2005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액: 평균 14.4억불 · 수출경쟁력 강화기대
타이어	5년내 관세 철폐	
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쇠고기	40%관세 15년간 단계적 철폐 빠있는 쇠고기 하반기 수입 재개	· 양허: 15년 +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고추, 미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 부여	· 양허: 돼지고기 최장10년

부 문 별	협 상 결 과	비 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수확기에 현재 50% 관세 유지	· 양허 : 오렌지 수확기현행 관세 유지, 비수확기 7년
섬 유	수입액 기준 61% 관세 즉시 철폐 원시기준 적용 예외 부여 우회수출 방지 및 양국간 협력 강화	
서비스 투자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 포괄적 유보	
금융 서비스	· 안전장치 세이프가드(일시 송금제한) 도입 · 공적 역할 국책 금융기관 협정 예외 인정	· 국책금융기관 협정 예외 인정
방송 서비스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발효 3년후) · 방송부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 개방 (단, 외국방송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 송	·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 · 방송쿼터 일부 완화 및 부분적 개방	
통 신	·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유지하되 15%인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내 철폐 (단, KT와 SKT는 제외)	
의약품	· 신약의 최저가 보장 반영 않기로 함 ·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개시 합의 · 의약품 지재권 관련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규정 수준으로 합의 ·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침해 여부검토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	
역외가공	· 역외가공 지역 생산품 한국내 생산품과 동일한 관세 적용	·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지역 혜택
위원회 설 치	· 무역규제위원회 설치 대화채널 구축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치 한국내 상품과 동일한 관세 적용	·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기술장벽 (TBT)	·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원칙 합의	
노동분야	· 국내 노동법 수준 향상 및 집행강화를 위한 제반사항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환경분야	·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 마련	

2. 한미 FTA와 산업 및 투자환경 변화

- 최근 한·미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
 - ▶ 한·미 FTA 추진을 통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 및 대전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의 경우 한·미 양국간 교역에서 고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IT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고기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고, 중소기업 산업군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전체 제조업 수출 중 고기술 및 중고기 기술 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각각 29.3%와 13.5%에서 2003년 55.0%와 22.4%로 증가.
 - ▶ 대미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중고기 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반도체, 항공기부품 등 고기술 부문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고기 기술 수입 비중은 1990년 24.2%→2003년 35.9%).
- 양국간 직접투자의 경우 양국간 교역 추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기술 및 중고기 기술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중에 있음.

- ▶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고기술 산업군이 비약적으로 확대.
 - 제조업 부문 전체 대비 직접투자 신고 누적액 중에서 고기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8%에서 2003년 현재 64.2% 수준까지 증가.
-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재·기계 등 핵심중간재 부문의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
 - ▶ 기계·부품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국제분업구조 하에서 향후 우리 산업의 위상 및 발전을 가능하는 중요한 정책변수로 작용.
 -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의 해외 중견기업, 전문공급업체를 대단위로 유치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부족한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임.
 - 이를 통해 국내 선도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국내 생산·기술혁신체제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 한·미 FTA는 부품소재 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 및 ASEAN 국가들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미 FTA는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 및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저생산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 국제적으로 제조업의 단순 생산기능이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경쟁우위의 핵심요인이 사업서비스, R&D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 활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R&D중심지인 대전지역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서비스 허브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 특히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및 물류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의 달성을 촉진.
- ▶ 법률·회계·의료·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식기반 서비스를 동북아 역내 수출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
- 한·미 FTA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 ▶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품목별 보호 효과 감소에 따라 품목별 영농가구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부문내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추정됨.
- ▶ 적절한 정책적 배려와 결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

- 업으로 우리나라와 대전지역의 농업구조를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품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일본 등에 농산품 수출 확대 추진.
 - 국내외 농산물·식품시장에서 청정·유기농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품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품질 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상황.
 - 일본·대만·홍콩·싱가폴 등 아시아권 수출시장이 넓어 고품질 과수·화훼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모색.
 - 생명공학(IT), 정보통신기술(IT) 등 농업에 응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정부차원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가부문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보완하고,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투자계획을 획기적으로 조정.

III. 한·미 FTA의 대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미 FTA 체결이 대전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

- 대전은 대도시 근교농업 특성상 다양한 시장접근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쇠고기 등 축산업 타격 예상
 - 육류 : 단기간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우농가의 생산의욕 저하와 불안 심리로 홍수출하 발생시 피해 예상
 - 대전시 한우사육 407농가 4,418두, 돼지 22농가 4,945두, 닭 243농가 168,517두 사육
 - 과일류 : 사과, 배의 20년내 관세 철폐시 배는 우리시 생산주 품목으로 다소의 피해예상(포도, 800여농가 223ha / 배 600여농가 275ha)
 - 두류, 서류 : 식용감자, 대두(콩)는 우리시 생산량은 많지 않음
 - ※ 농업현황 : 농가호수 및 인구 8,657호 28,095명(시 인구의 1.9%), 경지면적 5,626ha

2) 제조업

-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와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제공 예상
 - 2006년 우리시 수출액 23억 96백만 달러 중 미국에 4억4천만불(18.4%) 수출
 - 주요 대미수출 10개 품목이 대미수출액의 82.5%임
 - ※ ①타이어 ②인쇄용지 ③냉방기 ④축전지 ⑤연초류 ⑥모니터 ⑦VCR ⑧볼펜 ⑨유선전송장치 필름류
- 대전지역 수출은 1,600여 품목 및 171개국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대덕특구내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감안하면 긍정적 작용
 - 주요수출국 : 미국(18.4%), 중국(16.2%), 일본(9.7%), UAE(5.8%), 러시아연방(5.3%)
 - 산업별 수출현황 : 1차산업 16.3%, 공산품 83.7%

〈표 8〉 대전의 수출 현황 (2006 기준)

(단위 : 달러, %)

구 분	국가별		구 분	권역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계	2,395,862	100	계	2,395,862	100
미국	441,336	18.4	아시아	1,092,686	45.6
중국	387,374	16.2	북미	464,736	19.4
일본	231,387	9.7	유럽	413,123	17.2
UAE	139,483	5.8	중동	274,444	11.5
러시아연방	126,918	5.3	기타	150,873	6.3
기타	1,069,364	44.6			

3) 서비스업

- 대전시의 산업구조는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산업구조로 금융·법률 등 기업지원 서비스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예상

- 산업구조('05 GRDP 기준) : 농림어업 0.3%, 광업 및 제조업 17.3%, 기타 82.4%

〈표 9〉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90,366 (100)	405,311 (100)	9 (-)	218 (0.1)	6,536 (7.2)	47,367 (11.7)	83,821 (92.8)	357,726 (88.2)

2. 한미 FTA가 대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대전지역의 대미 수출은 대전은 감소 추세에 있음
 - 대전은 금년 2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한 5,948만달러 기록

〈표 10〉 한미 FTA가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 기 효 과	장 기 효 과
수출증대	21.8%	3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전국 수출업체 설문조사 결과 (2006년8월)

- 대전의 섬유류 수출은 2006년 전체 수출액 대비 0.3% 비중에 그치고 있어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한미FTA 체결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류, 가죽·고무·신발제품 등임
 - 대전의 경우 자동차부품 관련 직접수출은 미약한 수준이나 국내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대비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생산 증가 예상

- 금번 한미FTA 타결에 따라 대전충남의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10억6천7백만불, 중장기적으로는 16억5천1백만불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11〉 대전지역 주요 업종별 대미 수출증대 효과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2006년 실적	수출증대 효과	
		단기	중장기
전기전자제품	105	18	35
기계류	76	14	28
철강금속	3	0	0
화학공업제품	77	27	20
광산물	0	0	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133	29	47
생활용품	10	3	3
농림수산물	30	0	0
섬유류	1	0	0
잡제품	6	1	2
계	441	92	135

자료 : 한미FTA에 따른 대미 수출증가를 예측 설문결과에 대한 실적 반영(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2) 수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체결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의약품 및 화장품, 기계류, 농수산물 등이나 지역내 총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
 - 대미 수입 최대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수입증대 효과는 없을 전망
 - 전국적으로 대미 수입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류의 경우, 이미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유리가공기계 등을 주로 수입하므로 국내 산업피해는 적을 전망

- 대전지역의 경우 의약품과 화장품 수입비중은 각각 0.1%에 불과했지만 향후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 업계 피해가 예상됨
- 대전은 농업 의존도가 낮은 편이고, 농산물 수입은 관세철폐뿐 아니라 검역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는 않음
 - 다행히 쌀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지역적으로 축산,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됨

〈표 12〉 우리나라 제조업 업종별 한미 FTA 영향

산 업	평균관세율(%)		수출증대 효과	수입증대 효과
	한국	미국		
자동차	7.9	2.7	○	△
기계	6.6	1.9	○	○
석유화학	6.1	4.3	△	△
의약품/화장품	6.0	1.5	△	◎
섬유/의류	9.7	8.6	◎	×
전자	5.0	1.6	○	△
철강	0	0	△	△
고무/고무제품	7.1	2.3	◎	△
가죽/가죽제품	8.0	4.3	◎	△

◎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표 13〉 대전지역 주요 업종별 대미 수출증대 효과

(단위 : 백만달러)

품목	2006년 실적	수출증대 효과	
		단기	중장기
전기전자제품	105	18	35
기계류	76	14	28
철강금속	3	0	0
화학공업제품	77	27	20
광산물	0	0	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133	29	47
생활용품	10	3	3
농림수산물	30	0	0
섬유류	1	0	0
잡제품	6	1	2
계	441	92	135

〈표 14〉 2006년도 대전의 대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대 세계(금액(A))	대미(금액(B))	비중(B/A)
수출	2,396	441	18.4
수입	2,390	379	15.9
무역수지	6	62	-

〈표 15〉 대전의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년 1월~2월	증가율
	총 수출	441,336	59,486	-13.0
1	타이어	120,888	8,478	-68.7
2	인쇄용지	70,370	10,337	-6.6
3	냉방기	57,674	11,289	83.4
4	축전지	35,444	9,899	97.2
5	연초류	25,166	1,198	104.2
6	모니터	20,494	2,827	-30.8
7	VCR	17,378	3,693	202.2
8	볼펜	5,936	1,470	455.3
9	유선전송장치	5,508	386	153.2
10	필름류	5,346	483	-54.0
	(소계)	364,204	50,060	-

〈표 16〉 대전의 대미 수입상위 10대 품목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년 1월~2월	
		금액	금액	증가율
	총 수입	379,960	98,569	99.4
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8,476	8,822	293.2
2	펄프	34,286	7,630	42.0
3	계측기	22,642	4,688	50.1
4	분석시험기	19,141	2,806	9.0
5	기타비철금속제품	17,061	1,552	-12.8
6	기타화학공업제품	12,738	2,548	28.6
7	기타정밀화학원료	11,263	1,653	-43.0
8	직접회로반도체	10,209	1,910	5.5
9	공기조절기	9,170	1,312	-3.3
10	부직포	8,813	983	-36.6
	(소계)	193,799	33,904	-

IV. 한미 FTA와 대전지역의 과제

1. 정부의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 검토

[전략 1] 한·미 R&D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1)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단 총동원
 - 2007. 4~12월까지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6회의 무역사절단 파견 및 2008년도 지원규모 확대 추진
 - 자동차·IT·전자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에 국내기업의 참여 지원
- FTA에 따라 높아진 국가 신인도를 활용, 미국내 한국상품 붐 조성
 - * 'Premium Korea' 홍보관 운영, 2008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뉴욕섬유대전 등
-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홍보활동 강화
 -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개최시 미국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국내기업과의 무역 환경 개선 홍보

2)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 신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전략 추진
 - KOTRA 무역관별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 마케팅 지원
 - 각 무역관별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 발굴, 소비자 기호도 지속 조사

- 미국시장 신규 거래패턴에 맞춘 선도적 사업 발굴 지원
 - 미국시장의 소프트화, 융합화에 맞춰, 제품을 기획·마케팅하는 미국 기업과 국내 공급업체를 연계하는 Pull형 사업지원
 - 기술협력 및 마케팅이 융합된 전문 전시회 및 시장조사활동 지원

3)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시장 진출이 힘든 폐쇄적인 미국정부조달시장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 KOTRA 현지무역관을 활용, 미국 정부조달시장 제도 분석 및 입찰정보 입수·제공
 - 주요 전략품목(생활용품, 정보보안프로그램, 화학제품 등)에 대해 국내 및 미국 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미국지사 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강화
- 미국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비즈니스센터(현지무역관) 설립 및 공동 물류기능 활성화를 통한 현지마케팅 능력 제고 지원

[전략 2] 한·미 R&D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1) 외국인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
 - 지상파 방송 영어자막 시범제공 등 외국인투자자의 언어기반 확대
 - 법령 개정사항 등 영문 정책자료 제공 및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시스템(G4F)의 생활정보(주거·교통·의료) 확충
- 선진관행 정착 등을 통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 관세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물품명세서 검토·확인시점 변경(선적 전 → 수입신고 전 검토·확인 신청) 등 관세 감면제도의 개선
 - 회사설립 후에도 자본재 현물출자 완료화인 특례 인정
- 교육·주거·병원 등 외국투자자들의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학교 시설 신·증축,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외국인학교 운영 활성화
-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및 주택 임차 원활화

- 조기 해소 곤란과제의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및 신규 개선과제 지속 발굴
 - 쉐정부부처 관련과제 등 제도?관행의 개선 우선분야에 대한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

2) 국가별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 (미국) 대미수출 경쟁력이 높고 인적 자원 등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 기업 유치
 - (일본 및 EU)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 유치
 - 미·일·EU간 투자진출 경쟁 유도

3)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활성화

-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지정 및 운영지침 개정
 - 지자체가 계획중인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 적극 검토
 -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시점·기준 등 불명확한 규정 개정
- 조세감면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분야의 조세감면 결

- 정에 대한 이익신청 제도 신설로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 R&D센터 현금인센티브 지원요건 현실화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 등 그간 제도운영의 미비점 보완
- 투자유치 효과가 큰 초대형 프로젝트별 맞춤형 범정부 TF 운영

[전략 3] 한·미 R&D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 1)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 한·미 연구자, 기업간 네트워킹 및 고급 기술인력 적극 유치
 - 기술 관련 학회, 세미나, 전시회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자들과在美 기업·연구자들간의 교류 기회 제공
 - 골드카드(Gold Card)제도 등을 활용, 미국 기술개발인력을 적극 유치
 - 미국기업 R&D센터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인력 양성
 - R&D센터 고용인력 인건비, 본사에 파견·교육 훈련비용 지원 검토

〈표 17〉 FTA 체결 이후, 유치대상 미국기업 R&D센터

업종	유치대상 R&D 센터
통신장비	Cisco, Lucent, Avaya, Broadcom, Qualcomm, Agere
생명공학	Pfizer, ISIS, Affymetrix, Johnson & Johnson
항공우주	Boeing
미래형 자동차	Quantum, UTC Fuel Cell
첨단소재	Kodak
반도체 장비업체	Applied Material, KLA-Tencor, Mattson, Lam Research, Novellus
Fabless	NVDA, IXYS
지능형 로봇	iRobot, Intuitive Surgical System, Trimble Navigation limited

- 2) 한·미간 공동 R&D 및 기술이전 촉진
-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공동R&D 지원 강화
 - 美 상무성, NIST 등과 협의하여 과제간 매칭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R&D협력방식인 공동연구기금 조성 검토
 - 미국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촉진
 - 우수 기술을 보유 미국 기업·연구소와 국내 기업들과의 매칭 지원

- 기술이전·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및 정보·인력교류 촉진
- 美단체표준 제·개정시 우리나라 전문가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및 우리에게 불리한 표준의 개정활동을 병행 추진
- 온라인 시스템 상호연계 등을 통해 표준·인증·강제기술기준 관련 정보를 對美수출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3) 국내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 단 기 : 미국과 기술열위 품목에 대한 R&D 지원을 집중, 우리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최대한 유지(시장방어)
- ◆ 중장기 :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의 원천 핵심기술에 R&D 집중, 미국시장 진출 계기로 활용(시장진출)

- 단기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 기술력 열위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R&D 지원 대폭 확충
- 양허기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고려, 지원우선 품목을 선정하여 금년 중 활용 가능한 예산 집중 투입
-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성장동력산업 또는 첨단산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확보 노력을 경주

- 2008년 예정인 전략기술개발 사업(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15개) 기획시, 美시장 진출에 필요한 원천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2008년 5천억원)
- 기술력 부족으로 장기간 양허가 결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도 수립
- ▶ 필요시 미국과 전략적 기술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전략도 병행

[전략 4]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통한 보완대책 추진

◆ FTA 체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對미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수요 발생에 대응 필요

-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일정요건 하에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 마련

1)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경영개선 등 지원
-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무역조정지원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구성(2007.4월),

무역피해판정을 담당할 '무역위원회' 조직 및 인력확충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內), 'FTA신속지원팀'(고용지원센터 內)설립으로 무역조정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종합서비스 제공

2) 사업전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
-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 정책자금 확대 및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융자지원
 -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에 준하는 세액 감면
- 컨설팅 제공, 성과분석 등을 통한 사업전환 지원 효과성 제고
 -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조정·개발 등 고용안정 지원 강화 및 공장설립 절차대행 지원, 컨설팅 등 연계지원체제 강화
 - 온라인 운영시스템 구축(9월)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전담코디네이터 지정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시행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보완·추진

- 한·미 FTA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산업전반으로 확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협력지수 개발로 상생협력의 지속적 관리체계 확보
 - 산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
 - 자동차 : 협력사의 엔지니어들을 대기업에 파견, 설계지원 등 공동연구 수행
 - 조선 : 대기업 전체가 우수 부품업체를 선정, 핵심부품의 공동개발·구매
 - 석유화학 : 석유화학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 철강 : 포스코(포항)의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광양지역 및 철강업계로 확대
 - 반도체·디스플레이 :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컨소시엄 중심의 특허 공유시스템 도입
 - 유통 : 유통-납품업체간 글로벌 소싱 조직 구성
 - 에너지 : 대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 및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 중소기업 비정규직 교육, 직장보육 등에 대한 대기업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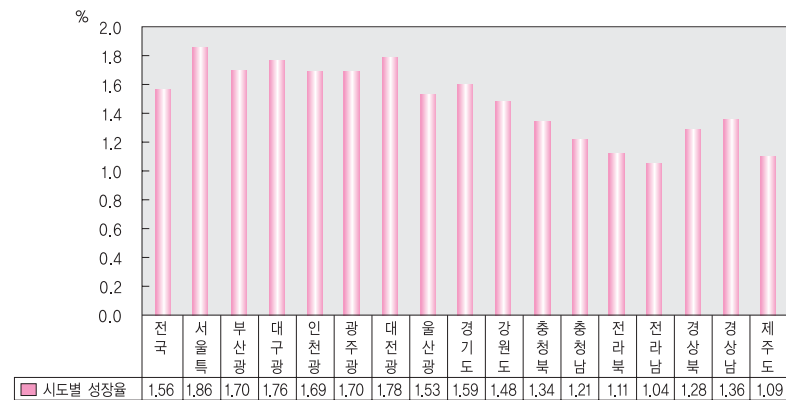
- 지역전략산업의 FTA 효과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시행
 -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연계성을 강화
 - ▶ 「지역산업로드맵」 수립 및 권역별 '상생형 지역혁신 클러스터 모델' 개발

2. 한미 FTA체결과 지역경제 발전방향

-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생존·번영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
- 정부는 조속한 대안마련과 협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조속히 해소
 - 특히, 농민과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후속조치 필요
 -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은 물론 농축산 등 소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임
- 대전지역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기타 서비스분야 등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추진
 - 특히, 한미 FTA 시대에 대비한 미래 산업육성과 제조업은 물론, 지역산업전반의 후속 대응방안 및 각종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 아울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방

- 안 등 정부의 후속대책과 연계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
- 대전의 경우 서비스 비중(70%대)이 높아 교육, 의료, 법률, 방송 등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어려움이 예상됨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시도별 성장률 예측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추정한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별 성장률 증대효과 기초로 하여 2004년도 시도별 GRDP를 기준으로 시도별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은 전국 평균 생산증가효과 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임
 - 서울,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는 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대전은 성장률이 1.78로 서울 1.86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미 FTA를 계기로 지역내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는 단순한 수출증가보다는 경제선진화를 위한 선택으로, 투자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
 - 미국 기업을 비롯해 선진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지역이 기술발전, 고용 창출효과 등 지역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음



〈그림2〉 한·미 FTA 이후 산업구조 차에 따른 시도별 성장률 전망

- 대전충남은 유리한 교통망과 훌륭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한미FTA를 지역 경제발전 및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3. 한·미 FTA 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제조업 분야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 경영·기술컨설팅,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정보 제공
- 주요 수혜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미국시장 진출 유망업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미국 관세가 즉시철폐된 품목 중심으로 신규 제품 개발 노력
- 대미 수출품목의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신시장(Nitch Market)을 발굴하여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
- 공격적인 마케팅 및 PR 능력 제고
 - ▶ 한·미 FTA로 제고된 국가 이미지를 제품 이미지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화 전략 추구
- R&D 비중 확대로 전반적인 차별화 제품의 생산능력 제고

• 대미 마케팅 및 시장개척 활동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전시회 참가 확대
- 시장개척단 파견 등 미국시장 개척 지원
- 미국 설비 개보수 시장 등 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 ▶ 선진국의 경우 기계판매 수익성이 2%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의 수익성은 15% 수준으로 높음
- 미국 기계류 시장에서의 제품 다양성 추이에 대응
- ▶ 최근 미국 시장은 고가 전용기기 위주였으나 중저가형 범용기기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 사무기기, 특수목적기기 및 엔진, 펌프 등의 품목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2) R&D 및 벤처기업 분야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 반도체 장비 등 미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추진
 - ▶ 공동연구과정에서 KAIST, ETRI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한·미 FTA를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최대한 활용
- 수출 주력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Flexible 디스플레이, 홈네트 워크 등에 대한 R&D확대 및 시범사업의 대덕특구내에서의 집중적인 추진
- 기술혁신 주체간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혁신 성과 공유
- 지역의 혁신주체 및 지원기관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 단일표준 제정, 공동 부품개발, 지적재산권 공유 활용 등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확대사업 추진에 대덕특구내 유수의 벤처기업 참여 증대

- 생산설비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 기업의 첨단제조 및 생산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 유도
 -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생산설비 개발 및 설계기술 고도화에 대한 R&D 투자 지원

3) 투자 분야

-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기회 증진
 - 한미 FTA를 계기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전지역의 연구개발 인프라 및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KAIST, ETRI, KRIBB 등 국가의 중핵적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IT, BT, NT 등 산업인프라를 강점요인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 및 고기술 기업 유치에 주력

〈표 18〉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별 직접투자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962~2005
농·축·수산업 및 광업	-	-	-	-	-	156
제조업	259	220	71	323	571	6,549
서비스산업	746	313	496	2,747	1,409	9,311
도·소매(유통)	363	88	166	61	46	2,190
금융·보험	202	112	160	2,549	1,007	5,048
부동산·임대	34	38	100	35	25	310
비즈니스서비스산업	93	67	62	82	240	1,089
전기·가스·수도·건설	2	47	4	-	25	421
합 계	1,007	580	571	3,070	2,004	16,437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전망』, 2006

- ▶ 지역 농산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브랜드화
- ▶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
- 농외소득 증대 방안
 - ▶ 농가소득의 절반이 농업소득이고 농업소득의 절반이 쌀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소득 구조를 바꿈
 - ▶ 농외소득이 소득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개방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함

-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주체가 되는 농업경영체의 창출
 - ▶ 경쟁력을 갖춘 농업 경영자 또는 농업 기업가로 육성하여 경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게 함
 - ▶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창조적 농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 투자통상본부 위상 강화와 대미 투자유치 업무 및 기능 보장

-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지역농축산물 판매촉진
 - ▶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표준화, 출하 전 육질진단 등

4) 농업분야

- 중앙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기초로 우리시 후속대책 수립
 - 중앙정부 기본방향 : 피해품목의 최대한 소득보전 신속한 구조조정 촉진,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대전시 실정에 맞는 자체 대응방안 강구 시행
 - 대전근교농업·농촌발전5개년계획의 내실 추진('06~'10) : 10개 부문 65개 사업
 - 경쟁취약농가 구조조정 지원 및 농업경영안정 지원
 -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책 추진

- 농업분야 발전대책
 - 취약 품목 보호 및 피해보상
 - ▶ 정부의 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충북내의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함
 - 경쟁력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품목의 적극 육성
 - ▶ 시장개척단 및 식품 박람회 등을 통하여 시장접근기회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친환경·고품질화 등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

중구의 문화도시 육성 방안



이은권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I. 들어가기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새로운 시대는 웰빙을 논하는 시대이다. 웰빙은 우리말로 참살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20세기까지 잘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문화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와 문화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두 축이지만, 아무리 경제가 충족되었다고 해도 문화를 모르면 야만인이다. 문화마인드가 없으면 참살이하고는 거리가 멀다.

경제가 충족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비형의 삶은 일견 즐거운 삶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것은 동물들의 행태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쾌락의 역류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는 모든 생활의 방편과 가치 이념 등이 하나로 통합된 총체적인 것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촌은 지금 인터넷을 통한 저급한 문화의 범람으로 각종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부도덕한 포르노물이 에이즈확산과 청소년을 비롯해 기성세대까지 파괴시키고 있다.

저질문화와 정신분열, 확산되는 폭력 등을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진정한 문화는 상생의 문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만이 웰빙의 참 맛을 즐길 수 있다.

이제 선진국을 향해가는 한국인들도 모두 진정한 문화마인드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전통문화국가답게 우리의 혈맥에 도도히 흐르는 정신이었던 전통문화를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바로 이러한 문화시대에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다. 주5일 근무시대, 웰빙시대를 외치는 요즘 우리 고장 대전의 중심지인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을 주목해야 한다.

한 때는 대전 원도심인 대흥동(大興洞)이 둔산의 신도심 개발에 밀려 침체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 다시 크게(大) 일어날(興)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 중구에서는 대흥동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구행정을 책임진 청장부터 확고한 문화마인드를 지니고, 모든 구청 직원에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언사를 쓰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계속 역설하고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지금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II. 대전 중구의 문화인프라

1. 천혜의 조건 구비

1) 사통팔달의 교통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핵심

도시다. 이미 1993년에 대전엑스포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지는데다가, 2002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까지 개최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대전은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등 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명당으로 인심이 후덕한 살기 좋은 동네다. 행정중심도시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인들의 내방이 폭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흥동은 대전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어 금상첨화다. 대형주차장도 마련 중이어서 자가용과 버스 등을 타고 오기 쉬운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2) 화랑 등 각종 문화 구비

대전시는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유성구 봉명동 온천로와 함께 대흥동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중에서도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화랑과 표구점, 필방, 화실, 재료상, 전시장, 찻집, 한지공예, 와이어공예, 도자기공예, 칠금공예에다가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되는 초크아트(흑판에 분필로 그림 그리는 예술) 등 생소한 분야까지 진출해 있는 문화의 보고다. 뿐만 아니라 화가, 음악인, 국악인, 도장의 명장 등 예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야말로 문화관련 시설과 업종이 집

중된 명실상부한 '대전의 인사동'이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사동, 광주 금남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문화예술의 명소로 손꼽힐 정도로 화랑만 10개가 넘을 정도였고 골동품가게, 화방, 표구사 등이 많아 젊은이들이 연일 모여 토론하는 생기가 도는 명소였다.

최근 대흥동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호응하듯 화랑이 잇따라 개관되고 있어 예술인과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중구청 앞의 오픈 스페이스(관장 김영기)와 현대갤러리(관장 김경숙)가 단독 건물을 마련하여 화랑을 오픈한 것이다. 이 화랑들은 경제논리를 떠나 예술인과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 휴식 공간을 개방하여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2. 문화마인드의 확립

1) 문화도시 조성의 집념

중구는 도시특성상 문화예술의 거리 밖에 승부를 걸만한 게 없다. 공장 입지가 부족하여 산업화와는 거리가 멀다. 뿌리공원, 대전동물원, 보문산, 사정공원, 유화당, 단재 신채호생가 등 벨트화된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다. 필자는 “중구청장이 되어서 문화도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씨앗을 뿌리면 여한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멋진 문화예술의 도

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마인드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후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꽃이 아름답게 피워지기를 갈망한다.

2)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호응

지난 3월 중구청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문화예술발전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 자문단은 학계와 종합예술, 음악, 연극, 건축, 영화, 무용, 연예, 문학, 공연, 국악, 서예, 청소년 분야 외에 중구 실무자와 중구의회 의원, 상가번영회장 등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도시 만들기에 일조할 생각이다. 기존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행정과 예술인들이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화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면 개통과 더불어 중구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등 원도심 중심가가 들쭉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설무대에서 각종 공연이 열린다. 경쾌한 록음악에 기타와 드럼,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가 울려 퍼지면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진다. 오다가다 공연을 보는 시민들도 흥이 절로 난다. 대흥동은 서울의 대학로처럼 활기가 솟아난다. 앞으로 청소년층은 물론 중장년층을 위한 7080 노래 등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연중 계속 됨에 따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다.

3) 문화인재의 꾸준한 양성

특성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려면 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도 중요한 일이다. 모든 역사에서 보듯이 결국 인재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임무는 원로들과 각 대학, 그리고 문화단체들이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를 맡은 행정가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 타성에 젖어 적당히 하고 자리보전에만 연연한다면 불량품밖에 나올 게 없다.

III.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방안

1. 문화예술의 거리 만들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것은 필생의 사업이며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야 할 사업이다. 뉴욕이나 파리같은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다.

은행동의 으능정이 거리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문화의 거리로 성장했다. 거기에다가 대흥동의 문화예술의 거리를 멋지게 조성한다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입안된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힘입어 하나씩 진척시켜 갈 것이다. 중구는 대전고 앞의 예식장 건물을 매입하여 올 하반기에 다목적 복지회관과 중구문화원을 이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옛 중구청 부지에 서울의 마로니에 공원을 능가하는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억원 상당의 민자유치로 이르면 올 7월에 공사를 개시하여 연말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 공원에는 지하 3층 규모의 대형 주차장도 만들어 가족 관광객이 찾아와 마음껏 놀고 즐기고 쉬다가 가도록 할 생각이다. 대흥동에 오면 종합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2. 명품도시의 건설

대흥동을 명품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의 명품도시를 본받아야 한다. 건물 하나 간판 하나에 온 정성과 예술적인 혼과 감각을 불어넣는 장인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건물을 절대로 똑같이 짓도록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천편일률적인 성냥곽같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구에는 대흥동 뽕죽집을 비롯해 근대건축물의 유산이 아직도 있다. 이런 유산을 잘 보존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나 건축물에도 명품 건축을 지향한다면 쾌적하고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대전시의 202개 도시 재정비 구역 중 절반인 94개 구역이 우리 중구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인근 재정비구역과 연계해 랜드마크화하여 명품건물로 유도화할 계획이다. 명품 건물이 들어서면 대전의 산과 천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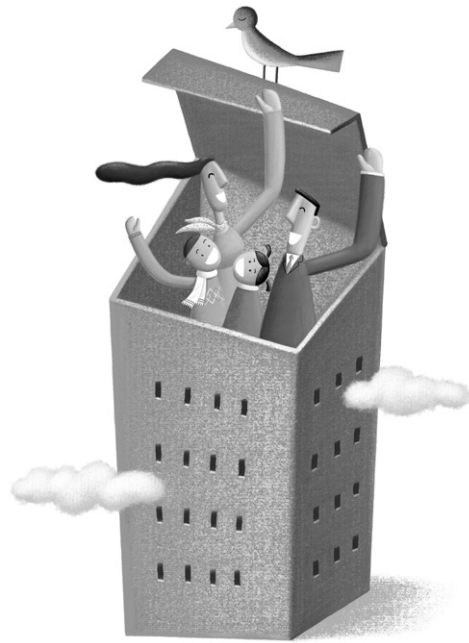
우려져 도심의 모든 곳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

IV. 맺음말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을 흔히 '문화의 용광로'라고 한다. 오후 3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현장 티켓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 자체가 하나의 멋들어진 풍경이 되고, 24시간 다니는 전철을 기반으로 하여 귀가의 압박 없이 밤새도록 클럽과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종 공연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명

물인 야경과 함께 뉴욕은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이다. 이른바 뉴욕의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으로 풍요로운 문화 인프라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 손색이 없다.

필자는 자주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을 걷는다. 중구의 행정 책임자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먼 훗날 후손들이 이 거리를 뉴욕이나 파리처럼 사랑해주고 선조들이 헛살지 않았음을 알아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머지않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설 우리도 뉴욕 못지않은 문화의 거리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애정을 기대한다.



대전정책동향

도시교통동향

김흥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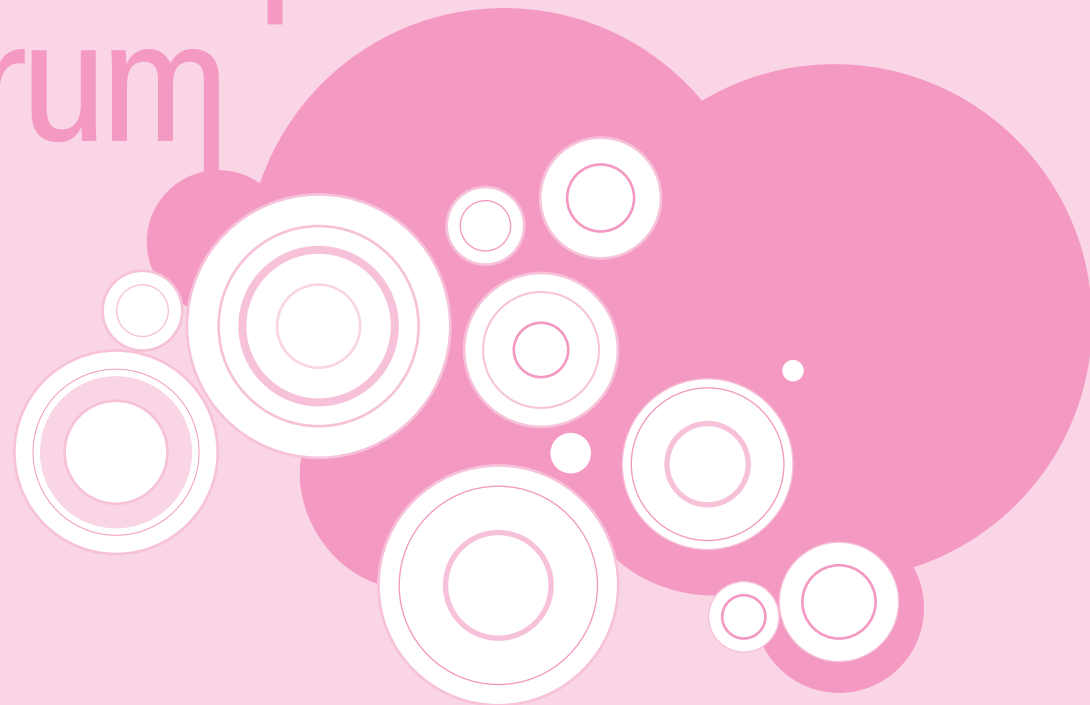
행정자치동향

정환도 / 대전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대전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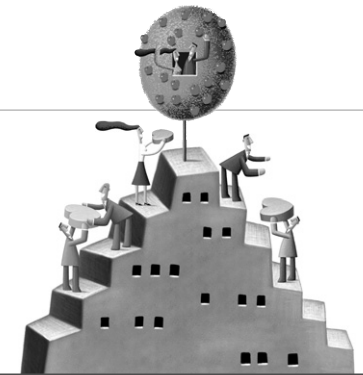
김기희 /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Forum



도시교통동향 ...

김흥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



초고층 빌딩과 도시계획 대응방안

최근 국내외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층 빌딩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랜드마크를 이용한 도시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기술의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주변 경관에 부정적 영향, 초고층의 적정 입지선정, 방재·안전 대책, 기존 법·제도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외부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이용, 대중교통이나 보행 환경의 개선, 오픈스페이스 등 편의시설과 수준 높은 문화시설의 연계 등 지구적 차원의 공간계획 유도 기법과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도심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명품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건축물' 중의 일부가 초고층으로 발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시 용도용적제 시행 추진

대전시가 용도용적제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체계적인 도시재개발을 위해 반드시 용도용적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미 3년 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용도용적제의 시행은 2007년 5월 임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도용적제란 일반적으로 '주거용도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즉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대전 네거리 부근 상업지역, 유천동지역, 용전동 일대, 용문동 일대, 선화동 일부분 등 전체 상업지역의 34%이며, 도축지구나 원도심 상업지역은 용도용적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자치동향

정한도 / 대전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서남부지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추진

서남부택지개발에서의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도입

최근 대전시는 우리아이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생활쓰레기의 자동수송 및 처리시스템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남부택지개발사업 대상지구에서는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1단계 지구(2만3천세대 /64,300명)에 쓰레기 수송관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서남부개발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 (ex:공동주택에 어울리는 투입구 계획과 설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소각장 및 집하장위치, 공동주택 배치설계에 따른 지하관로 위치조정 등)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서남부지역의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지역은 대전시 그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 쓰레기 없는 거리 및 쓰레기차량이 다니지 않는 깨끗한 거리를 계획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먼저 대전발전연구원 환경정책 전문가와 함께 서남부지구 첨단 쓰레기 수송관로시스템 도입방안 검토(2006. 9)와 관계기관 및 부서 합동 현지견학(2006. 9), T/F팀 구성(2006. 10)하였다. 또한 3개 시행사(토공, 주택공사, 도공) 자동집하시설 도입 합의(2006. 11)하였으며, 이에 따른 T/F팀 관계관 회의개최(2006. 12)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구성

모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구성은 크게 2-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생활폐기물이 투입구에서 처리시설까지를 연결되어 수송을 담당하는 지하관로부분이다. 다음으로 지하관로로 수송된 생활폐기물이 분리 및 처리의 형태를 가지는 종합선별시설 및 소각시설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소각에서 얻게된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지하관로시스템이란?

여기에서 지하관로시스템이란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하여 중계 시설로 운송한 후 대형트레일러에 의해서 최종 처분장 혹은 소각장으로 운송하거나 직접 연결하는 시설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용인수지구, 송도신도시, 서울 뉴타운 등) 추진하고 있다.

지하관로시스템과 일반수거시스템의 비교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지하관로수송시스템과 일반수거시스템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에 의해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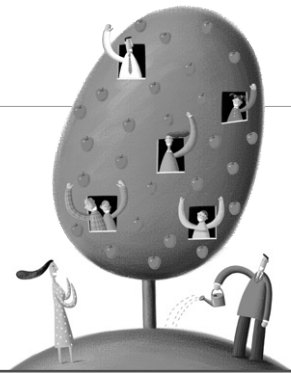
구분	지하관로수송시스템	현재의 수거시스템
수집	- 지정된 투입구에 투입 - 종량제 봉투사용(전자칩 등)	- 지정된 장소에 야적 - 종량제 봉투사용
운반	-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수시운반 - 악취후시에도 수거	- 인력 및 차량이용 - 통상 2-3일에 1회수거
환경	- 쥐와 파리 등 해충서식불가 - 길거리 쓰레기가 없는 쾌적환경 - 음식물 등악취발생 해소	- 해충서식 등의 혐오감 - 적체시 침출수, 악취발생 -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관리	- 관리인원 최소화 - 저렴한 운영관리비	- 수거인력 및 차량다수 소요 -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대란 우려

이상과 같이 지하관로시스템에 의해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매우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있다. 특히 시스템의 중간 관로 전환기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가능함에 의해, 도시미관, 거리환경, 쾌적한 음식물 쓰레기문화정착 등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관로수송시스템에 의해 소각 처리를 검토함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 중간의 관로 전환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도 가능케 된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뿐만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고밀도 주거형태의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다.

대전경제동향

김기희 /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최근 대전경제 동향

최근 대전지역의 경기는 2006년 12월 경기 하강국면에서 2007년 1월 들어 상승국면으로 반전하여 경기가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2월부터 경기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기업체의 업황전망은 제조업부분에서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하였으나 4월 들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은 호전되는 모습이며, 이같은 추세는 5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물부문에 있어 산업활동은 3월 들어 반도체 업종 등의 재고조정, 영상음향·통신업종의 출하가 다소 부진하였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업종에서의 호전으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소비재 판매는 설 명절효과가 두드러졌던 2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대형판매점을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시중은행 수신이 월말 휴일에 따른 법인세 납부 및 대출결제 이월 등으로 수시입출식 예금 등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4월 초순 국고채 등 채권리리가 외국인 대량 국제선물 매도와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어음부도율 및 부도금액은 2월과 같았으나 예금은행 산업대출비중이 지난달보다 증가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은 지난달에 이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부분에서는 수출이 일본, 유로지역, 중국 등의 견조한 해외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무역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축소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기타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이 최근 사업서비스 등 건설한 서비스업 활동을 반영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고 농림업의 무급가족종사자 경제

활동 참가 축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실업자수가 전년 동기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물가는 4월 중 공공요금 등의 인상과 라면, 금반지 등 일부 공업제품 등의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대전지역 경제는 상반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 속에서 하반기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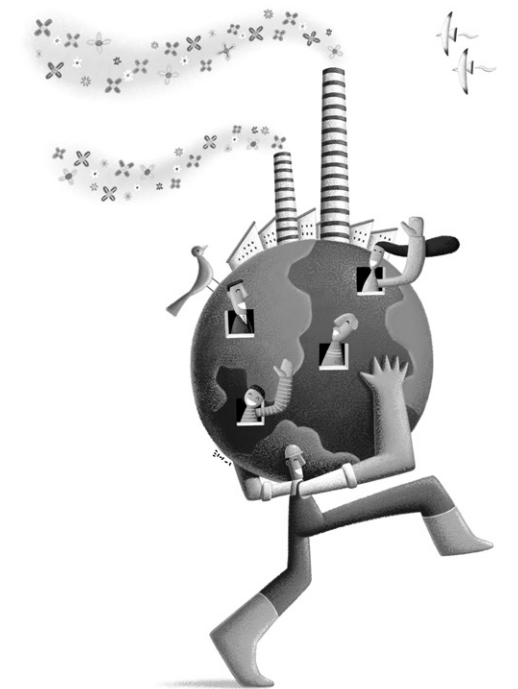
대전시는 하반기 성장세를 시현하기 위해 내수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등 거시·미시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진한 민간부문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전경제발전 중장기 비전·실행계획 수립

지난 2월까지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로 마무리 된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민선4기 경제운용 비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는 3월 년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2016년까지 6개 분야 158개 과제에 대하여 4조 2,21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집중육성 등 시급한 경제현안과제에 대한 선도적 사업이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충청권 경제협의체 구성·운영

2007년 1월 대전, 충남, 충북이 충청권 경제협의체 협약식을 갖고, 3월 경제협의회 창립 총회를 거쳐 3개 시·도가 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제협의체는 기업인, 경제전문가, 경제단체장 등 30명~45명의 민간경제주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무협의회는 안전발굴 및 검토 등의 기능을 하며, 사무국은 정책집행 등의 기능을 하며 대전발전연구원에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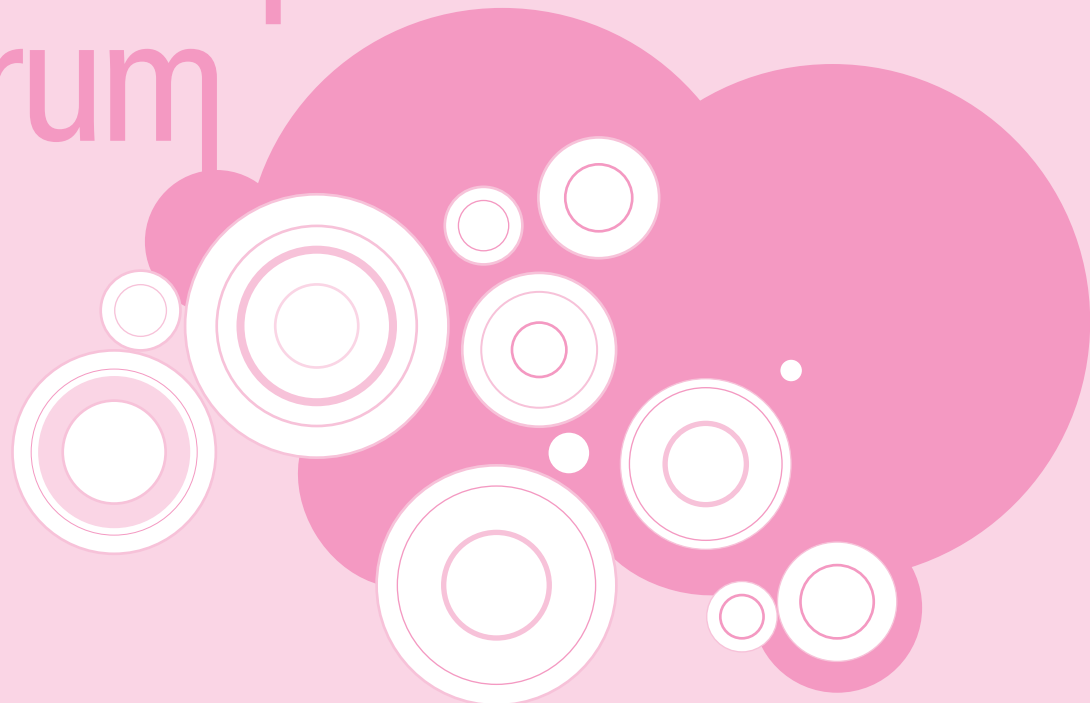




.....
지상토론회

충청권 공동발전전략

Daejeon Development Forum



●●● 충청권 공동발전전략

대전발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은 4월 19일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공동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대전광역시청 및 시의회위원장,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및 3개 시도관계관, 3개 시도연구원 원장 및 연구원, 한국자치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기타 지역내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 및 충청권발전특별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

충청권공동발전의 기본구상 및 추진 전략

육동일 / 대전발전연구원장

-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문제, 제도적 장치나 협력 기구의 문제, 행위자들의 의지와 능력, 가치관의 문제, 자원수준과 문화, 이기주의 극복 문제 등이 성공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등을 공동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기, 전북과 함께 이 기회를 통해 닫혀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대학간, 기업간, NGO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각 지역권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 대전시의 경우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북과 협력을 통해 자금, 인력, 기술 등을 교류해야 하며 특구개발의 파급효과가 대전을 넘어 충남·북까지 극대화 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충남의 백제권·내포문화권 개발을 비롯한 4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역시 대전과 협조해 나갈 때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공동협력사업의 발굴 기준으로는 3개시도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3개 시도 공

유익 창출이 큰 분야,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 경제 이익을 피부로 느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등이 될 것이다.

-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는 공간재편성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공동구축, 충청권 광역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특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 대응, 청주공항 활성화 공동추진, 충청권발전특별법 등 제도적 조치가 있으며, 현안 이슈와 상호발전과제들을 정립해서 새로운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의 근거

소진광 / 한국자치학회장

- 지역개발은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해야하는 성격 때문에 지방자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발생한 개별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경쟁력 기반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상호작용관계를 고려하여 대처해야 한다.
-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해당 지역 모두가 역할을 분담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는 풍선효과가 사라진 세계화시대에서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이전기업을 수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책 사업을 충청권은 물론 주변지역 발전과 효과

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 충청권 개발 특별법은 단순히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충남북끼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리확보 수준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정부, 대전, 충남북의 역할을 정하는데 근거를 두어야 한다.
- 또한 특별법은 지역적 구조적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전 R&D특구 및 오송바이오밸리를 상호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신성장 공간축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특히 충청권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여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고보조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경제권 구축 사례

서정해 /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단장

- 경제산업부에서는 대구경북 공동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구경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중점지원하고, 대구경북의 산업단지의 연계 활성화를 꾀한다. 산학연 및 산업단지 연계의 효율화 및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통합 DB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금융분야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인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대구경북 MT산업 공동지원 및 협력 부문에

서는 첨단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강점형 IT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대구경북 CT산업 협력 기반 마련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협력 및 기반을 구축한다.

- 생활부문에서 살펴보면 도시 및 환경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통합 대구경북 종합계획 수립하고, 연접지역 자연자원 공동관리계획을 세운다. 대구·칠곡 도시발전 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공동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교통원 교통카드호환 및 공동환승할인제 시행하며, 대구공항을 활성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선 복선전철화 조기개통시키며, 지하철 1호선 종점연장과 대구선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공동수립 및 대구경북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구경북 관광DB 공동구축을 통하여 공동관광 홍보를 수행한다.
-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지역 균형발전 공동네트워크 설치, 낙동강 그린프로젝트(에코벨트) 추진, 도농상생교류 협력사업, 그린 BT 클러스터 구축,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료체계의 구축을 시행한다.
- 이러한 여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체계의 구축,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대구경북경제통합 연구단, 대구경북경제통합 포럼을 설치 운영한다.

주제발표 및 토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원광희 /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국제선 여객확충을 위한 아시아 특화 노선 개설, 외국LCC 거점공항화 추진, 청주를 홈베이스로 하는 공식여행사 선정 및 지원, 국제항공화물 수요확보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
- 국내여객 수요창출을 위해 청주를 홈베이스로 하는 LCC 육성 및 다양한 홍보전략 등을 강구해야 한다.
- 공항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항시설 용량 및 규모를 확충하고 동서 5축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청주공항 천안전철의 연결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행복도시-오송-청주공항-증평 간 경전철 건설, 특화단지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
- 이러한 전략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공동으로 제정하고, 적극적인 관문 공항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토론 및 답변

- 공항이용 가능권역 내 리무진 버스 운영, 천안 오송 고속도로 개설
- 공항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 확대
- 체계적 관광상품 개발(증원문화권, 백제문화권 등)
- 인천, 김포, 김해 공항과의 틈새시장 창출, 국제노선 확충 위한 협력 필요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필요
- 항공수요분석(여객, 화물)
- 운영주체의 지역 이전

충청권 통합경제 발전방안

강영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R&D)특구, 오송바이오밸리를 연계하는 거점 구축이 충청권 3개 시·도의 경제협력에서 핵심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 자치단체 간 과도한 개발 사업의 경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원부담 및 손실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초광역 클러스터의 구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 집적기반의 강화 ▲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 ▲ 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유치 ▲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 ▲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설정한다.

- 집적기반 강화를 위해 충남과 대전의 행복도시 인접 지역을 국제비즈니스타운과 생산시설을 복합한 복합산업집적지구로 조성, 연구개발 특구와 행복도시의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충남의 천안·아산과 충북의 청주·청원 지역을 의료복합단지과 생산시설이 집적한 의료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해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극복한다.

토론 및 답변

- 광역도시 간 행정통합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단계별 추진, 전후방효과 큰 사업으로 선택하여 사업 추진
- 한미FTA에 대한 공동대처
- 관광 패키지 개발 사업 추가
- 단계별 추진(지자체 주관사업-정부부처 공모사업 공동추진, 통합경제운영본부발족)
- 기업체에 대한 협력 수요 조사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

이재영 /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청권은 고속도로 및 철도의 결절지로 공동의 이해기반을 갖고 있고, 각종 개발, 지역교통계획의 종합성과 체계성 부족의 극복을 위해 교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 공동 과제로는 광역물류체계 구축, 광역교통 및 물류거점 간 연계성 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광역물류체계극복을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 육성과 충청권 중추항만의 육성, 육상물류중심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 육상물류활성화를 위해 유성구 봉산동에 15만평 규모의 물류센터설치 필요하다.
- 항만과 내륙 간 물류체계구축을 위해 국도29호선, 국도40호선 등 확충, 공주 청원 간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이 필요하다.
-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대전-행복도시-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를 확충하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구축(청주-신탄진-서대전역-논산), 호남고속철도 간이역 설치, 대전도시철도의 행복도시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해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

토론 및 답변

- 교통시설의 질적인 평가분석 필요
- 도로 교통망의 계획은 많으나 시간적 연계 안 됨
- 광역시설 환승거점은 기급적 도심 안에 설치
- 광역계획의 예산문제(행정협력보다 예산협력 중요)
- 세종시와 연결노선 고려
- 교통체계 수요분석 필요
- 교통협의체 구축



D a e j e o n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 • • •
대전소식

- 시정소식
- 시의회소식
- 구정소식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대전도시철도가 4월 17일 완전개통 됐다. 도시철도는 반석역에서 관암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를 40분으로 단축했다.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대전의 계획에 정부가 시기상조라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하나가 돼 대전도시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시공할 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시철도를 완공시켰습니다. 대전도시철도는 1m당 8,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동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섭씨 700도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일념으로 건설에 임했습니다. 이에 개통 이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발이 되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전도시철도가 되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의수 대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7일 대전지하철 1호선이 완전개통 됐다. 개통식이 열린 노은역 광장에 시민 1,500여 명이 모여 개통을 축하했다. 김의수 대전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하철 완전개통은 교통이용 약자인 노인과 아기 엄마들에게 더 환영받고 있다. 휠체어와 유모차를 끌고도 편리하게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대전도시철도 완전개통이 원도심과 둔산·노은 등 신도심 간 교류가 활발하게 하는 등 대전 균형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m당 8,000만원 소요 ... 시민 안전 위해 최선

대전시, 지하철1호선 기념공원 조성



시공 건설업체 자율참여 현수공원 조성

대전광역시역은 역사적인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기념해 유성구 외삼동 차량기지에 800㎡ 규

모의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대전시는 계룡건설 등 그 동안 지하철 건설에 참여했던 53개 업체와 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십시일반 참여해 7천만원의 사업비를 모아 이번 지하철 1호선 기념공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일 오후 2시 외삼동 차량기지 기념공원 조성부지에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참여업체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매실, 석류, 단감 등 유실수 교목 200주를 비롯한 관목 2,400주를 심는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도시철도 1호선 여유공간과 역사 주변 시민광장 조성지 20,000㎡의 부지에 오는 10월까지 교목, 관목, 초화류 등 30,858주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서는 대전교통의 기념비적역사인 지하철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건설참여자들의 공로를 기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해 1호선 건설 참여업체에서 5천만원 상당을, 시 지하철본부 직원들이 5백만원 상당을 출연해 순수한 현수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날 기념식수에서는 참가자의 다양한 표식과 표찰 등을 제작 설치해 기념공원조성 참여의 의미도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인근 시·군 협력사업 추진 시동

박성효 시장이 주창해온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행정시책 추진에 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권역내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나 지역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시책 등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우선, 대전시와 연접한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군, 보은군, 영동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등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공동추진정책을 발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박성효 시장은 우선 시급한 협력사업으로 ▲ 도로시설·대중교통수단 확충 ▲ 금융, 교육, 문화, 의료, 체육 등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 자연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구축 ▲ 상호협력에 의한 환경수준 제고 ▲ 우리 농산물 판매·알선 협력 ▲ 기업 공동유치 등을 예로 들며 조속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권역내 9개 시·군간의 통근·통학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1일평균 8만 여명에

이르고 고속도로 통행량은 4만6천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성호 시장은 최근 인근 시·군 주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이 행정구역의 공간범위를 넘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범위에 연연해 광역교통문제 등 모든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추진할 것을 누차 강조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근 시·군과 균형발전전략을 공동모색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상호협력 네트워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 편의에 중점을 둔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박차

대전광역시시는 관내 IT·S/W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시, 정보통신부, 첨단산업진흥재단(S/W사업단) 3자 협약을 거쳐 올해 추진할 대전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S/W산업 활성화 사업은 크게 ▲ 대전지역 S/W산업 규모 확대 ▲ 지역기업 경쟁력강화 ▲ 지원체제기반 정비

▲ 전문지원 기능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뉘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지역의 S/W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장 창출형 기술에 대한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특화된 기업지원 마케팅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의 제품 및 인지도 향상과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전 IT·S/W 분야 종사자 및 관련분야 학생 등의 IT전문가 육성, 기업의 제품 및 기술력, 신뢰도 향상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증취득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또, 지원체제 기반정비에 나서 1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IT관련 산학연관 휴먼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책제시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대덕IT포럼’, IT CEO 전략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대전IT산업에 대한 사업별 규모 및 현황, 시장동향 등을 정밀 분석해 IT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전략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준공하는 IT전용벤처타운이 성장단계에 있는 관내 IT기업에게 비즈니스 공간 제공은 물론 각종 사업화 지원으로 건실한 스타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SW·IT 기업이 423개로 1만1,568명이 종사하고 지난해 1조3,473억7,900만원의 매출을 거둔바 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참여하세요

대전시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대전시가 오는 2020년까지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나무심기 돌입과 함께 대대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 방법과 요령을 내놨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유형별로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를 통한 참여 ▲ 시·구에서 제공하는 식수장소에의 참여 ▲ 기관·단체·마을 등 자체 식수장소 확보 참여 ▲ 신규 녹지조성 후 시·구 기탁 참여 ▲ 푸른숲 조성지 책임지정·관리 참여 등 5개 참여유형과 시 전역에 358개소의 식재장소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우선,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를 통해서서는 개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성수 등을 헌수하거나 나무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구에서 제공하는 식수장소에의 참여는 시·구에서 마련한 기념식수 공원, 현수동산, 스승의 공원, 한밭수목원을 비롯한 시청 및 정부대전청사가 제공하는 부지에 직접 식재할 수 있으며, 시·구에 참여를 신청하고 식수장소 및 수종을 알선 받아 나무식재 기술지도를 거쳐 나무를 심고 관리할 수 있다.

기관·단체·마을 등 자체 식수장소 확보 참여는 업무시설지 주변, 학교내 및 진입도로변, 아파트단지내 담장주변, 기관사옥 진입로변, 단독주택 정원 등에 자율식재하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서 기술지도 등을 협조 받을 수 있다.

푸른숲 조성지 책임지정·관리 참여는 사회단체, 기관, 학교, 교회, 아파트 등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시·구에서 제공하는 1,000㎡ 이상 규모의 녹지를 알선 받아 나무심기, 가지치기, 비료주기, 고사목 제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등에 참여하면 된다.

박성호 시장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등 219개 시민단체에 나무심기 참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도시 숲 만들기에 불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소식

대전미래연구회 「지역경제인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대전미래연구회(회장 김재경·이하 대미연)는 2월 5일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인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 지역 경제 전반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회 지원문제, 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김재경 대미연 회장, 전병배 대전광

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 대미연 회원 의원들과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의회장, 구본탁 대덕밸리벤처연합회장, 배명렬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양희권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이 참석하여 첨단의료산업단지과 자기부상열차 등 대형 국책사업 대전유치 등 지역경제 현안들에 대한 지역경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의회장은 “제조업이 없는 지역경제 회생이 어렵다”며 “대전시의 정책 대부분이 첨단산업 위주이고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탁 대덕밸리벤처연합회장은 “더 이상 연구원과 교수들은 창업을 하려하지 않고 있다”며 “벤처캐피탈, 창업지원, 창업로드쇼 등을 통하여 대전이 서울보다 창업환경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배명렬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지역의 기업유치 시 대기업과의 연계성 및 과학과 예술을 통한 대전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양희권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은 중소기업청의 대전상승을 주장하면서 대전시의원들의 정책

추진시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밖에도 초청경제인들은 대전이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대전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지역의 수출기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함양에 모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문철 시의원은 “행복도시로 인한 대전시의 기회요인 발굴이 필요하고 경영안정기금, 창업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공격적이고 과감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건설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 방안과 조례제정 등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2산업단지 리모델링 용역결과 후 협동화 단지를 선정, 기계조합 유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경 회장을 비롯한 조신행 의원, 박희진 의원 등 대미연 회원 의원들은 경제 관련 협의체에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의회에 제안해주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2월 22일 (목)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한밭도서관과 향토사료관, 청소년수련마을과 한빛고·제일고등학교,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현장방문 활동이 주를 이룬다.

안전접수 현황으로는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5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시의회소식

- 비수도권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 수도권 규제완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설립취지 및 배경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전 국토면적의 1/9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어 이로 인해 교통, 환경, 부동산 투기 등 집적(集積)에 따른 불이익은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등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 분산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가 수도권 집중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공동 종합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공식 출범 기념촬영

창립총회 공동성명서 발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의회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회칙제정과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이진실 강원도 시·군의회협의회회장을 각각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출하여 광역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수도권 집중 움직임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동회장 선출에 이어, 부회장으로는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박성민 울산광역시구·군의회협의회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 공동회장은 "이번 협의회 발족은 국가균형발전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원진과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장선출과 회칙제정에 이어, 오늘 한자리에 모인 비수도권 지방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지방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마라!' 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김영관 신임 공동회장 포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대전광역시의회 김영관 의장은 회장추대 인사말과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 발전의 관계로 설정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방은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보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있는 대수도권의 수도권 집중의 논리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자료의 토대가 없다"며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비수도권 시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에 토대가 되는 정책적·법률적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의회소식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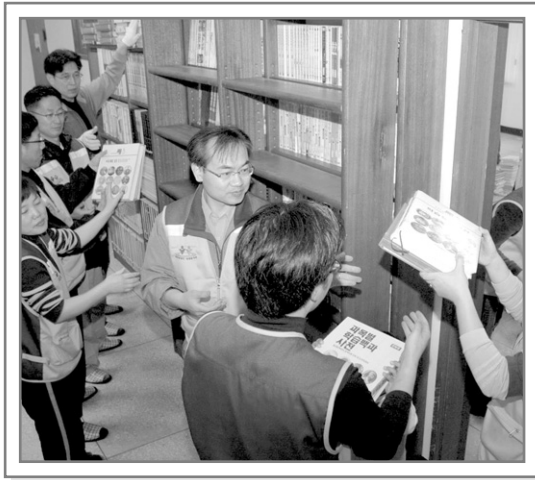
앞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연 2회의 정례회의와 시안발생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갖으며 '先 지방육성, 後 규제완화'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발족한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 ▲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건의 공조 ▲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활동할 것이다.

김영관 협의회 공동회장은 “오늘 발족한 협의회를 계기로 비수도권·수도권이 상생발전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아울러, 이날 참석한 비수도권 지방의회 의장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자원봉사활동 '훈훈'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성영제) 회원과 가족들이 3월 31일(토) 오전중에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인 후생학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훈훈한 情을 나눴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소재한 후생학원에서 바닥 장판 공사를 위해 독서실 책장을 모두 밖으로 옮겨놓고 실내 청소를 돕는 등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회원간 서로 돕고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이웃사랑운동 실천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연소 나이로 참여한 김태현(5세)군을 비롯해 박인호(7세)군, 송다은(7세)양, 이수

현(10세·샘머리초 3학년)양 등 의회 직원과 가족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다량의 도서 운반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이수현 어린이는 “학교를 갈 것인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됐지만, 엄마와 함께 일하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만나고 좋은 일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서관 책장 및 도서를 모두 옮기고 주변 청소가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여건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사랑의 PC 10대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말로는 누구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자고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간 우애도 다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찼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 성영제 회장은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 오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귀가했을 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전체의원 지하철 1호선 2단계구간 현장방문



대전 도시철도 완전 개통(2007.4.19)을 앞두고 대전광역시의회 전체의원들과 사무처 간부들은 오전 10시 지하철 1호선 2단계 구간(정부청사-반석역 10개역, 10.2km 구간)을 방문, 전동차 시승 및 역사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실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운영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갑천역으로 이동, 월드컵경기장까지 시승해본 후 구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역사내 공간과 편익시설 등 각종 시설을 꼼꼼히 점검한 의원들은 이어서 전동차로 반석역까지 이동한 후 버스로 외삼차량기지에 도착하여 시설부장의 안내를 받고, 시승소감 및 각종 역사시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150만 시민들이 기

시의회소식

다리던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완전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1996년 10월 착공 이후 10년 6개월의 대장

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무리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정소식

동구

동구, 국제교육센터 모델 확정

“대전시 동구가 사활을 걸고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국제교육센터 운영모델’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지난 2월 28일 국제교육센터 운영모델에 대한 4개월간의 학술연구 용역을 마치고 교육환경개선자문위원 등 지역 주민 200여명을 초청해 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구는 국제교육센터가 들어서는 가오동 559번지(3,967㎡)의 부지 매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6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개원하기에 앞서 구는 금년 말 건물 준공과 동시에 2개월 정도 학부모 및 학생들의 무료체험 등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 초 신학기에 맞춰 동구관내 초등학교 대상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제교육센터는 구가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 신축비 등은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된다.

건물 규모는 학습동, 체험동, 숙소동으로 총 3개의 건축물이 각각 독립하는 공간배치로 총

16개의 학습실과 12개의 체험실, 원어민 숙소 등으로 연건평 약 2,700㎡규모다.

여기에다 풋살 경기장을 마련해 원어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체육시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일일 체험 형태가 아닌 3개월 단위의 통학형으로 학습과 체험을 겸비한 실생활영어를 기본으로 교실 당 12명 기준으로 일일 3Time으로 주2회 1일 90분 수업으로 월 1,200여명이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강료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월 8만원 기준이며, 저소득 자녀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과 관련 매월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 성인프로그램, 관내 유치원 대상 유아프로그램, 고급영어 학습 엘리트 영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말프로그램과 방학캠프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 할 계획이며, 특히 방학기간을 이용해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하는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행사도 개발 운영한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이장우 구청장은 “동구국제교육센터는 전국 영어마을 중 수혜인원 비율이 가장 높고, 유아

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고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초기 단계로써 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중국어와 일본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활력 - Day(데이)’ 가동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유도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달 3월부터「재래시장 활력-Day」를 지정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재래시장 활력데이는 매주 수요일과 분기말 15일로 이를 위해 구는 시민과 시장상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재래시장 청소의 날, 장보

기 날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세부적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매 분기말 15일은 재래시장 청소의 날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시장 상인과 공무원 등이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서 생활쓰레기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깨끗하고 청결한 시장 환경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노점상 일제정비의 날로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설정해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서 원동 소방과출소와 합동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등의 단속에 나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시장내 가로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재래시장 장보기 날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새마을 부녀회가 함께 장도 보고 상인과의 담소도 나누는 자리 마련돼 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에는 구청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유도해 전 직원이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촉진 및 시장 활성화에 솔선수범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관계자와의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지정해 상인들과 전국 시장상인연합회 시장전문가, 시장경영지원센

터 교수들이 상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나누고 시장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구는 소식지에 전용 홍보코너를 마련해 특화된 시장이나 모범 토박이 업소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월 1회(매월 둘째주 수요일) 구매식당 휴무제를 실시해 주변 지역 식당의 이용을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건물 리모델링 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활력데이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생기 넘치는 시장분위기 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구, 직동문화마을 조성 ‘첫삽’

“전국 광역시 최초로 동구 직동 마을에 자연 환경과 전통이 어우러진 친환경 문화마을이 본격 조성된다”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직동마을에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갖고 첫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동구청장, 송석락 동구의회의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총 28억 5천9백만 원이 투입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직동676번지 일원에 부지 8,869㎡(2,683평)에 건축 연면적 1,243㎡(376평)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선다.

주요 시설로는 △복지회관 및 건강관리실(365㎡)△마을노인정(99㎡)△마을공동작업장(350㎡)△농기계보관창고(200㎡)△농산물전시판매장(199㎡)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안길 확·포장 △마을주차장(2,000㎡)△이벤트광장 및 연못조성 △체육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도 갖춰 주민의 생활휴식 공간과 함께 도시민들이 항상 찾고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한편 이날 이장우 동구청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최고의 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요일엔 중구 오면 너무 재밌어요”

“토요일에 중구에 오면 볼거리 먹거리에 쇼핑 등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면 개통과 더불어 중구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등 원도심 중심가가 들쭉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설무대에서 각종 공연이 열린다. 경쾌한 록음악에 기타와 드럼,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가 울려 퍼지면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진다. 오다가다 공연을 보는 시민들도 흥이 절로 난다.

중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거리를 꿈꾸고 있는 대흥동은 서울의 대학로처럼 활기가 솟아난다. 앞으로 청소년층은물론 중장년층을 위한 7080 노래 등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연중 계속된다.

풍부한 문화인프라를 지닌 중구는 교통의 편리함과 함께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할 전망이다. 주말 가족과 함께 오전엔 뿌리공원, 대전동물원을 둘러본 다음 오후에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상가에서 쇼핑한 후 음식특화거리에서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면 어떨까?. 화랑과 거리에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유혹하고 아이들은 페

이스페인팅의 재미에 푹 빠져 주5일제 문화인 다운 웰빙의 참 맛을 즐길 수 있다.

이태호 대흥동 문화예술번영회장은 “상인들도 합심하여 할인권과 무료쿠폰을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권 중구청장은 “우리도 문화예술의 거리를 뉴욕이나 파리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대전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토요어울마당)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경쾌한 음악과 가수들의 열창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열려 대전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우리동네 명소〉 선화동 천일이용원

그 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 이발소에서 뜨끈한 수건을 얼굴에 덮은 후, 솔로 흔들어 만든 거품에 날렵한 면도날로 면도를 받으며 추억에 잠겨보는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이발소가 아직도 있다.

선화동 충훈탑 옆 골목길의 천일이용원 이발소 주인은 올해 62세의 해방동이 하태준사장으로 동네 통장(선화동 19통)까지 겸하고 있다. 이발소에는 10여 년 전에 전기카터기가 나오며 사실상 사라진 바리깡과 조로(물뿌리개) 조롱박 모양의 헤어드라이어 등이 그대로 있다.

하사장은 원래 고향이 논산군 두마면 왕대리(현 계룡시)로 70년에 군을 제대하고 대전에서 이발소 종업원으로 직장을 정하면서 중구에 정착했다. 78년부터 80년까지 중구청 앞에서 운하이용원을 운영하다가 80년에 바로 선화동 천일이용원 이 자리로 이사해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발업의 전성기는 80년대로 당시에는 종일 돌이서 꼬박 일할 정도로 수입이 짝짤했다. 여중생과 여고생들이 이발소에 와서 단발머리를 자를 정도였다.

그러던 게 시대가 바뀌어 남자들이 이용실로 가는 시대가 됐다고 하사장은 한탄한다. 한 때는 이 동네부근에만 이발소가 4곳이나 되었

는데 이제는 천일이용원 하나만 남았다.

천일이용원의 단골손님으로는 20년이 넘는 김보성 전 대전시장과 15년의 김성기 전 중구청장, 그리고 이은권 중구청장 등 300여명의 고객이 있다고 자랑한다.

하사장은 이발업 하나로 두 딸을 출가시키고, 오는 5월5일 경복궁웨딩홀에서 아들 하진수 씨의 결혼식을 단골고객인 김보성 전 대전시장의 주례로 올린다.

손님이 예전만 못해도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같은 동네에 사는 종업원 정기영씨(51)는 하사장과 17년 째 같이 일하고 있어 형제처럼 닮아 있다. 일이 끝나거나 비번인 날 이발소는 바로 동네 사랑방이 되어 조출한 술자리도 종종 열려 사람 사는 정취가 물씬 난다.



중구의 우리동네 명소 천일이용원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에 화랑 잇 따라 개관 <갤러리 오픈 스페이스>

문화예술의 명소를 지향하는 대흥동에 화랑이 잇따라 개관되어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관한 갤러리 오픈스페이스(관장 김영기)와 최근 이전 개관한 현대갤러리(관장 김경숙)가 활발한 기획공연을 갖고 있어 미술인들의 사기가 높다.

대흥동에서 제일문구. 화방을 운영하는 김영기 관장은 화방 운영 37년만에 갤러리 오픈스페이스(열린 공간)를 개관하고 첫 기획으로 지역 중견작가들의 작품 38점을 '한밤의 주제 2007'이라는 주제로 연데 이어 4월11일에는 제9회 여류작가회 전시회를 열어줬다. 김영기 관장은 11일 이은권 중구청장이 참석한 개막전 인사에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중구청장의 말씀에 상당한 용기를 얻었다"며 "경제논리를 떠나 문화예술의 도시 조성에 열정적으로 일조하겠다"고 토로했다. 갤러리 오픈 스페이스는 2층에 전시실을 운영하는 하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미술강좌도 기획하고 있다.

85년 대전여중 옆에서 개관한 현대갤러리는 얼마 전 대흥동 465-2번지에 단독 4층 건물을 구입하여 새롭게 이전 개원했다. 건물 1층과

2층은 전시실로 쓰고 3층 53평엔 휴식공간을 두어 명절을 제외한 공휴일까지 사랑방으로 오픈한다. 이 휴식공간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무인 판매대를 두고 커피(200원)나 스낵등을 비치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케 할 예정이다. 현대갤러리에서는 이로미, 김성석, 김숙영 초대작가전을 연 데 이어 4월에는 김시현 개인전, 한국미술 내일의 주역전, 민족 혼을 깨우는 대한민국 구술 공예대전이 잇따라 열린다. 5월에는 한솔전, 이종필개인전에 이어 5월24일부터 30일 까지 한국, 러시아, 일본 3개국 화가들의 삼국삼색전이 열린다. 김영숙 현대갤러리 관장은 "희생정신이 없으면 화랑을 운영 못한다"며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 한 문화예술의 거리는 훗날 후손들에게 멋지게 전수될 것이다.

최근 개관한 오픈 스페이스 화방과 현대갤러리



주민참여 대학 서람이 자치대학 5월 18일 개강

서구가 지난 2003년 거대 모범자치구 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교양과 지식습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람이 자치대학이 5월18일 개강한다.

명망이 높은 유명강사진의 출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람이 자치대학은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2시간 동안 오는 8월31일까지 모두 16차례 열린다.

폭넓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 분야별로 국내최고의 강사진을 초빙 수준 높은 강의로 구민들의 의식 및 문화수준을 높이고 있는 서람이 자치대학은 매년 청강인원이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2003년 첫 개강이후 출강한 강사진의 면모를 살펴보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유명 방송인 이숙영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홍혜걸 씨가 강의 펼치기도 했다.

또한 에베레스트 등반 성공으로 널리 알려진 허영호씨 등 많은 유명강사진들이 서람이 자치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서구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길을 안내하기도 했다.

서람이 자치대학이 많은 구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같은 유명강사진들의 강의 외에도 강의마다 강사와 강의 주제를 달리해 수강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 의식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 등 자기 개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도록 시의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명망이 높은 강사를 초빙해 차별화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구는 올해도 이같은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성을 맞춰가면서 유명강사진을 통해 유익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서람이자치대학에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인터넷 서구청 홈페이지나 서구청 행정지원과(611-6142)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서구, 행정서비스현장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평가에서 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게돼 행정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상 자치구임이 입증됐다. 이번 운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중앙부처, 각 시·도 자치단체, 기초단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행정서비스 현장의 이행실태 확인과 고객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기관장의 관심도, 이행기준, 인지도 등 8개 분야를 중점 평가 했으며 고객만족도는 전화설문으로 평가했다.



서구가 국민 정보화교육을 비롯해 사람이자치대학등 주민참여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행정서비스현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구는 각 실과 마다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현장을 제정 실천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매년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서비스현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정기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별 워크숍 실시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행정서비스현장마크를 인증받게 됐다.

행정서비스현장마크는 행정서비스 개선 결과 자연과 조화를 이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둔산도서관 6월1일 개관한다



건물 신축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1일 개관을 기다리는 둔산도서관 전경

둔산지역의 새로운 정보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둔산도서관이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1일 개관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9월30일 기공식을 가진 둔산도서관은 이미 건축물이 거의 완공된 상태며 다음달 중으로 도서 및 비품을 들여 놓은 뒤 6월1일 정식 문을 열게 된다.

둔산도서관은 약 1,000여㎡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독서를 위한 열람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방까지 갖추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둔산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둔산도서관 지하1층은 주차장과 서고, 기계실이 지상 1층은 어린이 자료실을 비롯해 전시

실, 이야기방, 북카페와 영유아 방을 갖춰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게 해준다.

지상 2층은 신문이나 월간지 등 각종 최신 자료를 구비한 종합자료실과 그룹스터디실, 사무실, 전산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3층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과 휴게실, 시청각실이 들어선다.

국제결혼 이주자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서구는 오는 5월13일 한국체류기간이 짧은 신규이주자를 대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한국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한국문화체험교실은 구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회에 이어 한국문화이해를 위해 비빔밥이나 떡 만들기과 새끼꼬기등 짬뽕공예 체험, 한복 입고 절하는 법 및 한국전통악기 다루는 법과 함께 지역업체 둘러보기 등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선착순으로 35명에 한해 신청을 받는 이번 한국문화체험교실의 참여를 원하는 국제결혼 이주자는 해당 동사무소나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청 기획감사실(611-6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서구, 공직자 한마음 꽃동산 조성

지난 4월3일 오전10시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서구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의 봄 조성을 위해 샘머리근린공원내 꽃동산 4곳을 조성하고 배롱나무 60 그루를 심어 표찰을 부착하는 등 공직자 한마음 꽃동산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서구인터넷방송국 내용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서구인터넷방송국이 개국 2주년을 맞아 동영상 내용이 풍부해지고 일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자체 제작 등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구정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구정브리핑을 비롯해 서구민의 참여형 강좌인 서람이 자치대학 등을 녹화 중계하는 등 발 빠

르고 현장감 있는 방송구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구인터넷방송국의 콘텐츠는 크게 다섯가지, 서구의 오늘을 비롯해 서구의 이모저모, 페스티벌서구, 배움마당, 참여마당이다.

서구의 오늘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식과 서구의회 소식 그리고 때때로 이슈가 되는 구정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구정브리핑 등 서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전해준다.

서구의 이모저모는 참여서구와 웰컴투 서구, 서구 동영상 홍보, 여행정보 등 서구의 특색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페스티벌 서구에서는 축제를 비롯해 공연이나 문화와 같은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 준다.

웰빙 열풍과 함께 높아진 생활상식에 대한 구민들의 열기를 채워주기 위한 배움마당에서는 서람이 자치대학이나 중국어 강좌, 요리 등 다양한 강좌를 보여준다.

서구인터넷방송국 SBN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접속주소(<http://study.seogu.go.kr>)로 접속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을 클릭해서 보면 된다.

구민건강 10리길 걷기 5월20일 열려

서구를 사랑하고 건강한 웃음과 행운이 함께하는 제6회 구민건강 10리길 걷기 대회가 5월20일 오전8시 20분부터 남산공원에서 감천고수부지 4km 구간에서 열린다.

남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을 출발해 삼천교 하상도로 한밭대교 둔산대교 엑스포 다리 밑 산책로를 거쳐 KBS 뒤편 갑천변 잔디광장에 이르는 4km 구간까지 걸게 되는 이번 걷기 대회는 신체건강한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5월19일까지 인터넷 서구청 홈페이지나 전화(611-6496)나 팩스(611-6139)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주어진다.

이날 행사는 서구사랑 서포터즈의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 네일아트, 풍선아트 등으로 참여자들에게 행사분위기를 알린 뒤 선반 풍물놀이단의 식전공연과 파워에어로빅 시범이 펼쳐진다.

이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이트댄스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식전 행사에 이어 남산공원 축구장을 출발 천변 산책로를 거쳐 갑천변에 이르는 4km 10리 길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따사로운 5월의 햇살 속에서 유등천과 갑천변을 걷는 이번 10리길 걷기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간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건강도 챙기고 참가자간 정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는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참가자간 정도 나눌수 있는 자리다.



유성구 「공공혁신 전국대회」 대상 수상



유성구가 한국 공공 자치 연구원이 1월 19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주관한 제7회 공공 혁신 전국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공공 기관과 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혁신 사례를 발굴기 위해 2000년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공 혁신 전국대회는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대회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2분야로 나누어져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자치단체 분야의 경우 행정혁신, 재정운영, 행정 서비스, 교육문화 등 10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항목은 타당성, 노력성, 효과성, 창의성, 만족도 등이었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 유성구가 수상한 부문은 「재정운영 부문」이었는데 모바일 banking 등을 활용해 체납처분 예고 전송 시스템을 통한 혁신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번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한글 메일머지를 이용해 체납처분 예고 통지서를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저액 체납자들에게도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으며, 모든 체납자에게 직원 1인이 단 하루 만에 체납예고가 가능토록 하여 인력과 시간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였고, 기존의 체납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이 만든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체납자 징수진수와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81%나 증가 했으며, 담당 인력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수상 소감에서 진동규 구청장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한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며 “혁신사례가 구정에 접목되어 선진 자치기반 조성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은동 분동 됐다

노은2동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은2동은 2월 5일 진동규 구청장, 임재인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노은동은 대단위 택



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3월 분동 기준인 인구 5만 명을 넘어 7월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분동경계선을 확정했다. 이어 구는 지난해 9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분동의 당위성을 행자부에 신청하여 10월 2일 노은1동, 노은2동의 분동 승인을 받아 올 1월 5일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분동작업에 착수한지 약 1년여 만에 노은2동이 개소하게 됐다. 노은 1동은 갑동, 공동, 죽1통, 장대동과 지족동 일부, 노은동, 하기동 일부지역으로 35통 194개 반의 행정구역과 인구 7,467세대 21,993명으로 구성됐고 사무실은 지난 2003년 2월 1일 개소한 노은동 546번지의 현청사 1층을 사용하며 2층은 신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노

은2동사무소 임시청사로 사용된다. 열매마을 6단지과 상지초등학교 간선도로를 경계로 분동된 노은2동은 인구 13,162세대 41,183명으로 하기동 일부, 지족동, 반석동, 수남동, 안산동, 외삼동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행정구역은 64통 380개 반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분동준비단을 구성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등록 행정구역 변경 작업등 전산프로그램의 전환 작업을 비롯한 140여종에 이르는 각종 공부정리 등 개청준비를 서둘러 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진동규 구청장은 “그동안 노은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분동이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성구 '지방재정운영' 빛났다



유성구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2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지난해 행정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5개 단체별(광역시·도·시·군·구)로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6개 부문 30여개 지표에 걸친 전반적인 지방재정 운영상황 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에 선정돼 행정자부 장관 표창과 함께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유성구는 지방세 체납징수율과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에서 자치구 부문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지방세수 안정도에서도 3위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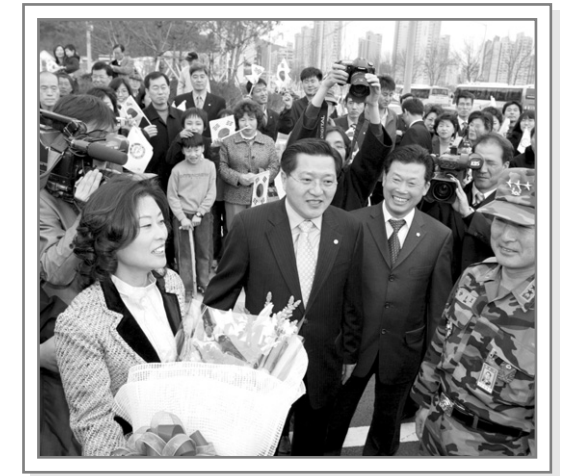
히 구는 소수의 인원으로 전 체납자를 독려할 수 있는 효율적 체납징수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정리에 혁신으로 기여한 점이 돋보였다. 이번 재정분석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분석 실시단이 전국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광역단체는 3등급, 기초단체는 5등급(A-E)으로 나눠 서면과 현지 실사를 병행해 실했다.

군수사령부 유성시대

육군군수사령부(사령관 양원모)가 2월 22일 47년간의 부산시대를 마감하고 대전 유성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수사령부는 지난 60년 1월 부산에 등지를 틀고 역사를 이어오다가 7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14일부터 유성구 반석동으로 이전을 시작해 22일 본대 도착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반석동으로 이전해 오는 군수사령부를 위해 22일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진동규 구청장은 “유성은 발전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말하고 “바로 오늘 육군 군수사령부가 유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유성은 명실상부한 국방의 도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진동규 청장은 또 “이렇게 유성이 국방의 도시의 면모를 갖

추고 있는 만큼 현재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국방대학교 유성 자운대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리 지역주민이 더욱 친절한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유성구는 앞으로 새로 전입한 주민들과의 화합과 친선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및 행정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추목동 칠성대 아파트 8단지 관리사무소에 설치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이전 장병과 종사자들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의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도왔다. 이날 행사가 끝나고 진동규 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육군 군수사령부의 유성구 이전을 25만 유성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편안하게 대전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 청장은 또 “유성구는 군수사령부가 이전함에 따라 1만여 명의 인구유입과 4백여 개의 관련조달업체가 전입하게 되어 연간 8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이전한 군수사령부는 880여 억원을 들여 구 교육사령부터 23만평에 본관과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일부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2006년 12월 공사를 마쳤고 2007년부터

이전에 들어가 최근까지 이전이 진행됐다. 시설로는 본청 1동, 분청 1동 등 총 52개 동이다.



유성, 도시철도 시대 열리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정부청사-반석)이 완공됨으로써 역사적인 도시철도 유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96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 2006년 3월 판암에서 정부청사역까지 1단계 구간이 완공되어 부분 운영 되다가 4월 17일 총연장 22.6km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이번 2단계(10.2km) 구간에 설치된 총 9개의 역 중 7개의 역이 유성에 위치함으로써 2단계 구간은 사실상 유성 도시철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유성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7일 10시 30분 노은역 광장에서

개최된 개통식 행사에는 박성호 대전시장과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및 유성구민 2,000여명이 모여 대전도시철도의 유성 개통을 축하했다. 개통식에서 박성호 대전시장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참고 인내해준 유성구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1호선 완전개통이 유성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통식이 끝나고 이어진 시승식에서는 행사참석 인사들이 일반시민들과 노은역에서 유성온천역 까지 함께 환승하면서 도시철도 유성 개통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시승식에 동승한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1호선 완전 개통을 계기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관광유성의 경기가 살아나고 더욱 활기찬 유성이 기대된다”며, “유성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명물테마거리 조성 등 불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많은 계획이 실행 중에 있는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 및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하였다. 지난해 1호선 1단계 개통이 원도심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이번 2단계 개통은 각 부문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석에서 판암 까지 그동안 1시간 20분 걸리던 시간이 이제 40분으로 단축 되었고, 1단계 하루 3만 5천명 이용에서 완전 개통 이후 최대 9만명까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성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더욱 살기 좋은 유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무질서한 주차난 완전히 해소된다!

대전에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인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맞은편의 한발대로 주차난을 금년 중으로 완전히 해소 시킬 전망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3월 10일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문 앞 폭 5.8m, 길이 375m의 상가 지역 앞 보도를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2m를 축소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40면의 하역주차 및 이용고객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보도를 축소하여 하역주차구간을 조성하는 방식은 주민의 보행권과 상충되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변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대전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차시책을 추진하게 된 대덕구는 대부분 상가 및 특화거리 간선도로는 대중교통 통행이 빈번하여 행정기관의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인 반면, 주차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불법주차는 만연하고 높은 지가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렵고 노상주차구획(시

간제주차노선) 설치하는 불가능하여 구상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구 관계자는 “농수산물시장 맞은편 상가의 주요업종은 대형 정육점, 그릇도매점, 대형 급식 재료 도매상 등이 입점하고 있어 이용고객들이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다량의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은 노상 주차가 가장 편리하기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구상한 시책이다”라고 하면서, “금년도 사업의 결과에 주민만족도가 높으면 2008년도에는 중리동 가구특화거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업성공에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는 별도로 18억여원을 들여 오정동 상가 주변의 노외 공영주차장 사업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상점가의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서기는 대덕구의 주차시책을 심도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에서 임산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범사회적 보호를 위해 첫 삽을 뜬다.

대덕구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자치단

체 차원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임산부 편의 증진사업”의 기본 계획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600여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 구는 우선 이들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행정 분야 : ▲ 임산부의 권익보장 및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차량 10부제 해제 ▲ 민원 전용 창구 개설 및 택배제 등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실내 수유실 설치 ▲ 병원, 운송업체, NGO, 기업 등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며,

◎ 건강관리분야 : ▲ 산전 필수검진항목 중 일부 검진비(산전검사, 막달검사) 지원 ▲ 기초생활 수급권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교육관리분야 : ▲ 임신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출산 육아 교육 시스템 마련 ▲ 보모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이수제를 통하여 적격의 보모양산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이다,

◎ 사회적 붐 조성분야 : ▲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자생조직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대중교통의 임산부석 마련, 요식업소 임산부 편의석 마련 유도, 일반기업체

의 임산부 지원 및 배려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편의 증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임산부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풍토조성 및 구 차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나아가 출산률 증가 인구유입 등을 위해 오는 3월 14일 오후2시 대덕문예회관에서 임산부를 초청하여 4개 시민 단체 관계자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참여연대 사회 인권팀장 백경원이 법률 등 제도적 측면 재정지원방안, YWCA 인력개발소장 유덕순씨가 임산부 관리 시스템,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조윤미씨가 편의증진 사업부문, 대전여민회 정책기획국장 민양운씨가 사회적 배려문화 정착방안의 테마를 발표하게 된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금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되는 사안들을 종합하여 공청회 등 학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으로 입안하는 한편,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번 사안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중앙부처와 대전광역시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4월16일 오후 대덕구청소년수련관에서 공무원, 구 의회의원, 주민자치위원,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교육학 박사) 최운실 교수를 초빙, 평생학습 워크숍을 가졌다.

“대덕구 평생학습도시를 여는 사람들의 비전과 역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평생학습의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필요한 공직자 역할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방향 제시 등 시중 의미 있고 열띤 강의로 교육 참석자들로 하여금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평생교육 사회조성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였다. 특히 타구에 비해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기반여건이 미약한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통

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데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구는 주민 개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사회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향상 등 궁극적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람이 모이고 잘사는 대덕 건설”을 목표로 수년 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민선4기 출범 후인 2006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구는 금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전담조직 신설,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1일 동부교육청과 첫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4월10일에는 지역 언론사인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와 대덕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그 외에도 지역 교육기관 및 관내기업체와도 상반기 중 차례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구 관계자와 관내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과의 별도의 모임을 갖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대덕구평생학습추진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내 학습기관의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모든 주민들이 쉽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실무자협의회가 대덕구평생학습인프라 초기 구축의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금번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의 이해와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고 우리의 미래는 평생교육사회가 조성되었을 때 나 자신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신했다”고 말해 금번 행사가 성공적이었음을 내비쳤다.

대덕구 브랜드슬로건 “해피투게더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미지 경쟁시대인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구의 경쟁력 강화와 대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모와 3차례에 걸친 심사,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해피 투게더 대덕구」로 브랜드 슬로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또 디자인 선정에 따른 2차례에 걸친 용역 보고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 및 선호도 결과를 토대로 기본디자인 4종, 응용디자인 41종을 최종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디자인은 도심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대덕구를 형성화하여 미래의 비전과 힘찬 도약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하늘과 태양, 구름, 자연, 도시 모티브를 통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대덕구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또 디자인의 파란색은 대청호의 맑은 물과 희망찬 미래를, 녹색은 계족산의 푸른 숲과 자연의 쾌적함을, 주황색은 희망차게 떠오르는 해와 인정이 넘치는 구민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며 살기 좋은 삶의 공간 대덕구를 의미 한다.

정용기 구청장은 브랜드슬로건 개발 방향이 경제산업도시와 복합문화도시를 접목한 새로운 산업문화도시로서의 바람직한 위상 확립인 만큼 활용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22만 대덕구민이 삶의 최고 가치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표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에 개발된 브랜드슬로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 홈페이지 게재와 본청 및 각동, 유관기관, 단체 등에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형



국문형



영문형



한문형

연구원소식

행정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대전과 충남의 만남 행사 주제발표

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대전과 충남의 만남' 행사에서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대전과 충남간 공동발전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은 함께 발전하기 위해 꼭 닫혀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대학간, 기업간, NGO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 원장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공간 재편성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공동구축 ▲광역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특화 ▲청주공항 활성화 공동 추진 ▲충청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공동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과제로 ▲민(民)·관(官)·산(産)·학(學)·언(言) 5각 구조의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체제 구축 ▲수도권에 대응한 공동체 형성 ▲충청권 공동 투자에 의한 시범지구 지정 ▲충청권 경제협의회 구성 및 중앙정부 지원 ▲행정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각종 행정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을 들었다.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류협약 체결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은 2월8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및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수희)과 충청권 지역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협

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3월 23일 오전 충남대 총장실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이양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전수받았다. 이 자리에서 육 원장은 "개인적으

로 영예스럽다. 하지만 성과를 보면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 이양에 일익 담당할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과 함께 부담 역시 크다. 지방자치가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지방이양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청권 공동발전전략 세미나 기조강연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수희)으로 구성된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은 4월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문제, 제도적 장치나 협력기구의 문제, 행위자들의 의지와 능력, 가치관의 문제, 자원수준과 문화, 이기주의 극복문제 등이 성공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등을 공동대처해 나가는 대전·충남은 물론 경기, 전북과 함께 이 기회를 통해 닫혀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대학간, 기업간, NGO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각 지역권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이어 "대전시의 경우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북과 협력을 통해 자금, 인력, 기술 등을 교류해야 하며 특구 개발의 파급효과가 대전을 넘어 충남·북까지 극

대화되도록 준비단계부터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충남의 백제권·내포문화권 개발을 비롯한 4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역시 대전과 협조해 나갈 때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행정혁신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5월 17일 한국공공행정학회와 충북행정학회, 대전시기초의회회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정혁신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육 원장은 "지방분권과 주민복지 향상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방의회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국가도 바로 서게 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며 지방의원들의 분발과 지역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 원장은 이어 "이제부터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행정혁신시대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도 대전충청권 중·고등학교 사회과교사 동계 경제연수 실시

대전경제교육센터(센터장 김기희 책임연구원)에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

간 대전·충청권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한국통신 인재개발원에서 경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직무연수는 사회과 교사들에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경제동향 및 경제교육 방법론 등의 교육을 통해 교사 경제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육방법 개선의 토대 제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재정지원으로 지난 2006년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전경제교육센터에서는 2007년도에 교사 직무연수 이외에도 청소년, 주부·여성 등 일반시민, 시민단체,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전한 시장경제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충청권 경제경시대회 개최 및 학교발전기금 기탁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학교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대전발전연구원 등 4개 광역권 지역발전연구원이 후원하여 지난 2007년 1월 20일에 '전국교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제교육센터(센터장 김기희 책임연구원)는 대전충청권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경시결과 공주소대부설고등학교에 권역별 단체상인 대전발전연구원장상과 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타당성 착수

도시·교통연구부(이범규 책임연구원)에서는 2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타당성 분석」에 착수하였다. 본 타당성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성에 따른 효과,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선호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며,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전용지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타당성 분석은 중간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완료예정이다.

대전가족공동체 실천을 위한 세미나 : "이제는 가족입니다" 개최



여성정책연구부는 지난 3월, 대전광역시청 가족을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담론을 이끌어 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월 5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가족공동체 실천을 위한 세미나: "이제는 가족입니다"는 대

전기족공동체 사업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덕 신탄진 프로젝트 연구관련 개발구상 연구 「중간보고」 개최

도시·교통연구부에서는 2007년 3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덕 신탄진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서·평촌·석봉동 일대 2,862,660㎡에 대규모 주거단지, 생태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월 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서를 작성하여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끝내고, 2008년말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단계별로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가족공동체포럼 준비모임 개최

여성정책연구부는 지난 4월 3일, 대전광역시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발전연구원원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장, 공무원들과 함께 2007 대전가족공동체 포럼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지고, 올 한 해 7회 개최될 포럼의 주제와 방향 및 참석 범위 등 포럼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 개최

도시·교통연구부에서는 2007년 4월 9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개최하였다. 보고는 연구책임자인 김홍태 도시·교통연구부장의 설명 후,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각 실과장 외 50여명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주요 이슈는 신탄진 프로젝트의 주거용지 인근으로 녹지축 배치, 행정타운에 고등학교 배치를 통한 행정+교육+주거공간으로 조성, 3대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건설 문제 등을 현안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준공

도시·교통연구부에서는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2005년 6월 29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탁 받아 약 2년에 걸쳐 용역을 수행하여 2007년 4월 16일 준공하였다.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전역세 권은 한국토지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서 한국철도공사 협조를 이끌어 새로운 모습의 역세권으로 정비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단위 평가사업 참가

산업경제연구부의 김기희 책임연구원은 지난 4월 16일에서 19일까지 3박 4일간 한국산업기술평기원과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역단위 평가사업에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16개 시·도의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수행사업의 연계성 극대화 및 중복성 배제 등 사업의 경제성 성과 창출도모를 위하여 매년 실시된다.

충청권 공동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8일 대전발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간 체결된 학술·연구교류 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4월 19일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공동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대전광역시청 및 시의회위원장,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및 3개 시도관계관, 3개 시도연구원 원장

및 연구원, 기타 지역내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명 교수(한남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권공동발전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충청권특별법 제정”(소진광 한국자치학회), “통합경제권 사례 발표”(서정해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단장)의 기초강연이 있었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연구위원), “충청권 통합경제발전방안”(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방안”(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개최

여성정책연구부는 지난 5월 1일 대전광역시청 20층에서 조찬 형식을 빌어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관련공무원과 시의원, 학계 전문가와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전시 가족의 현황과 포럼의 방향에 대한 논의 및 대전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족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대전시 가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사업 예산의 확대 및 사회단체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제도적 제한 사항 등도 논의되었다. 또한 여성정책연구부는 포럼 참가자들에게 첫 포럼의 평가서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의 평가를 다음 포럼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